

2020 인권 모니터링 용역 보고서

2020 인권모니터링 연구보고서

2020 인권모니터링 연구보고서

2020년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2020 인권
모니터링』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12.

연 구 기 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 정 영 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 동 연 구 자 : 설 재 영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II. 연구내용 및 방법	4
1. 연구내용	4
2. 연구방법	8
제2장 문헌검토	9
I. 인권과 학생인권	9
II. 학생인권조례	12
1.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12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17

제3장 학생인권 모니터링	26
I.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26
1.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26
2. 월별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28
II.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분석	40
1. 학생인권 언론보도기사 분석 절차	40
2. 언론보도 기사 학생인권 모니터링 분석	41
3. 언론보도 기사 학생인권 모니터링 키워드 분석	44
제4장 연구결과 및 제언	67
I. 연구결과	67
II. 연구제언	70
참고문헌	73
부록 - 월별 모니터링 활동일지	75

표 목 차

<표-1> 언론보도 인권 모니터링 범위	4
<표-2> 인권모니터링 내용	6
<표-3> 학생인권 모니터링 수행절차	8
<표-4>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내용	16
<표-5> 학생인권 모니터링 분석절차	40
<표-6> 월별 모니터링 기사 및 방송	41
<표-7> 월별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분석표	42
<표-8> 5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44
<표-9> 6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47
<표-10> 7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50
<표-11> 8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53
<표-12> 9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57
<표-13> 10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60
<표-14> 11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64

제1장 서론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은 2013년 7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여 201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학생인권이 보호되는 문화를 조성하며 인권우호적인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학생인권의 확립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권리의 보장이 실질적 권리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어떻게 학생인권 향상을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학생인권 조례제정 이후 전라북도는 2014년부터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하여 전라북도 소재의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2017년 전라북도 소재 767개의 모든 학교가 기본인권, 성인권, 장애인인권, 노동인권 등의 학생 인권교육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학생인권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 2019년 인권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학생인권 향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 실태조사는 인권교육에 관련한 모니터링 활동으로 인권교육 실시여부와 효과성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전라북도 내 인권침해 및 향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전라북도 및 타시도에서 학생인권의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언론보도 자료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학생 인권침해 및 침해 가능성(위험요소)을 확인하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새로운 인권정책이나 제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 모니터링 사업은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제34조에 관련근거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인권침해 및 침해가능성의 사례를 발견 및 분석하여 인권 침해 위험요소의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학생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4조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조례 제34조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 결과의 연례 보고서는 매년 2월까지 작성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권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언론보도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인권조례에 제시된 다양한 학생인권 활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권침해 환경 개선, 인권정책의 방향 및 인권향상의 사례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신장하는 노력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지 7년이 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학생인권의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인권 정책을 수립해갈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의 학교 및 사회에서의 문화적 가치와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학생인권 영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 장애학생의 관심과 보호 증대,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하위집단의 출현,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 SNS를 통한 사회적 소통의 일반화 등은 학생인권보장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입시위주 학교운영이나 실적관리는 해외 다른 국가들의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학생인권 쟁점들과 차별되는 쟁점들을 창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또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구제를 넘어 적극적으로 인권보장과 실현을 추구하는 인권 행정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생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하고 이의 긍정적 사례의 확장 및 인권침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 발굴 및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유도 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홍보를 통하여 인권 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의 예방적 활동 및 침해 유형을 파악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정책과 제도 홍보 및 실효성 있는 이행 유도
-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인권모니터링 범위

본 연구에서 인권모니터링 활동의 범위를 전라북도 내 언론보도 및 방송 기사를 중심으로 하며, 타시도 학생인권 이슈와 유사사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 언론보도 기사를 추가 분석하였다. 이에 전라북도 내 언론보도는 전북일보 외 14개 신문사와 KBS 전주 외 3개 방송사, 타시도 사례 분석은 한겨레 외 7개 언론사로 총 24개의 신문사와 방송홈페이지를 활용하였다. 이외 다양한 학생인권 보장 및 침해사례 분석을 위해 기타 방송도 참고하였다. 또한 학생인권 관련 보도 기사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신문사와 방송 홈페이지에서 신문기사 원문을 수집하여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한 인권모니터링 언론보도의 범위는 아래의<표-1>과 같다.

<표-1> 언론보도 인권 모니터링 범위

연번	전라북도 신문사	주소	비고
1	전북일보	www.jjan.kr/	
2	전북도민일보	www.domin.co.kr/	
3	전북중앙신문	www.jjn.co.kr/	
4	전북연합신문	www.jbyonhap.com/	
5	새전북신문	www.sjbnews.com/	

6	전라일보	www.jeollailbo.com/	
7	전민일보	www.jeonmin.co.kr/	
8	전주일보	www.jjilbo.com/	
9	전북신문	www.jbsm.co.kr/	
10	세만금일보	www.smgnews.co.kr/	
11	전북인신문	www.newsjb.kr/	
12	일간전북	www.kns.so/	
13	전주매일신문	www.jjmaeil.com/	
14	전라매일	www.jlmaeil.com/	
연번	전라북도 방송사	사이트	비고
1	KBS 전주	www.jeonju.kbs.co.kr/	
2	전주 MBC	www.jmbc.co.kr/	
3	JTV 전주방송	www.jtv.co.kr/2012/	
연번	전국 신문사	사이트	비고
1	한겨레	www.hani.co.kr/	
2	경향신문	www.khan.co.kr/	
3	중앙일보	www.joongang.joins.com/	
4	동아일보	www.donga.com/	
5	국민일보	www.kmib.co.kr/	
6	연합뉴스	www.yna.co.kr/	
7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2) 인권모니터링 내용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2013. 7월 제정)가 규정하고 있는 [제2장 학생의 인권]을 반영하여 아래의 <표-2>와 같이 학생인권 모니터링의 내용을 설정하였다. 인권모니터링 내용은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이다. 인권모니터링 활동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해당하는 언론보도기사 수집과 「학생인권조례」에 해당하는 학생인권 보장 및 침해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논의사항 및 정책적 요구사항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내 학생 인권의 보호 및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타시도 사례를 포함하였다. 학생인권조례 관련 인권모니터링 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인권모니터링 내용

근거	모니터링 내용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인권	교육에 관한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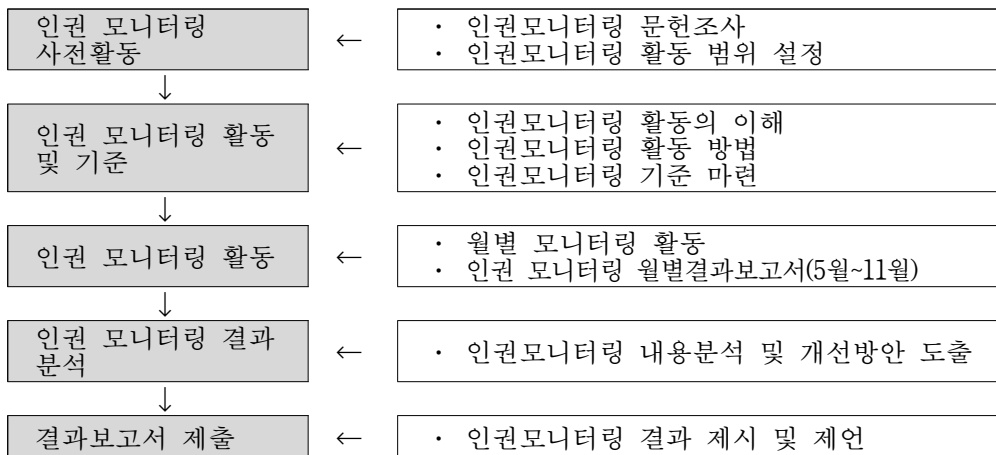
1) 문헌고찰

인권과 학생인권 개념과 내용, 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 및 의미,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하여 학생인권모니터링 활동 범위와 내용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진행 절차

본 연구는 두 가지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5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 동안 전북권내 및 타시도 언론보도기사 및 방송을 활용하여 학생인권 동향을 파악하는 인권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두 번째는 7개월 동안 인권모니터링 활동의 결과물을 내용분석 및 키워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2020년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제시 및 제언을 하였다. 그와 관련한 연구진행절차는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학생 인권 모니터링 수행절차



제2장 문헌검토

I. 인권과 학생인권

일반적으로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신성 불가침한 권리이다. 즉, 인간이라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민족, 종교, 성별, 국적, 사회적 지위 등을 불문하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인권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3단계로 진화하여 왔다. 첫째, 주로 ‘자유권’을 의미하는 제1세대 인권은 과거 시민 혁명기 동안 절대왕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르주아 계급을 중심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등장하였다. 이들이 일으킨 시민혁명의 성공은 자유권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는데, 이는 당시의 부르주아 계급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하는 데서 연유한다. 둘째, 다양한 ‘사회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2세대 인권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등장하였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고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계급의 삶의 질은 참혹할 만큼 형편없었으며, 급기야는 아동들의 노동력까지 착취당하기도 하였다. 역설적으로 산업사회의 등장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의 탄생을 촉발하였다. 사회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명시되었으며, 이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구권도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제3세대 인권은 1970년대 후반에 유네스코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환경권, 평화권 등과 같이 국내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전 세계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인권보장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학생인권은 일종의 제2세대 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을 학생이라는 특별한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보장하는 권리를 말

한다.(최형찬, 2011) 이에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 개념으로 학생인권의 예를 살펴보면 학생평등권, 자유권, 보호복지권 등을 들 수 있다. 평등권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에는 두발·신체의 자유, 매체·정보 접근권, 정책결정 참여권, 정치소신 표현권, 종교 강요 거부권, 자치활동 참여권, 동아리·써클 활동권, 사생활 보장권 등, 보호복지권에는 폭력 보호권, 합리적 절차에 따른 징계, 징계 시 자기 변호권, 일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조금주, 2007)

"학생의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1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기아와 질병에 신음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아동구호기금이 창립되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 즉 제네바선언(The Declaration of Geneva)이 발표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제사회가 아이들의 권리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되게 되었으며, 이후 오랜 준비작업과 논의를 거쳐 1959년 아동 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채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는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 아동학대나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주목을 받음과 함께 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그 결과 1989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되었고, 이로 인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본격화되었다(이형석, 2015).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학계에서만 진행되었던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사회 전반에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소수자·여성·아동·노동과 관련된 인권이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되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었다. 특히 한국이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사

실은 한국사회가 국제인권레짐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도록 하여 특별 보호를 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제24조(어린이의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제10조 어린이 착취금지 등 특별 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 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학생의 인권존중과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64조부터 제72조에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Ⅱ. 학생인권조례

1.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학생인권조례」는 ‘세계인권선언 및 UN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라고 명시하였다(강명숙, 2012).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UN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 헌법,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며,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조금주, 2016).

일반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도입배경으로서 1990년 9월에 발효된 UN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199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근거 또한 실질적 효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UN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기준은 단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고조되기 시작한 아동 청소년 및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해당사자 개인별로 또는 시민 사회단체에서 먼저 제기 되었다. 1995년에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998년에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의 학생복지회에서 발표된 학생인권선언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NEIS의 학생인권 침해 가능성, 2002년 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004년 사립학교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 등과 관련된 문제

제기 등이 계기가 되어 학생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전면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체벌금지, 강제야간자율학습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과 교육과정 영역에까지 인권이라는 기준으로 교육정책을 판단하게 된 것이다.(강명숙, 2012)

그 이후에 2006년 최순영의원 외 9명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08년 권영길 의원 외 9명 역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더불어 지역사회단체에서도 학생인권의 제도화를 위해서 활발하게 노력 하였다. 예를 들어 2005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학생인권의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열망 속에서 2008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진보진영’ 교육감이 다수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 년 10월 국내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뒤이어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1년 10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2012년 1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2013년 7),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2020년 7월)가 제정되었다.

2020년 12월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의 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시행지역 조례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학생인권으로 명시한 권리로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복지에 관한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 조례마다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금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법규범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평등권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학생들은 부당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둘째,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제12조(신체의 자유)를 구체화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을 어떤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셋째, ‘교육에 관한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3조,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해서 유엔에서 제시한 학습권의 4대 요소(가용성·접근성·수용성·적용성)를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생활의 의미가 다양해지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만큼 학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시대 변화에 맞게 해석하고 보장할 필요성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와 민주시민 사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자치 및 참여의 권리’는 학생을 교육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간주하여 학생의 참여가 형식적인 모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결정 참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일곱째, ‘복지에 관한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 되도록 명문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여덟째,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는 학생이 폭력, 절도, 시험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조사나 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존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아홉째,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부당한 법률, 명령, 지침 등에 따르지 않고 보편적 인권에 따라 행동하고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기술되어 있는 ‘청원권’을 명시한 것이다. 열째,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은 차별금지의 구체화된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관할 학교들에 교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정희진, 강창희, 2015).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체벌과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4)도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진흥과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사항을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 규정하고 있다(김태호, 2014; 조금주, 2016). 아래의 <표-4>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 보장 조례에 대한 정확한 조문의 내용을 비교 요약·정리한 것이다.

<표-4>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내용

학생인권	조문내용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차별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5조	20조	5조	8조	15조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 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조	·	6조	9조	13조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의 권리	7조	19조	7조	10조	·
	신체의 자유	·	11조	·	·	6조
교육에 관한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8조	10조	8조	5조	23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9조	·	9조	6조	·
	휴식을 취할 권리	10조	18조	10조	11조	2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11조	·	12조	12조	9조
	사생활의 자유	12조	·	13조	13조	10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3조	12조	14조	14조	10조
	정보에 관한 권리	14조	·	15조	15조	10조
양심·종교 표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15조	13조	16조	16조	7조
	표현의 자유	16조	14조	17조	17조	8조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17조	15조	18조	18조	19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참여권	18조		19조	19조	20조
	정책결정 참여권	19조		20조	20조	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20조	17조	21조	21조	23조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21조	·	22조	22조	24조
	문화 활동 향유권	22조	18조	11조	23조	27조
	급식에 대한 권리	23조	·	23조	24조	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24조	19조	24조	25조	24조
징계절차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5조	16조	25조	26조	14조
권리 침해보호권	권리를 지킬 권리	·	·	26조	·	·
	상담 및 조사 청구권	26조	22조	27조	27조	39조
소수학생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27조	21조	28조	38조	28조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및 학교 외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증진되도록, 대화와 참여를 통하여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학생이 자기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능력과 적성을 신장하고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이에 따른 제도 개선과 법령의 정비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모니터링을 수행하고자 하므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2014) [제2장 학생의 인권]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 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제3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

생활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 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

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5)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7)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상당과 조사 등 청구권)

-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당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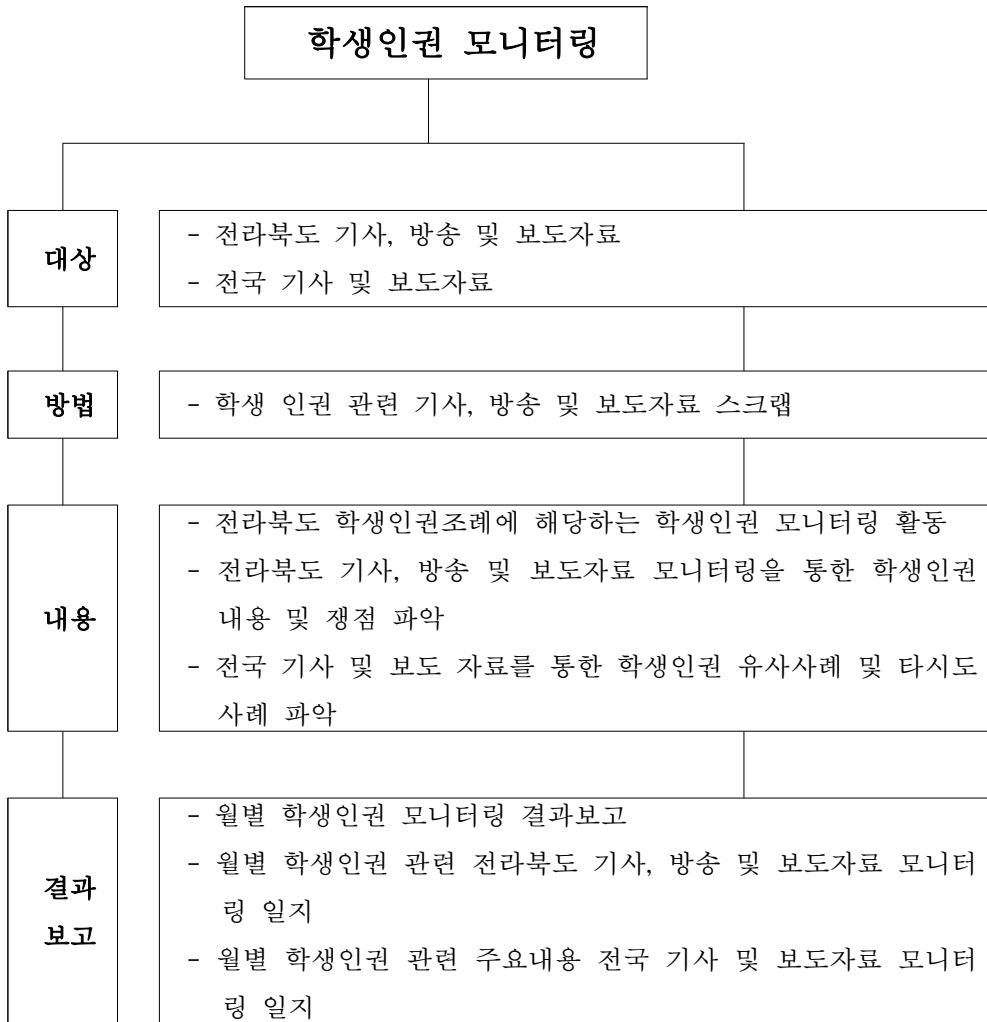
제3장 학생인권 모니터링

I.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1.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 1) 활동일시 : 2020년 5월 1일 ~ 11월 30일
- 2) 활동범위 : 전라북도 및 타시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외
- 3) 활동내용 :
 - 기사, 방송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 인권 모니터링
 - 학생 인권 범위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4) 모니터링 수행 체계



2. 월별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 5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제목	출처	신문사	비고
1	최영규 전북도의원 “학생 1인당 10만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하자”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2371	전북도민일보 05.03	전라북도
2	교복 선택도 학생 인권이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3149	전북도민일보 05.10	전라북도
3	도교육청,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맞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추진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354	전라일보 05.15	전라북도
4	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학교 문 마침내 열린다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360	전민일보 05.19	전라북도
5	학습더딤 초등학생 기초학력 집중 지원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4388	새전북신문 05.21	전라북도
6	민식이법 시행 2개월 안 전시설 확충은 거북이 걸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893	전북도민일보 05.24	전라북도
7	유치원·초·중학교 27일 등교 철저 방역 급선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060	전북도민일보 05.25	전라북도
8	‘속옷 세탁’ 울산 초등학교 교사 직위해제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03515757	세계일보 05.04	타시도
9	#스쿨미투2년...#누구도_처벌받지_않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50600035&code=940100	경향신문 05.05	타시도
10	청각장애인에 학습권 길 터준 ‘립뷰마스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11630001&code=940100	경향신문 05.21	타시도

* 6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제목	출처	신문사	비고
1	학교구성원 '고3 야간자 율학습' 찬·반 논쟁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590	전라일보 06.01	전라북도
2	도내 학생들 80% 등교 완 료...도교육청, 방역인력 대폭 늘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315	전북일보 006.03	전라북도
3	모욕·인신공격 등 사이 버 학교폭력 심각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738	전북일보 06.09	전라북도
4	성범죄 가해학생 출석정 지 15일?... 2차피해 는 어찌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685	전민일보 006.09	전라북도
5	학폭 피해학생 국선대리 인 도움 받는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864#092a	전북중앙 06.15	전라북도
6	전북도교육청, 초등학교 환경감수성 키운다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025	전민일보 06.15	전라북도
7	코로나19 확진 해당학교 14일간 등교중지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8119	전북도민 일보 06.17	전라북도
8	‘도내 학생 21만8천명에 2차 농산물꾸러미 지원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389#092a	전북중앙 06.22	전라북도
9	‘전북교육청, 코로나19 포괄적 심리 지원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668	전북일보 06.22	전라북도

10	여중생 무차별 구타에 동영 상까지 ‘충격’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894	전북일보 06.24	전라북도
11	학생 간 접촉 막는다며...7 교시 수업에 쉬는 시간 ‘0 분’	https://news.joins.com/article/23793756	한겨레 06.02	타시도
12	‘기초생활 수급자? 부모 이혼?’...평택 한 여중생 비인권적 가정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93756	중앙일보 06.04	타시도
13	창녕서 양상 다리로 구조된 학 대 피해 아동...경남교육청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예 정”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08514185	세계일보 06.08	타시도
14	19군데나 수정... 충남 학 생인권조례, 실망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2114	오마이 뉴스 06.22	타시도

* 7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제목	출처	신문사	비고
1	수학여행 원칙적 금지… 체험학습은 학교장 판단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7827	새전북 신문	전라북도
2	군산에도 청소년 자치배 옵터가 들어섰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981	전북도민 일보	전라북도
3	“차도로 아슬아슬” 익 산 신동초등학교 학생들 위험천만 등교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12	전민일보	전라북도
4	전북교육청, 특색있는 마 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 진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677	전북일보	전라북도
5	도내 학교급식, 안전한 식재료만 쓴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718#092a	전북중앙 신문	전라북도
6	완주군 청소년, 첫 참정 권 행사한다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428	전라일보	전라북도
7	명존중 교육, 학생들 마 음 치유한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343#092a	전북중앙 신문	전라북도
8	“전주교육지원청 학폭위 결정, 부적절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24	전북일보	전라북도
9	故 최숙현 다닌 학교 ‘운동선수 인권보호’ 조례조차 없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BRLKECC	서울경제	타시도
10	인권위 “학교 폭력 피해 자 공개조사는 인격권 침 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2579.html	한겨레	타시도
11	“학교 화장실 몰카는 용 서 받을 수 없는 흉악범, 재발방지책 세워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7576	오마이 뉴스	타시도

* 8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제목	출처	신문사	비고
1	도교육청, 어린이 안전 스마트화 본격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615	전북중앙	전라북도
2	전북교육청, 방학·휴가기간 중 생활방역 수칙 안내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28	전민일보	전라북도
3	전북청소년연극제, 사상 최초 비대면으로 열린다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0384	새전북신문	전라북도
4	학교폭력 중재 나선 경찰 ‘논란’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736	전북일보	전라북도
5	학교를 학생에게 돌려주자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652	전북도민 일보	전라북도
6	[독자기고] 우리 아이들의 선거, 온라인 투표로!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907	전북도민 일보	전라북도
7	전주시내 고교서 식중독 의심환자 43명 발생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126	전북도민 일보	전라북도
8	전북지역 11개 학교 집중호우 피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24	전북일보	전라북도
9	학교 운동부, 학교공공스포츠클럽으로 변신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2079	전북일보	전라북도
10	수도권은 원격수업, 전북은 3분의 1씩 등교 수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2579.html	새전북 신문	전라북도

11	제8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공개모집 한다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601	전민일보	전라북도
12	권익위, “여학생 교복 치마 또는 바지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권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31343001&code=910100	경향신문	타시도
13	한국 청소년 수면·운동 부족한데도 “난 건강” . . . “건강권 인식 필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31517001&code=940100	경향신문	타시도
14	“ ‘짱깨’ ‘호모’ 안 돼요” …인권위,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전국 학교 배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6389.html	한겨레	타시도
15	제주 학생인권 보장 조례 생긴다	http://www.hani.co.kr/arti/area/jeju/956718.html	한겨레	타시도
16	인권위 “학생 인권 침해하는 과도한 두발 규정 개정” 권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6500070	서울신문	타시도
17	성희롱’ 창원 사립중 교사 2명 징계 요청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2491	경남신문	타시도
18	프로야구 NC, 학교폭력 논란 김유성 지명 철회	https://news.join.com/article/23858460	중앙일보	타시도

* 9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제목	출처	신문사	비고
1	“불쌍하다 너희 엄마는” ... ‘담임이 초등 1학년에게 폭언’ 고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0301	전주KBS	전라북도
2	‘2020 전북학생 창의미술 릴레이전’ 개막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374	전라일보	전라북도
3	스쿨존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교통안전의식 고취 나선다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198	전민일보	전라북도
4	학교밀집도 최소화 2단계 조치 20일까지 연장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790	전북도민 일보	전라북도
5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학교 급식에 만족할까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3217	새전북 신문	전라북도
6	전북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비대면 인문학 콘서트 개최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9135	전북도민 일보	전라북도
7	전북교육청, 안전한 학교환경 제공 앞장선다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92	전민일보	전라북도
8	유초중고 등교인원 제한 내달 11일까지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907	전북도민 일보	전라북도

9	2020 학생 정책제안 선정 결과 발표	http://www.domin.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3107 27	전북도민 일보	전라북도
10	라면 끓여먹으려다 불낸 초등생 형제...이틀째 의식 없어	http://www.hani.co.kr/arti/are a/capital/962479.html	한겨레	타시도
11	과학고는 매일 등교, 일반고는 온·오프 병행...교육격차 더 벌린 '학급당 학생 수'	http://news.khan.co.kr/kh_ne ws/khan_art_view.html?artid= 202009272042015&code=9404 01	경향신문	타시도
12	태블릿 열자 '지인 능욕' 사진 등 수천장이... 대구 고등학생 체포	https://www.chosun.com/nation al/regional/yeongnam/2020/09/2 5/VJTZAGJRPBCEZFC7BDNZG HGC44/	조선일보	타시도

* 10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제목	출처	신문사	비고
1	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체육활동 가이드라인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9814	전북중앙	전라북도
2	‘최근 3년간 전북 성비위 징계 교원 30여명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975	전북일보	전라북도
3	전북도내 학생 상담지원 ‘위 클래스’ 설치율 전국 꼴찌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428	전라일보	전라북도
4	지난해 전북지역 학생 46명당 1건 꼴 안전사고 발생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428	전라일보	전라북도
5	혁신교육 10년 되짚어 보고 미래 혁신교육 방향 모색한다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790	전민일보	전라북도
6	익산 초등학생 1명 행방 묘연, 경찰 소재 파악 중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209	전북일보	전라북도
7	‘전북도교육청 추진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학생 신분 노출 2차 피해 논란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560	전북도민일보	전라북도
8	“애들아 학교가자“ . . . 도내 등교수업 최대로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335	전북중앙	전라북도
9	고창서 ‘담임교사가 학생 학대했다’ 고소장 접수돼 경찰 수사 나서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103	전라일보	전라북도
10	초등 저학년 기초문해력 부진 해소 ‘팔 걷어’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759	전북중앙	전라북도

11	전북교육청, 외국국적 초·중학생에 아동양육비 한시 지원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429	전민일보	전라북도
12	전북교육청 학교 내 혐오 표현 실태조사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127	전북도민일보	전라북도
13	전주시 한 고교생 교사 7명 신체 등 촬영, 교육 당국 조사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758	전북도민일보	전라북도
14	“코로나19시대, 이후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하가 적정”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645	전북일보	전라북도
15	안산 시민단체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하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1509001&code=940100	경향신문	타시도
16	아동들 “매일 걷는 '통학로', 안전한 환경 조성해 달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3555	오마이뉴스	타시도
17	편의점 들렀다가 담배부터 배울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80928011&code=940100	경향신문	타시도
18	“선생님이 허벅지 더듬어...학교는 은폐” 여중생들 호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17246&code=61121411&cp=nv	국민일보	타시도
19	“보복 두려워... 폭력 피해 학생선수 80% 침묵	http://www.segye.com/newsView/20201019520471?	세계일보	타시도

* 11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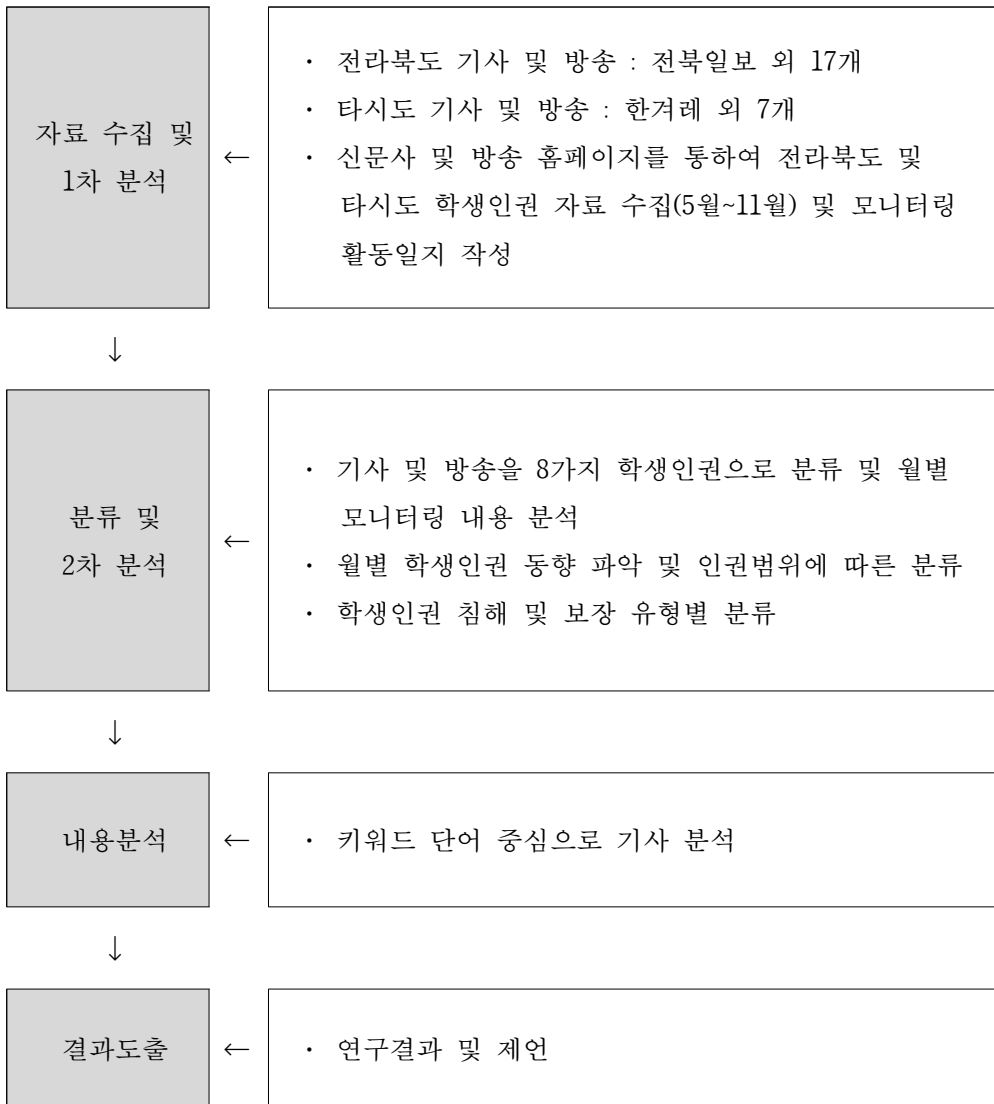
	제목	출처	신문사	비고
1	전북교육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고1·2학년 39명 대상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357	전민일보	전라북도
2	도교육청,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만들어간다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849	전라일보	전라북도
3	전북교육청 2020 전라북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6414	전북도민일보	전라북도
4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설치 운영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782	전북중앙	전라북도
5	군산지역 A중학교 장애우 폭행·괴롭힘 파문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7367	전북도민일보	전라북도
6	[달그락달그락] 안전 거리두기 일지, 청소년들에게 물으니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8803	새전북신문	전라북도
7	‘코로나19 확산에 전북도내 전 학교 밀집도 3분의 2로 격상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333	전북도민일보	전라북도
8	전북도교육청,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9013	새전북신문	전라북도
9	도내 청소년 자살 방지 관심-노력 주문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602	전북중앙	전라북도
10	전북교육청, ‘안전교육 활성화 찾아가는 컨설팅’ 27일부터 추진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613	전라일보	전라북도

11	“학교 둘레, 아침 8시까지 차를 옮겨주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9340	오마이뉴스	타시도
12	인권위 “등교 뒤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인권 침해”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68490.html	한겨레	타시도
13	10곳 중 5곳은 거부... 부모 없이인 정신과 못 가는 청소년들	http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0481	오마이뉴스	타시도
14	“택시 타고 교문 앞 내리면 별점” 이게 요즘 생활 평점제라고?	https://news.join.com/article/23921510	중앙일보	타시도
15	초·중학생들도 탈 수 있는 서울시 ‘새싹 파릉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재떨이’ 달린 쓰레기통 없앤 횡성군...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였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91525001&code=940100	경향신문	타시도
16	아동·청소년 ‘코로나 블루’ 주의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31605001&code=940401	경향신문	타시도

II.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분석

1. 학생인권 언론보도기사 분석 절차

<표-5> 학생 인권 모니터링 분석절차



2. 언론보도 기사 학생인권 모니터링 분석

전라북도 및 타시도에서 전북일보 외 총 24개 언론사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신문사 및 방송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까지 모니터링 한 결과는 아래의 <표-6>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월별 모니터링 기사 및 방송은 5월 10건(타시도 3건), 6월 14건(타시도 4건), 7월 11건(타시도 3건), 8월 18건(타시도 7건), 9월 12건(타시도 3건), 10월 19건(타시도 5건), 11월 11건(타시도 6건)으로 나타났고, 7개월 동안 총 100건(타시도 31건)으로 나타났다.

<표-6> 월별 모니터링 기사 및 방송

월별	전라북도	타시도	합계
5	7	3	10
6	10	4	14
7	8	3	11
8	11	7	18
9	9	3	12
10	14	5	19
11	10	6	16
합계	69	31	100

언론사 기사 및 방송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장에 따른 영역별 분류는 아래의 <표-7>과 같다. 언론보도에 나타난 월별 학생인권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5월 30건, 6월 39건, 7월 18건, 8월 32건, 9월 20건, 10월 24건, 11월 25건으로 나타났고, 7개월 동안 학생인권조례와 내용과 관련된 모니터링 결과는 총 188건으로 나타났다.

<표-7> 월별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분석표

학생인권 모니터링 내용		2020년 (타시도 언론기사 포함)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교육에 관한 권리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20	7	5		1	3	3	1
	제6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10	2	1	2	1	2		2
	제7조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소계		30	9	6	2	2	5	3	3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1		1		2	1
소계		5		1		1		2	1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20	2	4	2	3	2	6	1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37	5	4	3	7	3	8	7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1		1					
소계		58	7	9	5	10	5	14	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3	1			2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1							1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4		2	2				
	제15조 정보에 관한 권리	7		3			1	2	1
소계		15	1	5	2	2	1	2	2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6조 양심 종교의 자유								
	제17조 표현의 자유	2				2			
소계		2				2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4	1		1	2			
	제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2				1			1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9	1		1	2	1	1	3
소계		15	2		2	5	1	1	4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6	1	4	1				
	제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2	3	4		3	2		
	제23조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8	2		2	2	2		
	제24조 급식에 대한 권리	5	1	1	1	1	1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24	3	6	1	3	3	1	7
소계		55	10	15	5	9	8	1	7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제26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5	1		2	1		1	
	제27조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3		3					
소계		8	1	3	2	1		1	
총계		188	30	39	18	32	20	24	25

월별 모니터링 기사 및 방송의 합계보다 모니터링 결과분석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하나의 방송이나 기사내용이 여러 분야의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따라서 총계의 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개월 동안 학생인권조례 분야별로 관련된 언론보도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3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영역에서 총 5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영역에서 55건,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영역에서 30건,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에서 15건,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영역에서 15건, 제8절 인권침해 구제를 받을 권리 영역에서 8건,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영역에서 5건,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하여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는 언론보도기사에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3. 언론보도 기사 학생인권 모니터링 키워드 분석

<표-8> 5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기사 제목	인권 조례	키워드	비고
1	최영규 전북도의원 “학생 1인당 10만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하자”	제5조 제24조	코로나19, 교육재난, 학습권 보장, 교육여건 개선, 교육재난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온라인개학, 재난, 재해, 예방, 재난상황, 추경, 학교밖청소년	전라 북도
2	교복 선택도 학생 인권이다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교복 선택권, 하복, 생활티, 재킷, 후드집업, 인권존중, 학교생활편의, 가디건, 규정위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장수중학교, 설문조사, 의견, 학생중심, 전주덕진중학교, 반바지, 치마, 긴치마, 구매 선택권, 계절영향, 하복디자인, 건의사항, 교복 변화, 인권 존중, 자치문화	전라 북도
3	도교육청,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맞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추진	제6조 제23조	민주화운동, 민주시민교육, 학생중심, 활동, 토론회, 현장체험, 민주, 민주화운동 자취, 이세종열사, 5·18, 소통, 협력, 학생원탁토론, 자발적참여, 체험, 민주시민	전라 북도
4	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학교 문 마침내 열린다	제5조 제10조 제22조 제25조	코로나19, 학교문, 개학, 개학연기, 온라인개학, 등교수업, 연기, 등교개학, 밀집도최소화, 학교방역, 감염병 대응, 건강상태, 자가진단, 발열, 생활속거리두기, 발열체크, 선별진료소, 마스크, 의무화, 분산수업, 수업시간, 탄력적운영, 교직원, 건강	전라 북도
5	학습더딤 초등학생 기초학력 집중 지원	제5조	학생더딤, 기초학력, 보조교사, 설명회, 맞춤형지원, 보조교사, 집중지원, 기초학습, 교과학습, 학습고민, 상담, 학습코칭, 초등학생, 보조교사제	전라 북도
6	민식이법 시행 2개월 안전시설 확충은 거북이 걸음	제10조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처벌, 민식이법, 아동, 사망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준법의식, 도로안전, 환경개선, 안전시설물, 과속단속카메라, 신호	전라 북도

			기, 무단횡단, 안전펜스, 사고위험, 제한속도, 도로구조, 과속방지턱, 불법주정차, 교통안전시설, 스쿨존사고	
7	유치원 · 초 · 중학교 27일 등교 철저 방역 급선무	제5조 제10조 제22조 제25조	등교개학, 면역력, 방역, 등교수업, 특별소독, 확진자, 유증상자, 발열체크,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급식, 방역조치, 거리두기, 사각지대, 수업시간, 탄력조정, 급식실, 돌봄사각지대, 지원방안, 수업방식, 자율권	전라 북도
8	‘속옷 세탁’ 울산 초등학교 교사 직위해제	제9조 제10조	초등학생, 속옷, 세탁, 숙제, 부적절, 언행, 행태, 교사, 직위해제, 학급밴드, 재발방지, 지원, 후속조치, 논란, 매력적, 섹시, 예쁘다, 공주님, 부적절, 땃글, 팬티	타시도
9	#스쿨미투2년...#누 구도_처벌받지_않았 다	제9조 제26조	스쿨미투, 진행형, 탄원서, 강제추행, 교사, 증거불충분, 무혐의, 재수사, 요구, 진정, 재수사, 정직, 견책, 징계, 형사처벌, 파면, 해임, 계약해지, 성폭력, 성착취, 팬티 빨기, 성희롱, 10대, 20대, 피해자, 조력, 어려움, 시위, 가해교사, 청소년	타시도
10	청각장애인에 학습권 길 터준 ‘립뷰마스크’	제5조 제10조 제22조 제25조	코로나19, 청각장애, 언어재활, 장기화, 휴원, 재활치료, 감염예방, 마스크, 수업, 의사소통, 입모양, 방역마스크, 투명마스크, 학습권, 립뷰마스크, 프로젝트, 학습권, 관심	타시도

5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관련
키워드 분석
시각화



5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10건(타시도 3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6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3조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24조 급식에 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26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서 나타났다.

5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는 위의 <표-8>과 같다.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과 등교 문제, 방역 문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교복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 졌으며 민식이법 시행과 더불어 안전시설 확충문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 있었다. 타시도 사례로서 온라인 수업 중에 발생한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었으며, 스쿨미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문제가 있었으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립뷰마스크 제작 보급 기사가 있었다.

<표-9> 6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기사 제목	인권 조례	키워드	비고
1	학교구성원 ‘고3 야간자율학습’ 찬·반 논쟁	제5조 제6조 제25조	야간자율학습, 허용, 온도차, 대입, 안전, 찬성, 반대, 방과후수업, 보충수업, 야자, 코로나19, 학습량, 학력차, 입시, 건강, 재학생, 졸업생, 방역	전라 북도
2	도내 학생들 80% 등교 완료...도교 육청, 방역인력 대 폭 늘려	제5조 제10조 제22조 제25조	개학, 자원봉사, 인력, 방역활동, 강화, 방역지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방역 용품, 업무지원, 학생보호, 급식, 접촉급 지, 생활지도, 지원, 생활지도	전라 북도
3	모욕·인신공격 등 사이버 학교폭 력 심각	제9조 제15조	SNS, 성추행, 학교실태조사, 사이버폭 력, 모욕, 인신공격, 사이버, 학교폭력, 사회적문제, 익명, 성적모욕, 대책, 피 해학생, 폭언, 괴롭힘, 온라인	전라 북도
4	성범죄 가해학생 출석정지 15 일?... 2차피해 는 어찌나	제9조 제10조 제27조	여학생, 음란사진, 메시지, 학교폭력심 의위원회, 출석정지, 2차피해, 성범죄, 숨방망이 처벌, 채팅앱, 음란메시지, 사 진, 학폭위, 행정심판	전라 북도
5	학폭 피해학생 국 선대리인 도움 받 는다	제27조	인권침해, 구제, 국선대리인, 학교폭 력, 변호사,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 경제적 약자, 피해 학생, 권리구제, 조력, 법률복지, 사각지대	전라 북도
6	전북도교육청, 초 등학생 환경감수 성 키운다	제21조 제22조	초등학생, 환경감수성, 생태지도, 생명보 호, 수직정원, 공기질변화, 과학적창의 성, 심신건강, 쾌적한, 친환경 공간, 정 서안정, 학업집중도	전라 북도
7	코로나19 확진 해 당학교 14일간 등 교중지	제5조 제10조 제22조 제25조	코로나 19, 확진, 방역당국, 역학조사, 등교중지, 원격수업, 시설이용제한, 온라 인수업, 전수 검사, 밀접 접촉자 분류, 심층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전라 북도
8	‘도내 학생 21만 8천명에 2차 농산 물꾸러미 지원	제5조 제24조	코로나19, 장기화, 농가소득, 경제적 부담,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 농산 물, 학부모의견, 자율적	전라 북도
9	‘전북교육청, 코 로나19 포괄적 심 리 지원	제21조 제25조	코로나19, 확진자, 포괄적, 심리지원, 자 가 격리, 심리상황, 심리적안정, 감염사 실, 당사자, 학급친구, 학교, 가족	전라 북도

10	여중생 무차별 구타에 동영상까지 '충격'	제9조 제15조	협박, 욕설, 폭행, 동영상, 촬영, 단체채팅방, 조롱, 구타, 유포, 파문, SNS, 댓글, 학교폭력전담기구, 접촉금지, 2차피해, 예방, 적극적 조치	전라북도
11	학생 간 접촉 막는 다머...7교시 수업에 쉬는 시간 '0분'	제5조 제11조 제25조	방역, 교육, 쉬는시간, 불편, 수업시간, 조정, 접촉 통제, 방역, 휴식권, 아동학대, 방역지침, 모둠활동, 대화, 자제, 코로나19, 수업방식, 관계, 교우관계, 수행평가, 성적, 학사일정	타시도
12	'기초생활 수급자? 부모 이혼?...평택한 여중생 비인권적 가정조사	제8조 제14조 제15조	가정형편, 부모직업, 이혼여부, 학생, 개인정보, 조사, 학생기초자료, 조사서, 인권침해, 경제적형편, 기초생활대상자, 직업, 사과, 경위서, 수치심, 가정환경, 차별	타시도
13	창녕서 양상 다리로 구조된 학대 피해 아동...경남교육청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예정"	제9조 제10조 제25조	학대사건, 긴급, 보호조치, 심리검사, 상담, 가정학대, 재발방지, 신고체계, 대책, 상습적학대, 입원치료	타시도
14	19군데나 수정...충남 학생인권조례, 실망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수정, 통과, 반발, 업무독립성, 반성문, 사약서강요, 삭제,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의자유, 권고, 지문날인, 서명, 개인정보, 인권, 인권교육, 노동인권, 인권옹호관, 독립성	타시도



6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14건 (타시도 4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6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제15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3조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24조 급식에 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27조 상담과 조사청구권에서 나타났다.

6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 결과는 위의 <표-9>와 같다. 주요내용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야간자율학생 찬반 논란, 학생들이 80% 등교에 따른 방역 강화, 고등학교의 코로나 확진에 따른 등교중지와 전북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포괄적 심리지원, 2차 농산물꾸러미 기사가 있었다. 또한 모욕, 인신공격 등 사이버 학교 폭력 문제, 성범죄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처분에 따른 2차피해 문제, 전북교육청에서 학폭 피해학생에 대한 국선대리인 운영, 여중생 무별 구타에 동영상까지 유포한 문제가 있었으며, 전북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있었다. 타시도 사례로서 코로나 19로 인한 단축수업 및 학생 간 접촉 방지를 위해 7교시 수업에 쉬는 시간이 없었으며, 온라인 수업으로 학대 아동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부모 이혼 여부, 가정형편 등을 조사하여 문제가 되었으며,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여 19군데나 수정하며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조례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표-10> 7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기사 제목	인권 조례	키워드	비고
1	수학여행 원칙적 금지...체험학습은 학교장 판단	제6조 제10조	코로나19, 수학여행, 당일치기, 학교장결 정, 원칙적금지, 집단 감염, 위험요소, 최소화, 권고, 현장체험학습, 선택권, 안 전	전라 북도
2	군산에도 청소년 자치배움터가 들 어섰다	제18조 제23조	군산,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진로활동, 자치활동, 자치배움터, 자몽, 개관, 자치 문화, 복합문화공간, 재능, 발휘, 청소년 주도, 청소년 자치, 교육문화공동체	전라 북도
3	“차도로 아슬아 슬” 익산 신동초 등학교 학생들이 위 협천만 등교	제10조	통학로, 아이들, 안전, 사고위험, 대책, 불법주차, 출근길차량, 보행, 등굣길, 차선규제봉, 일방통행, 안전	전라 북도
4	전북교육청, 특색 있는 마을교육생 태계 활성화 추진	제21조	전북교육청, 학교, 마을, 지방자치단체,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 마을교육공 동체, 지역교육문화, 안전, 건강, 지역 사회, 교육 신뢰성, 배움, 삶, 참학력신 장, 미래인재, 육성, 민관거버넌스, 협 치	전라 북도
5	도내 학교급식, 안 전한 식재료만 쓴 다	제24조 제25조	Non-GMO, 안전, 학교급식, 유전자 변 형, 사업, 시범운영, 안정성확보, 학교 급식센터, 지원, 식재료, 성분검사, 불 안감 해소, 건강권, 농가, 안정적판로, 친환경쌀지원	전라 북도
6	완주군 청소년, 첫 참정권 행사한다	제12조 제20조	청소년, 투표, 공약, 평가, 어린이의원, 청소년의원, 선호도, 공약중심, 참정권, 교육, 정책, 반영, 모바일서비스, 선거권 확대, 경험, 민주주의, 민주시민	전라 북도
7	생명존중 교육, 학 생들 마음 치유한 다	제6조 제23조	마음치유, 생명지킴이, 생명존중, 문화, 자해예방, 행복한학교생활, 위험군학생, 상담, 병원치료비, 지원, 교육연극, 모니 터링, 배려, 공감	전라 북도
8	“전주교육지원청 학폭위 결정, 부적 절했다“	제26조	교육행정심판위, 학폭, 사건, 가해학 생, 처분, 부적절, 음란사진, 전송, 전 학처분, 집단폭행, 기절놀이, 전학조 치, 행정심판결과, 학폭위결정, 전문 성, 적절성, 성인지갑수성	전라 북도
9	故 최숙현 다닌 학교 ‘운동선수	제9조 제10조	학생선수, 인권보호, 책임, 조례, 최소한 의 장치, 고최숙현선수, 폭력, 실태조사,	타시도

	인권보호’ 조례 조차 없었다		인권교육, 의무화, 법제화, 정치권,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 성희롱, 성폭력, 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 사고예방	
10	인권위 “학교 폭 력 피해자 공개조 사는 인격권 침 해”	제14조 제26조	운동부, 폭력, 피해 학생, 국가인권위원 회, 권고, 인격권침해, 야구부, 학교폭 력 조사, 비밀보장, 공정성, 2차피해, 아동 인권, 직무교육	타시도
11	“학교 화장실 물 카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음악법, 재발방지책 세워 야“	제10조 제14조	남자교사,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흉악 범죄, 재발방지, 근본대책, 성평등, 안전 한 사회,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정 기점검, 공개, 지원방안, 제도화, 인권침 해	타시도

7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11건(타시도 3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조항은 제6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제15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3조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24조 급식에 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26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서 나타났다.

7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 결과는 위의 <표-10>과 같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수학여행 원칙적금지 및 체험학습의 학교장 판단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 안전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문제가 있었으며, 군산에 청소년 자치배움터가 들어섰고, 전북교육청에서 특색 있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였고, 완주군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참정권을 행사했으며, 전북교육청에서 생명존중 교육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6월에 문제가 된 학폭위 결정에 대하여 교육행정심판위에서 전학조치를 결정했다. 타시도 사례로서 고최숙현 선수로 인한 학생선수들의 인권보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권보호 조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 공개조사는 인격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학교 화장실 물카를 설치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표-11> 8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기사 제목		인권 조례	키워드	비고
1	도교육청, 어린이 안전 스마트화 본격	제10조 제22조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학생, 비 콘, 보급, 시범학교, 운영, 학생안전, 신 기술, 안전사고, 예방, IoT, 4차 산업혁 명, 신기술, 사전 예방, 도입, 사전알림, 통학정보, 스마트화, 안전운전, 유도	전라 북도
2	전북교육청, 방 학·휴가기간 중 생활방역 수칙 안 내	제10조 제25조	여름방학, 휴가철, 코로나19, 안전한, 수 칙, 학교 안내, 감염경로, 이동, 모임 증 가, 관광지 밀집도 확대, 감염 확산, 규 칙적, 운동,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밀폐, 밀집, 밀접, 3행, 3금, 손소독제, 씻기, 거리두기, 생활수칙	전라 북도
3	전북청소년연극제, 사상 최초 비대면 으로 열린다	제6조 제23조	청소년연극제, 비대면, 청소년연극, 연 극발전, 인간의 감성, 시대 반영, 보편 타당성, 성격고민, 청소년 자살, 문제, 죽음, 갈등, 사회적문제, 청소년들의 시 각, 연극잔치	전라 북도
4	학교폭력 중재 나 선 경찰 ‘논란’	제9조 제10조 제26조	피해학생, 부모 동의, 가해학생, 만남 주선, 2차피해, 절차상 문제, 경찰, 보 호, 분리 동행	전라 북도
5	학교를 학생에게 돌려주자	제18조 제19조 제20조	학교의 주인, 학생자치, 교사연구회, 생활규정, 점검, 학생 인권, 학교문화, 당선증, 학생회, 권한 강화	전라 북도
6	[독자기고] 우리 아이들의 선거, 온 라인 투표로!	제18조	임원선거, 온라인투표, 투표권, 행사, 경 험, 민주주의, 스마트폰, 개인컴퓨터, 유 권자, 기회비용, 편리성, 유비쿼터스, 온 라인수업, 비대면, 코로나 19	전라 북도
7	전주시내 고교서 식중독 의심환자 43명 발생	제10조 제24조	식중독, 의심환자, 집단 발생, 복통, 어 지럼증, 병원 치료, 설문조사, 경위파악, 대책회의, 급식 중단, 추가환자, 모니터 링, 식생활관, 위생관리, 위생교육	전라 북도
8	전북지역 11개 학 교 집중호우 피해	제10조 제22조	집중호우, 학교 피해, 현장점검, 운동 장 침수, 교사 누수, 토사 유출, 경사 면 붕괴, 학생피해, 방역조치, 추가피 해, 예방, 안전점검	전라 북도
9	학교 운동부, 학교 공공스포츠클럽으 로 변신	제22조 제23조	학교운동부, 공공스포츠 클럽, 회계부정, 입시비리, 성폭력, 문제점, 공공형, 학교 스포츠클럽, 전환, 활성화, 환경개선, 회 원제, 지역형 스포츠클럽, 위탁형 스포	전라 북도

			즈클럽, 운영비, 개선비, 시설확충, 클럽 활성화, 인프라 구축, 설명회, 컨설팅	
10	수도권은 원격수업, 전북은 3분의 1씩 등교 수업	제5조 제10조 제25조	코로나19, 확산, 원격수업, 3분의1, 순환 등교, 밀집도, 2단계, 등교 학생수, 등교수업, 대면수업, 학교장재량,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시간 조정	전라북도
11	제8기 전라북도 학생 참여 위원회 공개모집 한다	제20조	학생참여위원, 공개 모집, 학생인권,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생인권조례, 의견수렴,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참여, 활성화, 의견 반영	전라북도
12	권익위, “여학생 교복 치마 또는 바지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권고	제13조 제17조	국민권익위원회, 여학생, 교복, 치마, 바지, 선택, 제도 개선, 권고, 선택권 제한, 학생인권, 심각한 침해, 교복선정, 합리성, 품질, 디자인, 성인지감수성, 다양한 요소	타시도
13	한국 청소년, 수면·운동 부족한 데도 “난 건강” . . . “건강권 인식 필요”	제25조	청소년, 수면시간, 신체활동, 연구결과, 건강권, 정책방안, 학업위주, 생활환경, 건강실태조사, 수면부족, 운동시간, 식생활, 신체적, 정신적	타시도
14	“ ‘짱깨’ ‘호모’ 안 돼요” … 인권위,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전국 학교 배포	제8조	국가인권위원회,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모욕, 혐오표현, 안내서, 배포, 특정집단, 모욕, 비하, 멸시, 위협, 김치녀, 쿡방이, 급식충, 툇따충, 짱깨, 흑형, 똥남아, 병신, 결정장애, 호모, 게이, 레즈, 난민, 성소수자	타시도
15	제주 학생인권 보장 조례 생긴다		제주, 학생인권, 조례, 입법예고, 행사, 참석 강요 금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교육활동, 간담회, 의견수렴, 정책간담회, 임시회	타시도
16	인권위 “학생 인권 침해하는 과도한 두발 규정 개정” 권고	제12조 제17조	스포츠형 머리, 사립고교, 국가인권위원회, 두발 규정, 개정, 권고, 용모에 관한 권리, 민주적 절차, 학생생활규정, 징계절차, 헌법, 교육기본법, 유엔협약,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 절차적 정당성, 발현권	타시도
17	성희롱’ 창원 사립중 교사 2명 징계 요청	제9조 제10조	성희롱, 발인, 징계, 인권침해, 전수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수치심, 대자보, 자기소개, 성폭행, 대가리, 전학	타시도
18	프로야구 NC, 학교폭력 논란 김유성 지명 철회	제9조 제10조	학교폭력, 논란, 1차지명, 철회, 폭력 행사, 피해학생, 사과, 출석정지, 화해, 불성립, 심리치료, 사회봉사	타시도



8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18건 (타시도 6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6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제17조 표현의 자유,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3조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24조 급식에 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26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서 나타났다.

8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 결과는 위의 <표-11>과 같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전북교육청에서 방학 휴가 기간 중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였으며, 전북청소년 연극제가 최초로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학교에서 임원선거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전라북도 학생들의 3분의1 등교가 결정되었다. 또한 안전과 관련하여 전북교육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인식장치를 활용한 어린이 안전 스마트화가 있었고, 전주시내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여 위생관리 및 위생교육이 이루어 졌고, 전북지역 학교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학생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학교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자는 교사들의 연구모임이 있었으며, 전북교육청에서 제8기 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이 외에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재를 시도한 경찰 논란이 있었으며, 전북교육청에서 학교 운동부를 학교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타시도 사례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학생 교복 선택권을 치마 또는 바지가 가능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짝깨, 호모 등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안내서를 전국에 배포하였고,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두발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한국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및 운동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와, 창원 사립중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다루었으며, 프로야구 1차지명 선수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지명이 철회되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생인권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표-12> 9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기사 제목	인권 조례	키워드	비고
1	“불쌍하다 너희 엄마는” ... ‘담임 이 초등 1학년에게 폭언’ 고소	제9조	초등학교 교사, 학생, 폭언, 훈육차원, 해명, 불쌍해, 엄마, 낳고, 행복, 미움, 불안 증세, 상습적, 아동학대, 경찰고소, 공포심, 정서적 학대	전라 북도
2	‘2020 전북학생 창의미술 릴레이전’ 개막	제6조 제23조	전북학생, 창의미술, 릴레이전, 온라인, 오프라인, 체험, 프로젝트, 창의력, 인성 함양, 미술체험, 코로나19, 소규모, 창작 활동, 지원, 작품전시, 비대면, 감상교육	전라 북도
3	스쿨존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교통안전의식 고취 나선다	제10조 제22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망 구축, 업무협 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 공사, 민식이법, 교통사고, 교통안전의 식, 학교주변, 상시점검, 안전의식 확 산, 점검 및 홍보, 규정속도, 안내시트, 학생안전	전라 북도
4	학교밀집도 최소화 2단계 조치 20일까지 연장	제5조 제25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 장,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 연장, 등 교, 원격 병행, 등교수업, 기초학력, 보 충수업, 상담, 교육 소외계층, 돌봄교실	전라 북도
5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학교 급식에 만족할까	제24조	급식만족도, 설문조사, 식생활, 메뉴 반복, 자율배식, 다양한 식단, 급식판, 반찬 칸, 색다른 음식, 인터뷰, 불만 족, 맛의 질, 개선사항	전라 북도
6	전북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비대면 인문학 콘서트 개최	제6조 제23조	코로나19, 인문학, 콘서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강연 나눔	전라 북도
7	전북교육청, 안전한 학교환경 제공 앞장선다	제10조 제22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학교안전, 원스 톱, 점검, 컨설팅, 안전사고, 분석, 미연 에 방지, 분석, 외부전문가, 안전교육, 시설, 교통, 실험실습실, 환경, 안전풍토, 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전라 북도
8	유초중고 등교인원 제한 내달 11일까지	제5조 제25조	밀집도, 최소화, 등교, 원격수업, 병 행, 소통 강화, 코로나19, SNS, 실시 간, 화상 프로그램, 실시간 조례 중 례, 쌍방향 화상 수업, 실시간 채팅, 피드백 수업, 무선인터넷, 맞춤형 학 습, 기초학력, 집중지원, 방역지원	전라 북도

권리, 제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3조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24조 급식에 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에서 나타났다.

9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 결과는 위의 <표-12>와 같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학교밀집도 최소화 2단계 조치의 연장으로 등교인원이 제한되었으며, 전북교육청에서 고등학생 대상 배대면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2020 전북학생 창의미술 릴레이전이 개막하였고,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학교의 등교인원 제한이 연장되었다.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초등학교 1학년에게 폭언을 하여 문제가 되었으며, 스쿨존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북교육청에서 안전한 학교 환경 제공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요구가 있었으며, 전북교육청에서 2020 학생 정책제안 선정 결과 발표가 있었다. 타시도 사례로서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먹으려나 불을 내 중상을 입었으며, 학급당 학생수 문제로 일반고와 과학고의 등교 방식의 차이로 교육격차 확대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불법 촬영하여 지인 능욕 사진 수천장이 태블릿에서 발견되었다.

<표-13> 10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기사 제목		인권 조례	키워드	비고
1	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체육활동 가이드라인	제10조 제25조	코로나19, 감염 예방, 확산방지, 학교체육활동, 가이드라인, 마스크 착용, 창문 상시 개방, 환기, 손씻기, 손소독제, 건강 안전, 비대면, 신체활동, 안전한, 교육환경, 면역력, 예방수칙, 건강증진	전라북도
2	‘최근 3년간 전북 성비위 징계 교원 30여 명	제9조	성비위, 징계, 교원, 증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경징계, 성인지감수성, 무관용 원칙, 강력 처벌	전라북도
3	전북도내 학생 상담지원 ‘위클래스’ 설치율 전국 꼴찌	제15조	학교생활, 상담지원, 위클래스, 설치율, 최하위, 자살, 자해, 위기학생, 학업중단, 따돌림, 대인관계, 부적응 학생, 상담, 교육 심리검사, 외부기관 연계, 지원, 소규모 학교	전라북도
4	지난해 전북지역 학생 46명당 1건 꼴 안전사고 발생	제10조	안전사고, 증가, 안전교육, 강화, 체육수업, 점심시간, 수업시간, 휴식시간, 청소시간, 학교행사, 등하교, 특별활동, 석식시간, 기숙사, 운동장, 부속시설, 교실, 톨로, 경각심, 관심	전라북도
5	혁신교육 10년 되 짚어 보고 미래 혁신교육 방향 모색한다	제20조	혁신교육, 10년, 발자취, 한마당 행사, 경험 성찰, 실천 공유, 교육공동체, 공감토크, 패널토의, 학습공동체, 자치공동체, 공간혁신, 코로나19, 현장 참여, 최소화, 유튜브	전라북도
6	익산 초등학생 1명 행방 묘연, 경찰 소재 파악 중	제10조	수업, 행방묘연, 소재파악, 온라인개강, 온라인수업, 가출 가능성	전라북도
7	‘전북도교육청 추진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학생 신분 노출 2차 피해 논란	제15조	학생선수, 실태조사, 신분노출, 2차피해, 폭력문제, 가해자, 감독교사, 피해학생, 면담진행, 익명처리, 설문조사, 분리조치, 경고, 접근금지, 인권조사	전라북도
8	“애들아 학교가자” “... 도내 등교수업 최대로	제5조 제10조	등교수업, 확대 운영,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밀집도, 학습격차, 코로나19, 심리정서적 지원, 안전한, 학교 환경	전라북도

9	고창서 '담임교사가 학생 학대했다' 고소장 접수돼 경찰 수사 나서	제9조	초등학교, 담임교사, 학대, 신체적, 정신적 학대, 전수조사, 사전예방, 신고활성화, 홍보 및 캠페인, 지속추진	전라북도
10	초등 저학년 기초 문해력 부진 해소 '팔 걷어'	제5조	코로나19, 장기화, 초등학교, 저학년, 학력 격차, 기초문해력, 지원, 더딤학생, 두리교사제, 보조교사제, 문해력	전라북도
11	전북교육청, 외국 국적 초·중학생에 아동양육비 한시지원	제8조	외국국적,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코로나19 돌봄, 비대면 학습, 경제적 부담, 지급대상자, 성별, 연령, 출생지역, 인종, 차별, 평등한 교육 기회	전라북도
12	전북교육청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 조사	제9조	혐오표현, 실태조사, 상담교사, 학생, 설문조사, 성별, 장애, 종교, 성별정체성, 차이와 다양성 인정, 혐오, 차별, 안전한 학교, 상담현황, 예방노력	전라북도
13	전주시 한 고교생 교사 7명 신체 등 촬영, 교육 당국 조사	제9조 제10조	고등학생, 신체부위, 촬영, 휴대전화, 특정부위,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파일 유출, 격리,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조치	전라북도
14	“코로나19 시대, 이후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하가 적정”	제5조 제10조	코로나19, 교육단체,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 교육기본법, 안전, 교육, 원격수업, 학령인구 감소, 학급당, 교육공공성, 정책	전라북도
15	안산 시민단체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하라”	제8조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이주아동, 성명서, 코로나19, 비대면 학습 지원금, 차별, 협약 위반, 차별적행정	타시도
16	아동들 “매일 걷는 '통학로',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제10조	통학로, 안전한, 환경조성, 그린로드대장정, 장애물 제거, 횡단보도, 위험성, 신호등, 등굣길, 생존권, 발달권, 불법주차, 과속, 건널목	타시도
17	편의점 들렀다가 담배부터 배울라	제10조	편의점, 담배광고판, 청소년, 노출, 지도 점검, 금연대책, 연구 및 조사결과, 흡연 호기심, 담배 구매, 교육환경보호구역, 오프라인, 인터넷, 온라인, 흡연행위	타시도
18	“선생님이 허벅지 더듬어...학교는 은폐” 여중생들 호소	제9조 제26조	성추행, 미투, 사건 은폐, 국민청원, SNS, 재신고, 퇴직, 2차가해, 부적절한 언행, 학생인권, 존중	타시도
19	“보복 두려워... 폭력 피해 학생선수 80% 침묵	제9조	운동선수, 신체폭력, 성폭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특별조사, 보복	타시도



10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19건(타시도 5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제15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26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서 나타났다.

10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 결과는 위의 <표-13>과 같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전북교육청에서 안전한 학교체육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익산 초등학교 1명이 온라인 수업에 참가하지 않아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도내 등교수업이 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초등 저학년의 기초문해력 부진해소를 위하여 전북교육청이 보조교사제 등을 운영하며, 외국국적 초·중학생에 아동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코로나 19 시대 이후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법 제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의 국정감사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전북 성비위 징계 교원이 30여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북대도 학생 상담지원 위

클래스 설치율이 전국 꼴지 수준이며, 지난해 전북지역 학생 46명당 1건 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안전에 관련한 내용으로 전북교육청에서 추진한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조치 관련하여 학생 신분 노출로 2차피해 논란이 있었으며, 고창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전북교육청에서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전주시 한 고교생이 교사 7명의 신체 등을 촬영하여 교육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또한 혁신교육 10년을 되짚어 보고 미래 혁신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타시도 사례로서 안산 시민단체에서서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외국국적 학생들과의 차별 지급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 요구가 있었으며, 편의점의 담배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의 허벅지를 더듬은 성희롱 사건에서 학교에서 은폐하고 여중생들은 2차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폭력 피해 학생선수의 80%가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표-14> 11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기사 제목	인권 조례	키워드	비고
1	전북교육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고1·2학년 39명 대상	제6조	맞춤형, 진로직업, 체험활동, 멘토와의 만남, 업무체험, 교육행정공무원, 교육행정기관, 실무체험, 교육공무원, 직업윤리, 진로탐색	전라북도
2	도교육청,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만들어간다	제20조	청소년, 권익증진, 청소년 정책, 청소년정책위원회, 민주주의, 체험 프로그램, 공간혁신, 방과후 활동, 성교육, 정책 반영	전라북도
3	전북교육청 2020 전라북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제6조 제25조	학교체육 활성화, 건강증진, 현장경기, 온라인 챌린지, 코로나19, 스포츠 축제, 사회적거리두기, 비접촉 분산 개최, 무관중	전라북도
4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설치 운영	제10조	청소년, 노동인권, 노동인권센터, 설치 운영, 특허, 실용신안,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 노동현장, 사례조사, 급여 미지급, 착취, 차별, 성적 고통, 상담, 구제활동, 직업훈련, 취업준비	전라북도
5	군산지역 A중학교 장애우 폭행·괴롭힘 파문	제10조	중학교, 장애우, 폭행, 집단 괴롭힘, 놀림, 강요, 지적장애, 언어장애, 출석 정지, 특별교육,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라북도
6	[달그락달그락] 안전 거리두기 일지, 청소년들에게 물으니	제23조 제25조	코로나19, 온라인수업, 격주등교, 학교 방역, 마스크 거리두기, 급식실 칸막이, 현장점검, 방역지침, 밀집도, 등하교대책, 시내버스 방문자 조사	전라북도
7	‘코로나19 확산에 전북도내 전 학교 밀집도 3분의 2로 격상	제5조 제10조 제25조	코로나19, 밀집도, 3분의2, 거리두기, 상향, 방역 강화, 등교수업, 원격수업, 온라인수업, 건강관리, 손소독제, 방역지침	전라북도
8	전북도교육청,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10조 제25조	석면, 안전, 교육환경, 안전용품, 보급, 석면관리용품, 쾌적한 학습환경	전라북도
9	도내 청소년 자살 방지 관심-노력 주문	제10조 제25조	청소년, 자살, 방지, 대책마련, 가정불화, 이성, 우울증, 진로, 코로나19, 고위험군 조사, 학교 보호, 수험생	전라북도
10	전북교육청, ‘안전교육 활성화 찾아가는 컨설팅’ 27일부터 추진	제10조	안전교육, 활성화, 컨설팅, 위기상황, 역량 강화, 재원배분, 안전점검, 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인식도 진단,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안전권, 건강권	전라북도

11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16건(타시도 6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6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제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에서 나타났다.

11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 결과는 위의 <표-14>와 같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전북교육청에서 2020 전라북도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들에 학교에서 안전한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군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인권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지역 중학교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폭행·괴롭힘 파문이 발생하였으며, 전북교육청에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였으며, 도내 청소년 자살 방지 및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으며, 전북교육청에서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기타 전북교육청에서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위하여 전북교육청이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타시도 사례로서 안전한 등굣길을 위하여 학교 둘레에 차를 옮기자는 운동이 있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등교 뒤 휴대전화를 일괄수거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학생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어도 10곳 중 5곳은 거부하였으며, 생활평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초·중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현하였으며, 아동·청소년들이 코로나블루(우울증) 주의를 요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제4장 연구결과 및 제언

I. 연구결과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총 7개월 동안 인권모니터링 활동이 언론보도기사 및 방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사항을 [전라북도인권조례] 중심으로 언론보도 기사를 월별모니터링 하였고, 그 결과를 내용 및 키워드 분석으로 하여 전라북도 및 타시도의 학생인권 관련 이슈를 분석하였다.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을 중심으로 수행한 인권모니터링 활동은 학생인권조례에 제시된 다양한 학생인권이 제대로 잘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권침해 환경 개선 및 학생인권 향상의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및 법률의 정비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보도기사 및 방송을 중심으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생인권을 살펴본 결과 제3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자유가 총 5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55건,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30건,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는 각각 15건,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8건,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건,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2건,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하여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대한 권리는 언론보도기사 및 방송에 월별로 지속적 보도 되었다.

둘째, 코로나 19 감염상황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의 조정에 따라 학생들의 밀집도 최소화를 위하여 개학이 늦어지고, 온라인 수업, 등교 제한 조

치 등의 반복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방역 문제 및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에 관한 학생인권 관련 기사 및 방송이 나타났다. 또한 학생인권 정책도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 지원, 밀집도 완화, 학교 방역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코로나블루(우울감) 및 건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보도기사와 방송에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은 여전히 다양한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북교육청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하여 체벌과 언어폭력에 대한 실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 부분에서 다양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언어 및 정서적 폭력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및 학교생활규정 정비를 통한 제도적 보장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에서 그 효과가 발휘되도록 인권교육과 지도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코로나 19 상황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많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철저한 방역 조치, 학교 안전시설 개선 및 점검, 등하굣길 시설확충 및 개선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북교육청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시설물의 확충과 도민들의 안전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약, 새로운 IoT 기술을 도입하는 등 인식개선 및 시설개선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등하굣길 안전문제는 한 기관의 노력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여야 하며,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단체·도민 모두가 협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치와 참여의 권리와 관련하여 전북교육청 및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 상황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행사 및 온라인 투표 등 다양한 방법과 홍보활동으로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라북도에서도 인문학콘서트, 혁신교육 10년, 학생자치위원회 등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정책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유관 단체의 많은 참여와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복 선택권의 보장과 학생들의 참여를 통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타시도 에서 발생하는 교복에 착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두 발·복장 및 휴대폰 일괄수거와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또한 시대착오적이고 주관적 기준에 의한 생활평점제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학교생활규정의 점검과 정비를 통하여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개성을 실현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의 내용은 지식이 아닌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권교육의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학생들의 폭력과 위협 관련한 이슈가 월별로 지속적으로 보도 되고 있음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에 관한 보도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예방 및 실태조사를 통한 학생인권 보장을 담보하는 부분도 필요 하지만, 학교폭력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잘 해결하는 사안도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II. 연구제언

학생인권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인권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학생인권모니터링은 코로나 19가 학생인권의 대부분의 화두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등교제한, 제한 등교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저하, 학력차, 건강, 가정학대 문제는 장기적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한 해결 방법으로 학급당 학생수 조정을 위한 법제화 촉구 등이 제기 되고 있으나 빠른 계획 이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라북도에서도 어울림학교를 추진하여 도시지역의 대규모 학교와 인근 소규모 학교를 같은 통학구로 묶어 학생 수 분산과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아직도 많은 소규모 학교가 있고, 학생이 없어 존폐위기에 몰린 학교도 있다. 이러한 학교를 활용하여 인구 감소로 어려워하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거 및 교통개선, 혁신학교, 학교별 특성 강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시골학교로 전학 대신 교환교류학습을 통한 시골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하여 체험을 통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생인권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학생선수를 포함한 학생들은 여전히 다양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을 경험 하였다.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을 보다 민주적인 해결절차와 과정에 초점을 둔 학생인권정책이 필요하

다.

학교폭력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에 관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학생인권침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학생인권침해 사안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한 과정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학생인권침해 관련 사안들을 드러내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련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대부분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교육청 내부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제도 및 기관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1차적으로 학생인권센터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법률화가 필요하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도 학생인권 교육에 노동인권을 포함하여 주요한 인권교육의 화두로 삼고 있다. 노동인권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적 접근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노동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동현장과 노동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발명하거나 창의적인 사항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생활규정의 점검과 개정이 시급하다. 타시도 에서 학생들의 개성실현의 권리와 아침 등교 시 교복착용 등 복장과 용모 지도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난한 논쟁 중의 하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많은 생활규정 및 평점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학교마다 상이한 학

교생활규정으로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각기 다른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이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악과 학교에 지속적으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협의하여 학교와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학생들의 노력과 함께 개성실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교와 교원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경우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 및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라북도에서도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검토하고, 진단하는 노력이야말로 인권침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인권실태의 현황과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정책 및 사업들이 학생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친화 교육을 뒷받침하는 인권친화 행정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북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 혁신학교, 다양한 학생 참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 모니터링에서 이러한 좋은 정책에 대해 신문기사에만 노출되고 있으며 방송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학생인권의 실효적 보장과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충청남도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제정에 대한 수많은 찬반 논쟁을 반면교사 삼아 학생인권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개선과 인권의식 향상 위하여 방송을 통한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교육청(2016).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연구원(2017). 『2017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 _____ (2019).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 경기도교육청(2015).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 구정화(2014).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 법과인권교
육연구
- _____ (2016). 일상의 인권경험이 초등학생의 인권인식에 미치는 영향. 시
민교육연구.
- 국가인권위원회(2016).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 교육부(2018).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향 및 이슈 탐색』.
- 권순정(2015). 학생인권조례시행 이후 학생들의 인권 경험: 서울 S 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 김경원(2012).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분석. 석사
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병준(2018).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발전과제. 법과사회.
- 김태호(2014). 부산지역 교육주체의 학생인권조례쟁점에 관한 인식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 남복희(2018). 한국사회의 혐오표현 실태조사.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철규(2015).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에서의 쟁점 분석: 강원도 사례를 대
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박현정 김한나 홍유정(2017).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학생인권조례의 사회적
이슈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
- 배유진·김광병(2017).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개선에 관한 연구. 법
과인권교육 연구

배한진, 진미정(2017).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고등학생 저녁시간 및 야간자율학습시간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서울시교육청(2015).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14). 2014 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2018). 장애관련 언론보도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 쟁점 분석 및 제언.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토론회 자료집.

전라북도교육청(201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전라북도교육청(2015).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2017). 『전라북도 학생인권 교육 실태조사』.

전라북도교육청(2018). 『전라북도 인권 모니터링 연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2019). 『2019 전라북도 인권모니터링 연구보고서』.

조금숙(2016).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 조사 개발 방향. 청소년학연구.

충남청소년인권+,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2019). 『2017 충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19). 민주주의의 사각지대 2019 학생인권을 말한다.

최숙·김숙(2015). 언론의 어린이 관련 인권보도에 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최형찬. (2011).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범한 철학.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201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부 록 - 월별 모니터링 활동일지

* 5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일지(전라북도)

제 목	최영규 전북도의원 “학생 1인당 10만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하자”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05.03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2371	작 성 자	이방희
인권범위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급식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최영규 전북도의원 “학생 1인당 10만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하자”</p> <p>☞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5.03 11:35 ☞ 댓글 0</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코로나19에 따른 교육재난을 극복하고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p> <p>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시설비와 기금적립금 등 약 219억원의 삭감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보다는 도내 약 21만7천명의 유·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약 217억)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이다.</p> <p>최영규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4)은 지난 1일 “도내 학생들은 물론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내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생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p> </div> </div> <p>코로나19에 따른 교육재난을 극복하고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p> <p>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시설비와 기금적립금 등 약 219억원의 삭감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보다는 도내 약 21만7천명의 유·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약 217억)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이다.</p> <p>최영규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4)은 지난 1일 “도내 학생들은 물론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내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생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p> <p>이는 코로나19 여파로 3차 개학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내 학생들은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 개학 역시 처음 시도되기에 많은 혼선과 혼란이 야기됐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주장이다.</p>		

	<p>특히, 이 주장은 지난달 7일 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국외연수비를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지원하는 연장선상 차원이다.</p> <p>최 의원의 주장에 따라 도의회는 의원 국외연수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어 주목을 받았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사용 역시 도민을 위한 위민정책을 펼치자는 것으로, 의미 있는 주장이라는 평가다.</p> <p>최영규 의원은 “현재 상황으로 교육예산의 일정부분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국외연수의 경우 국내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다른 국가의 상황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p> <p>아울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과 사용처가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과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있어, 추후에 있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기는 하지만, 현재보다 더 긴급하고 대규모의 재난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는 것.</p> <p>최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가 적극 나서겠다” 고 밝혔다.</p> <p>즉 ‘가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을 긴급 의안으로 발의해 이번 회기 내에 의결하고 향후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p> <p>아울러,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또한 촉구했다.</p> <p>최영규 의원은 “도내에는 약 1,500명에서 2천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 면서 “도청 역시 교육재난 상황을 고려해 이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재난을 극복하고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사용하자는 주장</p> <p>- 긴급하고 큰 재난상황에 대한 판단 여부</p> <p>-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 인가의 문제는 정책결정의 판단 문제임</p> <p>- 전라북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이미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델을 제시하였음</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도내 교육재난지원금 ‘뜨거운감자’ . . . 찬·반 팽팽/전라일보 (2020.05.13.)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189</p> <p>교육단체 “학생-학부모들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하라”/전북중앙 (2020.05.13.)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9432#092a</p> <p>전북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재난지원금 지급 거부/전주 KBS(2020.05.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9110</p> <p>전북형 학교농산물 꾸러미 전국 모델로 ‘확산’/뉴스프리존(2020.04.28.)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072</p>
타시도 사례	<p>울산시, 교육재난지원금 못받은 아이들도 재난지원금 지급/조선일보(2020.05.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2518.htm</p> <p>l’학생 1인당 10만 원씩’...강원도, 교육재난지원금 논의/SBS 뉴스(2020.05.2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9163&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

제 목	교복 선택도 학생 인권이다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05.10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3149	작 성 자	김혜지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성을 실현할 권리> - 자치와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복지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교복 선택도 학생 인권이다</p> <p>김혜지 기자 승인 2020.05.10 13:37 댓글 0</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div> <div style="flex: 2; padding-left: 10px;"> <p>전북지역 학생들의 교복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있다.</p> <p>하복은 블라우스 대신 생활티를, 가을·겨울에는 재킷 대신 후드집업으로 변하는 학교들이 속속 늘고 있다.</p> <p>학생들의 인권 존중은 물론 학교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있다.</p> <p>전주근영중학교는 갑갑한 재킷을 불편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를 진행했다.</p> <p>간절기에는 두꺼운 재킷보다 가디건을 입는 학생들이 종종 눈에 띄었지만, 규정위반 사항이었다.</p> <p>고민 끝에 생활복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후드집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학부모들과 학생들도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하게 됐다.</p> <p>전북지역 학생들의 교복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있다.</p> <p>하복은 블라우스 대신 생활티를, 가을·겨울에는 재킷 대신 후드집업으로 변하는 학교들이 속속 늘고 있다.</p> <p>학생들의 인권 존중은 물론 학교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있다.</p> <p>전주근영중학교는 갑갑한 재킷을 불편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를 진행했다.</p> <p>간절기에는 두꺼운 재킷보다 가디건을 입는 학생들이 종종 눈에 띄었지만, 규정위반 사항이었다.</p> <p>고민 끝에 생활복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후드집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학부모들과 학생들도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p> </div> </div>		

	<p>를 거쳐 최종 결정 하게 됐다.</p> <p>장수중학교는 지난 2018년에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듬해 신입생부터 입기 시작했다. 여름에는 블라우스 대신 학교 마크가 박힌 생활티로 대체하는 등 학생 중심으로 바뀌나갔다.</p> <p>전주덕진중학교도 지난 2012년부터 하복의 블라우스 대신 생활티로 교체한 데 이어 올해부터 학생들에게 후드집업 선택권을 제공했다. 하의도 반바지, 치마, 긴바지 중 택할 수 있게 했다.</p> <p>올해 첫 후드집업 구매 선택권을 부여한 결과, 덕진중 1학년 학생 162명 중 123명(76%)이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p> <p>덕진중 관계자는 “학생들이 3년 내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계절 영향을 받아 옷이 불편하면 생활이 힘들지 않겠느냐”며 “업체에 의뢰해 디자인을 받고, 재질은 겨울철 보풀이나 정전기 최소화, 보온성을 꼼꼼히 신경 썼고 여름에는 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줄 것을 업체에 요구했다”고 말했다.</p> <p>덕진중은 학생들 사이에서 하복 디자인에 대한 건의사항이 제기돼 이에 대해서도 조만간 논의할 계획이다.</p> <p>도내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같은 교복 변화 추세는 학생들의 인권 존중과 학교 자치문화 확산으로도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 교복 선택의 다양화를 통한 학생들의 인권존중과 학교 자치문화 확산
쟁점사안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 선택권을 다양화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교복을 착용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다양화 하여, 학생들의 개성을 신장하고 선택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자치문화 확산과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지도 사례	<p>고정관념 깬 한복 교복/연합뉴스(2020.05.07.)</p> <p>https://www.yna.co.kr/view/PYH20200507108200013?input=1180m</p>

제 목	도교육청,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맞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추진		
출 처	전라일보	기사날짜	2020.05.15
기사주소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354	작 성 자	이수화
인권범위	- 교육에 관한 권리<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복지에 관한 권리<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div> <div> 도교육청,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시민교육 추진 <small>이수화 기자 승인 2020.05.15 2면</small> </div> <div> <div>댓글 0</div> <div>트위터</div> <div>페이스북</div> </div> <div> <div>+</div> <div>-</div> <div>인쇄하기</div> </div> </div> <p>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한다.</p> <p>도교육청은 중고등학생의 교육과정 연계 5.18 계기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학생 중심 활동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p> <p>이를 위해 연대와 대동의 주먹밥 나눔, 학생회 주관 토론회, 5.18 현장 체험 같은 활동과 교과연계 수업 등 계기교육 자료를 학교에 안내했다.</p> <p>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한다.</p> <p>도교육청은 중고등학생의 교육과정 연계 5.18 계기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학생 중심 활동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p> <p>이를 위해 연대와 대동의 주먹밥 나눔, 학생회 주관 토론회, 5.18 현장 체험 같은 활동과 교과연계 수업 등 계기교육 자료를 학교에 안내했다. 16일에 이어 23일은 ‘민주야 소풍가자! 세종, 함께 걷다’를 진행한다. 민주시민교육 연구회와 추진단, 도내 중고등학생은 전북대를 비롯한 전북 지역 민주화 운동 자취를 돌아본다.</p> <p>당시 전북대에서 계엄군에게 사망한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 생애를 따라 걷는다.</p> <p>28일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선 임종진 사진작가 특강 ‘사진으로 치유하는 5.18 상처’를 연다.</p>		

	<p>시민단체와 공동 진행하는 ‘함께 보고 다시 생각하는 5.18영화제’와 도내 고등학생 100명이 참여하는 ‘오월, 학생원탁토론’도 있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부 계획은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 5월 민주항쟁 계기로 민주시민교육 소통과 협력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학생들이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민주시민교육은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p> <p>-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5·18 민주화운동을 조명하고 역사적인 인식 개선을 통한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역사를 기념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향후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및 동학농민혁명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p> <p>-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내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우리의 오월을 기억하고 기념하다” 도교육청,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 민주시민교육 강화/전주매일신문(2020.05.15.) http://www.jjmaeil.com/news/view.asp?idx=113112</p> <p>전북교육청,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맞아 민주시민교육 추진/전민일보(2020.05.16.)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48</p> <p>도교육청,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맞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추진/전북도민일보(2020.05.17.)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027</p> <p>전북교육청, 5·18 40주년 ‘민주시민 교육’...영화제·토론회 등/연합뉴스(2020.05.15.)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5073200055?input=1179m</p>
타시도 사례	<p>전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 ‘5·18 위원회’ 운영/광주일보(2020.05.12.)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89209200695344006</p> <p>부산교육청, ‘제1회 민주시민교육협의회’ 개최/쿠키뉴스(2020.05.25.)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91302</p>

제 목	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학교 문 마침내 열린다		
출 처	전민일보	기사날짜	2020.05.19
기사주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360	작 성 자	이재봉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학교 문 마침내 열린다</p> <p>이재봉 기자 송인 2020.05.19 17:38 댓글 0</p> <hr/> <p>20일 도내 고교 3학년과 소규모 초등학교 등교 개학 등교 개학은 코로나 확산 우려로 5번 미뤄진 끝에 79일만에</p> <p>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학교 문이 20일 전북지역 고교 3학년과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개학을 시작으로 마침내 열린다.</p> <p>이날 등교 개학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5번 미뤄진 끝에 79일만에 이뤄진 것이다.</p> <p>앞서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 개학을 3월 2일에서 같은 달 9일·23일, 4월 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9일로 네 번째 개학을 연기하면서 등교 대신 사상 초유의 학년별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도입했다.</p> <p>이달 초 코로나19 신규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교육부는 지난 13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우려가 고개를 들자 등교 개학을 일주일 또 연기했다.</p> <p>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학교 문이 20일 전북지역 고교 3학년과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개학을 시작으로 마침내 열린다.</p> <p>이날 등교 개학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5번 미뤄진 끝에 79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 개학을 3월 2일에서 같은 달 9일·23일, 4월 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9일로 네 번째 개학을 연기하면서 등교 대신 사상 초유의 학년별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도입했다.</p> <p>이달 초 코로나19 신규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교육부는 지난 13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우려가 고개를 들자 등교 개학을 일주일 또 연기했다.</p> <p>19일 도교육청은 고교 3학년과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함에 따라 교내 밀집도 최소화, 학교 방역 등을 담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유·초·중·고등학교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p> <p>이날 고교 3학년 등교가 이뤄지는 고등학교는 총 133개교이며 특수학교 고교3학년 과정 10개교도 20일 등교수업이 이뤄진다.</p> <p>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총 249개교다. 이 중 소규모 초등학교가 170개교, 중학교 79개교다. 소규모 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 170곳 가운데 144곳도 20일 등교수업을 실시한다.</p> <p>단설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경우 오는 27일 등교한다. 이날 등교하는</p>		

	<p>학생수는 고3 17,874명, 특수학교 고3 과정 144명을 비롯해 유치원 971명, 초등 5,343명, 중학교 1,787명이다.</p> <p>우선 아침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체크사항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37.5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등교를 할 수 없다.</p> <p>학교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발열 체크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 발열 검사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바로 선별진료소로 가서 진료와 검사를 받는다.</p> <p>특히 모든 교육 활동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학생들은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 교내에선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학생도 최대한 분산해 수업을 받는다. 학생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은 반을 2개로 나눠 수업해야 한다.</p> <p>이와 함께 출입구와 급식실, 복도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밀집도를 최소화하며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안은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 수업 시간을 5분 이내에서 줄이는 등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렵게 맞은 등교수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로 학교 운영이 초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긴장의 끈을 더욱 죄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사태로 고등학교 3학년과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 개학 -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활동과 학사운영이 병행되어야 함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라는 비상상황에서 개학하는 학생들에 대해 대한 철저한 방역과 안전수칙으로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저질환, 만성질환, 호흡기 질환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전염 방지를 위한 가정학습 출석인정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80일만에 열린 교문, 고3 및 소규모 학교 학생들 등교 시작/전북도민일보(2020.05.19.)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351</p> <p>등교수업 엇갈린 반응, 심사숙고 필요/전북중앙(2020.05.19.)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9832</p> <p>등교 개학 537곳/전주 MBC(2020.05.18.) https://www.jmbc.co.kr/news/view/13923</p> <p>80일 만의 등교...체온 재고 마스크 쓰고 수업_수퍼 대체/JTV(2020.05.20.) https://jtv.co.kr/2012/?r=home&c=10/70&p=13&sort=uid&orderby=desc&uid=2134992</p>
타시도 사례	<p>학습권, 학사일정, 수능?...학생들의 생명·안전보다 우선할 순 없어/세계일보(2020.05.20.)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20524975</p> <p>고3 등교 수업 시작...기대반 걱정반/KBS(2020.05.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0981</p>

제 목	학습더딤 초등학생 기초학력 집중 지원		
출 처	새 전북신문	기사날짜	2020.05.21
기사주소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4388	작 성 자	공현철
인권범위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학습더딤 초등학생 기초학력 집중 지원</p> <p>전북교육청, 전주 초등 33교에 전주교대생 100명 보조교사 배치</p> <p>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05월 21일 15시56분</p> <p>전라북도교육청이 학습더딤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실시한다.</p> <p>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운영하는 전주관내 초등 33개교 교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초등학생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등에 대해 안내했다.</p> <p>앞서 전북교육청은 3월부터 전주교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수강신청을 통해 전주교대 2~3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신청을 받았다.</p> <p>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예비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와 운영학교·예비교원 만남 등 사전 활동이 진행된다.</p> <p>이후 보조교사들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전주관내 희망 초등학교 33개교에 배치돼 정규수업 중 보조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습더딤 학생들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p> <p>전라북도교육청이 학습더딤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실시한다.</p> <p>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운영하는 전주관내 초등 33개교 교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초등학생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등에 대해 안내했다.</p> <p>앞서 전북교육청은 3월부터 전주교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수강신청을 통해 전주교대 2~3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신청을 받았다.</p> <p>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예비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와 운영학교·예비교원 만남 등 사전 활동이 진행된다.</p> <p>이후 보조교사들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전주관내 희망 초등학교 33개교에 배치돼 정규수업 중 보조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습더딤 학생들을 집</p>		

	<p>중 지원할 계획이다.</p> <p>세부적으로 △초등 저학년 첫걸음 지원△1~6학년 기초학습(3R's) 지원 △교과학습 향상 지원 △학습고민·상담 지원 △학습코칭 지원 등 학교별 활용 계획에 따라 운영시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p> <p>예비교원이 학기 중이거나 운영학교 방학 중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보조교사들은 회당 2시간씩 총 29회(58시간)에 걸쳐 활동하게 되며, 활동 완료 후에는 30시간의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해 준다.</p> <p>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전주교대생들이 참여하는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초등학생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즐거운 배움이 있는 교실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더딤 학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실시 - 이를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더딤 학생들의 유형별 원인 진단에서부터 보정·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맞춤형 책임교육이 필요함 -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의 평가와 성과를 중심으로 중등으로의 확대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학습더딤 초등학생 기초학력 집중 지원한다/전민일보(2020.05.21.)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537</p> <p>학습더딤 초등학생 기초학력 지원/전주매일신문(2020.05.21.) http://www.jjmaeil.com/news/view.asp?idx=113453</p> <p>기초학력보조교사제/전주 MBC(2020.05.25.) https://www.jmbc.co.kr/news/view/13994</p>
타시도 사례	

제 목	민식이법 시행 2개월 안전시설 확충은 거북이 걸음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05.24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893	작 성 자	김기주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민식이법 시행 2개월 안전시설 확충은 거북이 걸음 <small>김기주 기자 승인 2020.05.24 14:37 댓글 0</small>		
	 <p>스쿨존 내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시킨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전주에서 발생한 국내 첫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p> <p>스쿨존 내에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지만 처벌 규정이 강화된 만큼 그에 상응한 도로 안전 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p> <p>스쿨존 내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시킨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전주에서 발생한 국내 첫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p> <p>스쿨존 내에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지만 처벌 규정이 강화된 만큼 그에 상응한 도로 안전 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p> <p>민식이법의 본격 시행으로 모든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같은 맥락에서</p>		

	<p>나온다.</p> <p>범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반면 스쿨존 내 도로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엇박자 행보가 장기화 될 경우 자칫 범위반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p> <p>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천15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7%인 38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호기 설치도 273곳(1월 기준)에 그쳐 설치율이 26.8%에 머무르고 있다. 스쿨존 내 무단횡단을 방지할 만한 안전펜스가 설치된 곳도 많지 않다.</p> <p>전북경찰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사고위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시설물 설치를 순차적으로 진행,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스쿨존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p> <p>그러나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기대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큰 실정이다. 학교 앞 도로가 편도 2차선 이상이 대부분이고, 출퇴근 시간 때는 차량흐름을 고려하다 보면 제한속도(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p> <p>이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 “차량 운행속도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도로구조와 과속방지턱, 안전펜스와 신호등 추가설치,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p> <p>도내 지역에서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 도내 스쿨존 내 과속 적발 건수가 하루 평균 250여 건에 달하고,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 역시 하루 40건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 이같은 지적에 설득력을 싣고 있다.</p> <p>실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 건수는 총 5천583건,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는 모두 822건으로 집계됐다.</p> <p>예산을 이유로 사실상 안전한 스쿨존 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이 외면되는 사이 이번 사망사건은 물론, 2017년 17건(22명 부상), 2018년 20건(20명 부상), 지난해 12건(12명 부상) 등 총 50건의 스쿨존 사고가 발생해 54명의 아동들이 부상을 당했다.</p> <p>전북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뒤 안전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고 말했다.</p>
내용분석	-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보호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및 쟁점사안	<p>확충이 시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운행속도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도로구조와 과속방지턱, 안전펜스와 신호등 추가설치,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함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안전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교육, 인력 배치 등을 통한 안전 확보도 병행되어야 함 - 학교 단위에서도 안전시설 및 위험사항을 점검하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시행 얼마 안 된 민식이법, 관련 지침은 2016년 기준/전북일보(2020.05.25.)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616</p> <p>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조속히 개선해야/전북일보(2020.05.25.)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588</p> <p>전북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3.7% 불과/전북중앙(2020.05.25.)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276#092a</p> <p>스쿨존서 두살배기 참변... 민식이법 적용/JTV(2020.05.22.) https://jtv.co.kr/2012/?r=home&c=10/70&sort=uid&orderby=desc&where=subject%7Ctag&keyword=%EC%8A%A4%EC%BF%A8%EC%A1%B4+%EC%95%88%EC%A0%84%EC%8B%9C%EC%84%A4&uid=213</p>
타시도 사례	<p>서울 초교 등하굣길에 경찰 800여명 배치...스쿨존 집중 단속/연합뉴스(2020.05.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6063600004</p> <p>경기도,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 위해 712억 투자/경인방송(2020.05.07.) http://www.ifm.kr/news/278900</p>

제 목	유치원·초·중학교 27일 등교 철저 방역 급선무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05.25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060	작 성 자	이휘빈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유치원·초·중학교 27일 등교 철저 방역 급선무</p> <p>인 이휘빈 기자 © 송인 2020.05.25 18:22</p> <p>오는 27일 유치원과 초1·2, 중3, 고2학년 학생들이 추가 등교개학한다.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이 등교하는만큼 학교들과 교육계는 긴장 속에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p> <p>25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순차적 등교수업에 따라 도내에서 총 955교(원)서 8만5천230명이 등교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319원에서 2만27명, 초등학교 252교에서 12학년 3만5천97명이 등교한다. 중학교 10교 3학년 1만5천736명, 고등학교 133교서 2학년 1만7천676명, 특수학교 10곳 834명도 이날 등교한다.</p> <p>유치원과 학교들은 학사운영과 방역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등교수업 운영 현황 예시를 토대로 심화한 대책들을 준비했다. 이들은 먼저 전체 시설 공간을 특별소독하고, 향후 시설 소독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발생시 시나리오별 조치 대응, 의심환자 일시적 관찰실 준비, 발열체크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구비, 급식 시 지침등도 마련했다.</p> <p>오는 27일 유치원과 초1·2, 중3, 고2학년 학생들이 추가 등교개학한다.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이 등교하는만큼 학교들과 교육계는 긴장 속에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p> <p>25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순차적 등교수업에 따라 도내에서 총 955교(원)서 8만5천230명이 등교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319원에서 2만27명, 초등학교 252교에서 1·2학년 3만5천97명이 등교한다. 중학교 10교 3학년 1만5천736명, 고등학교 133교서 2학년 1만7천676명, 특수학교 10곳 834명도 이날 등교한다.</p> <p>유치원과 학교들은 학사운영과 방역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등교수업 운영 현황 예시를 토대로 심화한 대책들을 준비했다. 이들은 먼저 전체 시설 공간을 특별소독하고, 향후 시설 소독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발생시 시나리오별 조치 대응, 의심환자 일시적 관찰실 준비, 발열체크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구비, 급식 시 지침등도 마련했다.</p> <p>전주시 A초등학교 교사 최모(39)씨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예시 의</p>		

	<p>에도 선제적 방역조치 및 교실 내 거리두기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 수업시간 탄력 조정방법, 급식실 줄서기 지도, 돌봄사각지대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p> <p>도교육청 역시 지난 주말 학교 현장을 찾아 시설을 점검하며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들의 운영방안과 방역 취약점 등에 대해 점검했으며 이에 관련 교직원들에게 현재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수렴했다” 고 말했다.</p> <p>김승환 교육감은 25일 “방역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꼼꼼하게 추진하되 현장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며 “격일·주 등교, 급식시간 배분, 수업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한다” 고 전했다. 이어 “학교가 준비한 학사일정을 진행중에 문제가 생기면 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겠다” 고 밝혔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코로나 19사태로 유치원, 초등 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의 개학이 이루어졌음</p> <p>- 학교 방역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함</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역 및 여러 대책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야 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코인노래방·PC방 등 개학 앞둔 학생들 ‘감염 우려’ /전북일보(2020.05.25.)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617</p> <p>전북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인정 ‘34일’로 확대/전북일보(2020.05.26.)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94</p> <p>전유·초·중·고 전학교 등교… 코로나19 방역 ‘시험대’ /전북도민일보(2020.05.25.)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216</p> <p>“불안하지만 방법이 없다” 오늘 2차 등교개학/새전북신문(2020.05.26.)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4736</p> <p>“도교육청, 등교수업 모든 책임질 것”/전북중앙(2020.05.27.)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274#092a</p> <p>내일 초등 1, 2학년 등 8만 6천여 명 추가 등교/JTV(2020.05.26.) https://jtv.co.kr/2012/?r=home&c=10/70&p=2&sort=uid&orderby=desc&uid=21351</p> <p>고2·중3·초1~2·유치원생도 내일 등교/전주 MBC https://www.imbc.co.kr/news/view/14019</p>
타시도 사례	<p>2차 등교개학 첫날 대구 오성고 고3 학생 코로나19 확진(종합)/연합뉴스 (2 0 2 0 . 0 5 . 2 7)</p> <p>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017951053?input=1195m</p>

* 5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일지(타시도)

제 목	‘속옷 세탁’ 울산 초등학교 교사 직위해제		
출 처	세계일보	기사날짜	2020.05.04
기사주소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03515757	작 성 자	양다훈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속옷 세탁’ 울산 초등학교 교사 직위해제</p> <p><small>입력 : 2020-05-03 22:52:33 수정 : 2020-05-04 10:50:33</small></p> <p>! 울산시교육청 “모든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p>  <p>▲ 울산시교육청 전경.</p> <p>초등학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하라는 숙제를 시킨뒤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과 행태를 보인 울산 초등학교 교사 A씨(남)가 직위해제됐다.</p> <p>3일 울산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 <p>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사건 인지 즉시 즉시 112 신고 후 A 씨를 담임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임을 교체했다”라며 “이후 28일부터 출석 체크와 학습 과제 안내 등은 모두 교체된 담임 교사가 실시했고 A 씨가 속한 학급 밴드는 이날 폐지됐다”라고 설명했다.</p> <p>초등학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하라는 숙제를 시킨뒤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과 행태를 보인 울산 초등학교 교사 A씨(남)가 직위해제됐다.</p> <p>3일 울산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 <p>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사건 인지 즉시 112 신고 후 A 씨를 담임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임을 교체했다”라며 “이후 28일부터 출석 체크와 학습 과제 안내 등은 모두 교체된 담임 교사가 실시했고 A 씨가 속한 학급 밴드는 이날 폐지됐다”라고 설명했다.</p> <p>울산시교육청은 또 A 씨가 체육 교사로 배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로 체육 교사로 배정된 사실이 없다”라</p>		

	<p>고 해명했다.</p> <p>A씨가 거짓 서류를 꾸며 병가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연가’ 처리 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 병가 사실이 없다” 라고 설명했다.</p> <p>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직원 예방 교육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p> <p>앞서 지난달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와 관련한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논란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p> <p>해당 글에 따르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교사 A씨는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하라는 숙제를 내준 뒤 학부모들로 하여금 그룹형 소셜미디어인 ‘밴드’에 인증사진을 올리게 했다.</p> <p>이에 <u>밴드에 사진이 게재되면 A씨는 “매력적이고 섹시하다”, “속옷 예쁘다”,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 다소 부적절한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아울러 A씨는 이전에도 학생들에게 이런 숙제를 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u></p> <p>빨래 자체를 시킨 것은 초등학생들이 자기 혼자서 빨래를 함으로써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굳이 ‘팬티’만 고집한 것과 ‘섹시’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코로나 19로 온라인 학습과제에 초등학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하라는 숙제를 시킨 뒤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과 행태를 보인 울산 초등학교 교사 A씨(남)가 직위해제</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초등학생 교사는 아이들의 인권 감수성이 타인에 비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함</p> <p>- 또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결정과정에서 신속하고 원칙적인 처리가 필요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p>시민단체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검찰 고발 / JTBC 뉴스룸 (2020.05.13.) https://www.youtube.com/watch?v=EEVY_9TQI24</p>

제 목	#스쿨미투2년...#누구도_처벌받지_않았다		
출 처	경향신문	기사날짜	2020.05.05
기사주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50600035&code=940100	작 성 자	최민지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스쿨미투2년...#누구도_처벌받지_않았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기사내용	<div> <div> <div> <div> <div>f</div> <div>twitter</div> <div><</div> </div> <div> <div>2</div> </div> </div> <div> <div>일렉 : 2020.05.05 6</div> </div> </div> <div>  <p>4일 오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스쿨미투 사건의 가해자인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 교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북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p> <p>전국 100개 학교로 변했지만 스쿨미투 시초였던 용화여고 형사처벌 받은 가해자 '0명' 교사 18명 중 15명 교직 유지</p> <p>2018년 봄,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창문에는 색색의 종이가 붙었다. “위드유” “위캔두애니씽”...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의 시작이었다. 2년이 지났다. <u>스쿨미투는 여전히 ‘진행형’</u>이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4일 서울북부지검에 스쿨미투 가해자인 용화여고 전 교사 1명의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지난 3일까지 8400여명으로부터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p> <p>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8명 중 유일하게 수사 대상에 올랐다. 2018년 12월 북부지검은 1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후 재수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진정이 잇따랐고, 검찰은 피해자 항고가 없음에도 이례적으로 재수사를 벌였</p> </div></div>		

다.

2018년 4월 용화여고에서 시작된 스쿨미투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100개 학교가 스쿨미투에 동참했다. 스쿨미투의 시초가 된 용화여고의 상황은 어떨까. 교사 18명 중 15명은 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은 뒤 현재 학교에 복귀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다. 용화여고 관계자는 “학교 재단 용화학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권고대로 (징계를) 모두 처리했다”고 했다. 당시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파면과 해임 각 1명·계약해지 1명·정직 3명·견책 5명·경고 9명 등 징계를 권고했다. ㄱ씨는 이때 파면됐다. 상황이 길어지면서 피해 고발자 대부분은 진술을 철회, 현재는 1명만 남았다.

다른 교내 성폭력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상당수가 10대임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팬티 빨기’를 과제로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학교라는 공간 특성이 문제 해결에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용화여고 졸업생인 오예진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대표는 “스쿨미투는 (피해가) 일대일이 아니라 한 명 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오히려 입증이 어렵다”며 “피해자가 모두 같은 학년인 것도 아니고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몽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명 고발에 반복되는 진술 어린 피해자들 지치게 만들어 하루빨리 가해자 재수사를”

2년이라는 시간도 피해자들을 지치게 했다.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20대 초중반 피해자들에게 반복되는 진술 요청은 버거운 일이었다. 졸업 후 수년이 지나 재학생과의 소통 창구가 없어 의견 취합도 어려웠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실명 고발이 요구된 점도 문제였다. 스쿨미투를 계기로 탄생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공동대표는 “스쿨미투가 관심과 지지를 받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10~20대 피해자들이 충분히 조력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부분 익명으로 이뤄진 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고 이에 연대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살아 있다. 시민모임은 6일부터 멤버 40명이 돌아가면서 북부지검 앞에서 기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시민모임의 한 활동가는 “작

	<p>년에 모임이 좀 주춤했지만 올해 의기투합해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며 “탄원서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p> <p>오 대표는 “우리가 첫 학교였고, 다른 학교로 (스쿨미투가) 퍼지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한 일도 아니었다”며 “재수사를 통해 가해 교사가 기소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당장은 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p> <p>양 대표도 “스쿨미투 운동은 스쿨 페미니스트들이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고, 학교 현장의 문제가 담론으로 제기되도록 만들었다”며 “청소년이 정치 세력화되고 주체로서 변화를 이야기하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스쿨미투가 관심과 지지를 받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10~20대 피해자들이 충분히 노력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함</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사건발생시 정부는 '스쿨미투'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실효성은 의문임</p> <p>-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학교(기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평등과 존중에 기반을 둔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스쿨미투 피해자 보호 철저 및 발생 학교공동체의 회복교육을 강화하여야 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불기소처분·벌금형·감감이 징계... ‘스쿨미투’는 현재진행형/노컷뉴스(2020.05.07.)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4930</p> <p>“대전S여중·고 스쿨미투 부실감사 규탄, 교육감은 사과하라”/오마이뉴스(2020.05.20.)</p> <p>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2839&CMPT_CD=P0001</p>
타시도 사례	

제 목	청각장애인에 학습권 길 터준 ‘립뷰마스크’		
출 처	경향신문	기사날짜	2020.05.21
기사주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11630001&code=940100	작 성 자	이종섭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청각장애인에 학습권 길 터준 ‘립뷰마스크’ 이종섭 기자 namad@kyunghyang.com</p> <p>입 보이는 투명마스크.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제공</p> <p>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의 언어재활 치료를 하는 ‘하늘샘치료교육센터’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영을 중단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였다. 휴원 기간이 길어지자 제때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와 부모들의 염려가 커졌다. 결국 한 달여 만에 재개원을 결정했지만 곧 어려운 문제에 빠졌다. 감염 예방을 위해 언어재활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 학생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정확한 입 모양을 보여줘야 하는데 방역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도저히 수업이 불가능했다.</p> <p>교사 입 보이는 마스크 제작 등교 시점 맞춰 보급 확산</p> <p>입 보이는 투명마스크.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제공</p> <p>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의 언어재활 치료를 하는 ‘하늘샘치료교육센터’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영을 중단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였다. 휴원 기간이 길어지자 제때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와 부모들의 염려가 커졌다. 결국 한 달여 만에 재개원을 결정했지만 곧 어려운 문제에 빠졌다. 감염 예방을 위해 언어재활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 학생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정확한 입 모양을 보여줘야 하는데 방역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도저히 수업이 불가능했다.</p>		

	<p>이번에는 비말이 튀는 것을 온전히 차단할 수 없어 감염 우려가 나왔다. 센터에서는 궁리 끝에 방역마스크와 식품용 위생마스크를 결합해 입 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손수 만들었다. 효용성을 확인하고 나서는 수작업으로 만든 마스크를 필요한 곳에 나눠주고 제작 방법도 공유했다.</p> <p>등교수업을 앞두고 이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일선 학교였다. 청각장애 학생 상당수가 일선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는다. 등교 후 교사들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해야 하기 때문에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었다.</p> <p>자체 제작한 투명 마스크를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이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지역의 예비 사회적기업인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가 동참하면서 ‘교사용 립뷰(Lipview)마스크 제작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마스크 생산 기업 ‘위텍코퍼레이션’이 KF94 마스크 2만장을 무상 지원하고, (사)사랑의달팽이 등 단체가 모금을 통해 제작 비용을 후원했다.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에는 지난 15일부터 매일같이 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찾아와 ‘립뷰마스크’를 만들고 있다.</p> <p>등교 시점에 맞춰 21일까지 마스크 3000장이 전국에 무상 배포됐다. 국내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명 마스크가 학교에 보급되기는 처음이다.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는 홈페이지(lifeplanhd.kr)를 통해 마스크 제작 방법과 도안, 재사용 방법 등도 안내한다. 조성연 센터 대표는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작한 일에 많은 분이 도움을 주고 있다”며 “학교 안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장애학생 학습권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립뷰마스크 제작하여 학교 안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배려하였음</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하여 립뷰마스크를 제작하거나 코로나 19사태로 등교하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사용 립뷰 마스크 지원/경북인터넷뉴스 (2020.05.26.) http://gbn.co.kr/index.do?menu_id=00000431&menu_link=/front/news/icms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0913</p>
타시도 사례	

* 6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일지(전라북도)

제 목	학교구성원 '고3 야간자율학습' 찬·반 논쟁		
출 처	전라일보	기사날짜	2020.06.01
기사주소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590	작 성 자	이수화
인권범위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학교구성원 '고3 야간자율학습' 찬·반 논쟁 찬 "코로나로 학습량 절대적 부족 입시에서 졸업생보다 크게 불리" 반 "건강보다 더 중요한건 없어"</p> <p>이수화 기자 승인 2020.06.01 5면</p> <p>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p> <p>전북도교육청의 고3 야간자율학습(야자) 허용을 둘러싼 도내 교육계 온도차가 크다.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대입'과 '안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다.</p> <p>전북도교육청은 등교수업을 앞둔 지난 달 중순, 고3을 비롯한 고교 야자와 방과후 수업(방과후) 시행여부를 단위학교별 형편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p> <p>보충수업 성격인 방과후는 수업시수 제한(현직교원 학기 중 주 15시간 이내)을 한시적으로 풀었다. 둘 다 허용한 셈이며 방과후는 야자 시간에 진행할 수 있다.</p> <p>전북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고등학교 고3 야자 운영현황(5월 26일 기준)을 보면 133곳 중 40.6%에 해당하는 54곳이 운영하고, 고3 1만 7천 93명 가운데 25.3%인 4천 327명이 참여한다.</p> <p>야자에는 도내 고3 4분의 1가량만 참여하나 이는 지난 달 기준이고 이달부터 야자를 시작하는 곳이 많아 참여율은 오를 전망이다.</p> <p>전북도교육청의 고3 야간자율학습(야자) 허용을 둘러싼 도내 교육계 온도차가 크다.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대입'과 '안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다.</p> <p>전북도교육청은 등교수업을 앞둔 지난 달 중순, 고3을 비롯한 고교 야자와 방과후수업(방과후) 시행여부를 단위학교별 형편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p> <p>보충수업 성격인 방과후는 수업시수 제한(현직교원 학기 중 주 15시간 이내)을 한시적으로 풀었다. 둘 다 허용한 셈이며 방과후는 야자 시간에 진행할 수 있다.</p> <p>전북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고등학교 고3 야자 운영현황(5월 26일 기준)을 보면 133곳 중 40.6%에 해당하는 54곳이 운영하고, 고3 1만 7천 93</p>		

	<p>명 가운데 25.3%인 4천 327명이 참여한다.</p> <p>야자에는 도내 고3 4분의 1가량만 참여하나 이는 지난 달 기준이고 이달부터 야자를 시작하는 곳이 많아 참여율은 오를 전망이다.</p> <p>코로나19가 지속되다보니 야자 시행에 대한 구성원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p> <p>찬성하는 쪽은 코로나19로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이나 경제력으로 인한 학력차를 이유로 든다.</p> <p>전주 지역 고교 3학년 담임교사는 “우리 학교는 이달부터 3학년 야자와 방과후를 시작했고 신청율이나 참석율은 높은 편”이라며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고3 학생들이 입시에서 졸업생보다 크게 불리하다”고 밝혔다.</p> <p>이어 “수업하면서 묻는 답하는 과정을 원격수업으로 석 달 가까이 하지 못했다. 진도 빼기도 부족한데 배운 내용을 정리하려면 연계교재도 해야 한다”며 “버겁더라도 야자와 방과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p> <p>수도권이나 경제력이 있는 가정 학생들이 야자와 방과후 대신 사교육을 활용한다면 전북 지역 혹은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 학생들과의 학력차가 커질 거란 의견도 있다.</p> <p>전주 지역 고3 학생은 “우리 학교는 3학년만 해당 활동을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만 한다. 학생들은 점점 코로나19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학교는 자리를 떴는 등 거리두기를 해 참여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p> <p>다른 한쪽에선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으며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무작정 불리한 건 아니라고 본다.</p> <p>전주 지역 한 고3 학부모는 “아이가 집에선 집중이 안 된다니 보내긴 하는데 걱정된다. 우리 지역 상황은 양호하나 안전지대는 없다. 야자를 금지하는 지역이 왜 있겠나”라며 “야자와 방과후 참여는 자율 아닌 자율이다. 신청 안 하면 왜 안 하나, 얼른 신청해라 그리고 안 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털어놨다.</p> <p>전주 지역 고교 교사는 “고3이 치를 2021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비중은 80%, 정시 비중은 20% 선이고 우리 지역을 비롯한 재학생 7,80%는 학생부 기반 수시로 대학에 간다. 수능은 졸업생들이 주로 노리고 수시가 그들(재학생)만의 리그라고 할 때 유불리를 따질 것도 아니다”라며 “졸업생이 수시에 응시하더라도 코로나를 겪은 이들과 아닌 이들 학생부는 분명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p>
--	---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야자와 방과후 운영 방침은 학습량이 부족하다는 학교 측 목소리를 듣고 정했으며 원하는 학교와 학생만 참여토록 했다. 강제가 아니며 방역에 힘쓰고 있다” 고 답했다.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에 상황에 따른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 학습을 고3에 대하여 허용함 -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 운영 방침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찬반론이 존재하고 있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 운영에 대하여 학습들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교육청에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강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가 뒷받침 되어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일부학교 등교개학 첫날부터 야간자율학습시행 . . . 중단해야”/전북중앙(2020.05.21.)</p> <p>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058#092a</p> <p>“학생들 학교 머무는 시간 최소화해야” “/전라일보(2020.05.21.)</p> <p>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827</p> <p>“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줄여야 한다”/전민일보(2020.05.21.)</p> <p>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534</p>
타시도 사례	<p>부산시교육청, 고3 희망학생 대상 야간자율학습 실시/뉴시스(2020.06.17)</p> <p>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7_0001062643&cID=10899&pID=10800</p> <p>고교 야간자율학습 “미룰 수 없다” vs “코로나19 전파 우려” /강원도민일보(2016.06.24.)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8412</p> <p>경남도교육청, 6월 말까지 학교 야간자율학습 금지/한겨레(2020.06.01.)</p> <p>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47343.html</p> <p>충북교육청, 고3 야간 자율학습 허용/노컷뉴스(2020.06.03.)</p> <p>https://www.nocutnews.co.kr/news/5355017</p> <p>경남교육청, 6월까지 야간자율학습 전면 금지…고3 제한적 허용/연합뉴스(2020.05.31.)</p> <p>https://www.yna.co.kr/view/AKR20200531049100052?input=1195m</p>

제 목	도내 학생들 80% 등교 완료...도교육청, 방역인력 대폭 늘려		
출 처	전북일보	기사날짜	2020.06.03
기사주소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315	작 성 자	백세종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도내 학생들 80% 등교 완료...도교육청, 방역인력 대폭 늘려</p> <p>백세종 승인 2020.06.03 20:12 댓글 0</p> <p>【교육】 전제기사 교육일반 초중고 대학</p> <p>3일 6만 8000여명 3차 등교 개학 학교 방역 지원 인력 2500여명 늘려</p> <p>3일부터 3차 등교 개학이 이뤄지면서 전북도교육청이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p> <p>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에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6만8200여명(특수학교 학생 포함)이 추가로 등교하면서 도내 21만여 명 학생의 중 80% 수준인 17만 2000여명의 학생의 등교가 이뤄졌다. 남은 초 5~6, 중 1학년 학생들은 오는 8일 등교 개학한다.</p> <p>도교육청은 등교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후 강사를 주축으로 한 방역지원 인력 25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공공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전주 95개 학교에 110명도 지원한다.</p> <p>또 퇴직 교원·학부모 등도 활용한다. 위촉 기간은 2개월 안팎으로 1일 4~5시간을 지원할 계획이다.</p> <p>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발열 체크·방역용품 관리·보건실 업무 지원 등 ‘학생보호 방역활동 지원’ 과, 등하교시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급식소 이용 시 질서 유지·쉬는 시간 복도 및 교실 등 밀집접촉 금지 등 ‘생활지도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p> <p>또 필요한 경우 저학년 수업환경 조성, 수업준비물 지원 등 학습 지원도 이뤄진다.</p> <p>3일부터 3차 등교 개학이 이뤄지면서 전북도교육청이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p> <p>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에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6만8200여 명(특수학교 학생 포함)이 추가로 등교하면서 도내 21만여 명 학생의 중 80% 수준인 17만 2000여명의 학생의 등교가 이뤄졌다. 남은 초 5~6, 중 1학년 학생들은 오는 8일 등교 개학한다.</p> <p>도교육청은 등교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후 강사를 주축으로 한 방역지원 인력 25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공공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전주 95개 학교에 110명도 지원한다.</p> <p>또 퇴직 교원·학부모 등도 활용한다. 위촉 기간은 2개월 안팎으로 1일 4~5시간을 지원할 계획이다.</p> <p>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발열 체크·방역용품 관리·보건실 업무 지원 등 ‘학생보호 방역활동 지원’ 과, 등하교시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급식소 이용 시 질서 유지·쉬는 시간 복도 및 교실 등 밀집접촉 금지 등 ‘생활지도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p> <p>또 필요한 경우 저학년 수업환경 조성, 수업준비물 지원 등 학습 지원</p>		

	<p>도 이뤄진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등교수업 이후 학교가 교육활동과 방역활동, 학부모 문의, 각종 행정업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인력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활동과 생활지도, 학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6만8200여 명(특수학교 학생 포함)이 추가로 등교하면서 도내 21만여 명 학생의 중 80% 수준인 17만 2000여명의 학생의 등교가 이뤄졌음. 남은 초 5~6, 중 1학년 학생들은 오는 8일 등교</p> <p>-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활동과 학사운영이 병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함</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코로나 19라는 비상상황에서 개학하는 학생들에 대해 철저한 방역과 안전수칙으로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 인력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활동과 생활지도, 학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3차 등교개학, 고1, 중2, 초3·4 중 6만8천여명 학교로/전북도민일보 (2020.06.02.)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6080</p> <p>첫 등교부터 현재까지 학생 1,125명 교직원 86명 코로나19 검사 모두 음성/전북도민일보(2020.06.03.)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6229</p> <p>도내 3차 등교개학... 집단감염 초긴장/전북중앙(2020.06.03.)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008#092a</p> <p>내일 3차 등교...초등 3,4학년 등 6만 8천 명/JTV(2020.06.02.) https://jtv.co.kr/2012/?r=home&c=10/70&p=48&sort=uid&orderby=desc&uid=2135360</p> <p>전북 고1, 중2, 초3·4학년 6만여 명 등교 개학/전주KBS(2020.06.0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1924</p> <p>초5·6, 중1 학생 4만8천여 명 4차 등교, 전북지역 21만7천여 명 전 학년 등교 이뤄져/전북도민일보(2020.06.08.)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6846</p>
타시도 사례	<p>초중고 178만명 내일 추가등교...코로나 확산 수도권 학부모 불안 (2020.06.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1140700530?input=1195m</p> <p>오늘 고1·중2·초3~4 등교수업...수도권 학교 5백여곳 등교수업 조정 /KBS(2020.06.0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1214&ref=A</p> <p>잇단 감염에 불안한 학부모 “학교에 수업중지 권한 줘야”/경인일보 (2020.06.0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602010000610</p>

제 목	모욕·인신공격 등 사이버 학교폭력 심각		
출 처	전북일보	기사날짜	2020.06.09
기사주소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738	작 성 자	엄승현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정보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모욕·인신공격 등 사이버 학교폭력 심각</p> <p>☞ 엄승현 ☎ 승인 2020.06.09 20:06 ☞ 댓글 0</p> <p>【사회】 전채기사 사회일반 경찰 사건·사고 보건·의료 병원·검찰 환경 날씨</p> <p>익명으로 운영되는 SNS에서 성추행까지... 일부 학생들 과도한 언행 등으로 사건 발생 학교실태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해마다 증가 청소년상담센터 “소통 중심 사회적 관심 필요”</p> <p>익명으로 운영되는 SNS에서 모욕과 인신공격을 넘어 성추행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p> <p>학생들은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자신의 동급생 또는 또래 친구들에게 성적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서슴없이 던지고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p> <p>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하는 익명 사이트는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p> <p>익명으로 특정인을 향해 자유롭게 공개대화를 할 수 있어 각종 사이버 폭력도 내용도 상당히 등재된다.</p> <p>익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고 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적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p> <p>익명으로 운영되는 SNS에서 성추행까지... 일부 학생들 과도한 언행 등으로 사건 발생 학교실태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해마다 증가 청소년상담센터 “소통 중심 사회적 관심 필요”</p> <p>익명으로 운영되는 SNS에서 모욕과 인신공격을 넘어 성추행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p> <p>학생들은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자신의 동급생 또는 또래 친구들에게 성적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서슴없이 던지고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하는 익명 사이트는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특정인을 향해 자유롭게 공개대화를 할 수 있어 각종 사이버 폭력도 내용도 상당히 등재된다.</p> <p>익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고 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적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p> <p>이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상처를 입어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p>		

	<p>도내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14)은 최근 해당 사이트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이유 없이 들어야만 했다.</p> <p>A양은 “누구인지 모르는데 욕을 먹어서 정말 당황스러웠다” 며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화가난다” 고 말했다.</p> <p>익명 질문 사이트로 인한 관련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p> <p>올해 1월에는 도내 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 2명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각종 음란 메시지를 보내 피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p> <p>피해자 측 부모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아이가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다” 며 “지금도 아이가 관련 문제로 상처를 받은 상태다” 고 말했다.</p> <p>사이버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 추세로,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이 2016년 9.1%에서 2017년 9.8%, 2018년 10.8%로 나타났다.</p> <p>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p> <p>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이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며 “온라인으로 숨는 학생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소통 방식 또는 제대로 된 표현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온라인 뒤에 숨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내는 등 노력들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익명으로 운영되는 SNS에서 모욕과 인신공격을 넘어 성추행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p> <p>- 도내에서도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학생들의 새로운 소통공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p> <p>- 학교 내 교육을 통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중대성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인권교육을 통하여 무심코 한 사이버폭력의 결과가 어떠한지 또한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처벌 사례들을 소개</p> <p>- 학생들의 권리의식과 사안의 중대성을 캠페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사이버 학교폭력 심각하다/전북도민일보(2020.06.10.)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7159</p> <p>악질적 사이버 학교폭력에 경중 올려야/전북일보(2020.06.10.) http://www.i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817</p>
타시도 사례	

제 목	성범죄 가해학생 출석정지 15일? . . . 2차피해는 어찌나		
출 처	전민일보	기사날짜	2020.006.09
기사주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685	작 성 자	장세진
인권범위	<p>-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p> <p><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p> <p>-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상당과 조사 등 청구권></p> <p>성범죄 가해학생 출석정지 15일?~ 2차피해는 어찌나</p> <p>☞ 정병장 · ☞ 승인 2020.06.09 19:36 · ☞ 댓글 0</p>		
기사내용	<p>여학생에 음란영상 메시지 같은학교 마주칠수 있는데 학폭위 출석정지 '습방망이' "보복 두려워" 국민청원 게시</p>  <p>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사진·메시지 등을 보낸 남학생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출석 정지 15일 선도조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피해 여학생 학부모가 2차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청원 호소에 나서면서 논란을 불러모으고 있다.</p> <p>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 아이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p> <p>피해 학생의 학부모인 청원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와 영상물을 보낸 가해자가 출석정지 15일이라는 가벼운 습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는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친다는 생각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p> <p>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사진·메시지 등을 보낸 남학생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출석 정지 15일 선도조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피해 여학생 학부모가 2차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청원 호소에 나서면서 논란을 불러 모으고 있다.</p> <p>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 아이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의</p>		

	<p>청원글이 올라왔다.</p> <p>피해 학생의 학부모인 청원인은 “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와 영상물을 보낸 가해자가 출석정지 15일이라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면서 “ 피해자는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친다는 생각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고 호소했다.</p> <p>청원인의 제기한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16일 전주 A중학교에 다니는 B양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C군과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받은 충격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p> <p>현재 C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소년부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p> <p>이후 지난달 12일 <u>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C군은 특별 교육 12시간과 출석정지 15일의 선도조치</u>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p> <p>올해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폭력 사안은 학교가 아닌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p> <p>청원인은 “ 가해 학생의 보복과 협박이 두려우니 같은 학교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학폭위에 몇 차례 반복해서 호소했다” 며 “ 하지만 강제 전학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쳐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 가해 학생은 여러 차례 피해 학생 2명에게 음란 메시지와 영상을 보냈다” 며 “ 그런데도 가해 학생의 행동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학폭위 결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했다. 청원인은 “ 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과 위원들의 총 평가점수 16점으로 전학 조치가 나왔다” 며 “ 그러나 한 위원이 다른 위원들을 지속해서 설득해 결론은 특별 교육과 선도조치로 변경됐다” 고 주장했다. 특히 “ 출석 정지가 끝나는 가해 학생은 다음 주부터 학교에 나온다” 며 “ 이런 상황에서 <u>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친다면 피해 학생은 학교생활을 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u>” 고 주장했다.</p> <p>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u>학폭위는 법령에 따른 독립적 기구라서 도교육청도 학폭위의 결정에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u>을 감안해 달라” 면서 “ 물론 피해 여학생의 부모 입장에선 학폭위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제고할 여지가 있는 2차적 행정심판을 안내하고 있다” 면서 “<u>피해 신고 이후 심리치료 등 피해 학생 보호와 또 따른 2차적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측의 노력을 당부하고 꼼꼼히 살피고 있다</u>”</p>
--	--

	고 설명했다.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상황 - 피해학생은 학폭위에서 전학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진행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폭위는 법령에 따른 독립적 기구며, 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교육청이 행정심판이 접수될 경우 국민청원이 접수되고 학폭위 결정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있는 점을 감안,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더불어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신고 이후 심리치료 등 피해 학생 보호와 또 다른 2차적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음란사진 보냈는데 출석정지 15일 솜방망이 처벌”/전북도민일보(2020.06.09.)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7008</p> <p>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사진 보낸 A군.. 겨우 ‘출석정지 15일’/전민일보(2020.06.09.)</p> <p>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685</p> <p>“전주 중학교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와 분리하라”/전북중앙(2020.06.11.)</p> <p>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645#092a</p> <p>성폭력 가해 학생 처벌 요구 국민청원 호응/전주 MBC(2020.06.09.)</p> <p>https://www.jmbc.co.kr/news/view/14198</p> <p>음란사진 보낸 남학생 출석정지 15일...피해 학생 측 반발/YTN(2020.06.10.)</p> <p>https://www.youtube.com/watch?v=5YejeolJh5A</p> <p>학폭위 솜방망이 처분, 전북교육청 “학폭위 결정 존중...이 결정에 개입 못해” 기존 입장 되풀이/전북도민일보(2020.06.15.)</p> <p>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7777</p> <p>전북교육청, 사이버 성범죄 관련 “행정심판 접수시 신속 처리”/전북일보(2020.06.15.)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140</p>
타시도 사례	<p>서귀포시교육지원청, 디지털 성범죄 OUT 예방 캠페인 전개/서귀포신문(2020.06.12.) http://www.seogwip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62</p>

제 목	학폭 피해학생 국선대리인 도움 받는다		
출 처	전북중앙	기사날짜	2020.06.15
기사주소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864#092a	작 성 자	정병창
인권범위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기사내용	<p>학폭 피해학생 국선대리인 도움 받는다</p> <p>△ 정병창 ⓒ 승인 2020.06.15 18:07 ☎ 댓글 0</p> <p>■ 선임허가로 변호사 지원 가능</p> <p>지난 4월 전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당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p> <p>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피해 학생의 친형이 신청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가키로 결정했다.</p> <p>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도입됐다.</p> <p>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등이다.</p> <p>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했다”면서 “앞으로도 법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지난 4월 전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당시 <u>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u></p> <p>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u>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피해 학생의 친형이 신청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가키로 결정했다.</u></p> <p>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을 부족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도입됐다.</p> <p>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등이다.</p> <p>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p>		

	로 판단되어 허가했다”면서 “앞으로도 법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로 법률전문가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다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전주 집단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도움 받는다/전북일보(2020.06.15.)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142 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서 국선대리인 도움받아/전라일보(2020.06.15.)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711 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도움 지원/전북도민일보(2020.06.15)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7763
타시도 사례	경북교육청, 수요자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 지원(2020.004.27)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91028&part_idx=263 대구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경제적 약자에 변호사 선임 지원/경북신문(2019.01.23)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31712&part_idx=328

제 목	전북도교육청, 초등학생 환경감수성 키운다		
출 처	전민일보	기사날짜	2020.06.15
기사주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025	작 성 자	이재봉
인권범위	- 복지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전북도교육청, 초등학생 환경감수성 키운다</p> <p>△ 이재봉 기자 ⓒ 승인 2020.06.15 17:10 ☎ 댓글 0</p> <hr/> <p>학교생태지도만들기 5교, 그린스쿨사업 5교 등 생태감수성 함양 기대</p> <p>전북도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p> <p>도교육청은 15일 도내 초등학교 5곳을 대상으로 학교생태지도를 만든다고 밝혔다. 생태지도는 학교 주변 곤충과 식물을 관찰 후 세밀화 그리기 등 책자 만들기를 통해 과학적 창의성을 함양하고 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함이다.</p> <p>대상학교는 전주여울초, 전주원동초, 전주교대전주부설초, 계북초, 행안초 등이다.</p> <p>또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수직정원(바이오월)이 조성된다. 교실에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수직정원을 만들고 공기질 변화 관찰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p> <p>아이들의 과학적 창의성을 기를 뿐 아니라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p> <p>사업대상은 전주대정초, 전주양현초, 완주화산초, 군산해성초, 김제중앙초 등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1년이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동식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은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을 길러 정서안정과 학업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연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과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 <p>전북도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p> <p>도교육청은 15일 도내 초등학교 5곳을 대상으로 학교생태지도를 만든다고 밝혔다. 생태지도는 학교 주변 곤충과 식물을 관찰 후 세밀화 그리기 등 책자 만들기를 통해 과학적 창의성을 함양하고 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함이다.</p> <p>대상학교는 전주여울초, 전주원동초, 전주교대전주부설초, 계북초, 행안초 등이다.</p> <p>또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수직정원(바이오월)이 조성된다. 교실에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수직정원을 만들고 공기질 변화 관찰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p> <p>아이들의 과학적 창의성을 기를 뿐 아니라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p>		

	<p><u>쾌적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u>이다.</p> <p>사업대상은 전주대정초, 전주양현초, 완주화산초, 군산해성초, 김제중앙초 등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1년이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u>동식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은 아이들의 환경감수성을 길러 정서안정과 학업집중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u>”이라며 “<u>자연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과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u>하겠다.” 라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전북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학교생태지도 및 수직정원 설치</p> <p>- 이를 통하여 아이들의 과학적 창의성을 기를 뿐 아니라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인권감수성, 환경감수성 등 학생들의 감수성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이 다양하게 실시되어야 함</p> <p>- 아이들에게 교육과 체험을 통하여 자연을 접하게 하여 자연, 환경, 생명체의 소중함과 보존 가치가 쉽게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여야 함</p> <p>- 전라북도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러 동물의 사육과 교감을 통하여 학생들의 감수성 향상과 생명존중의 마음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한 지원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도교육청 생태관찰교육 운영/전북중앙(2020.06.15.)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846#092a</p> <p>도교육청 초등생 환경감수성 기르기 다양한 사업 추진/전북도민일보(2020.06.15.)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7756</p> <p>전북도교육청, 초등학생 환경감수성 키운다/새전북신문(2020.06.15.)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6365</p>
타시도 사례	

제 목	코로나19 확진 해당학교 14일간 등교중지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06.17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8119	작 성 자	이휘빈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코로나19 확진 해당학교 14일간 등교중지</p> <p>△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6.17 18:59 ☎ 댓글 0</p>  <p>전주여고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17일 학교 정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었다. 김현표 기자</p> <p>전라북도교육청이 17일 전주여자고등학교 고3 학생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전라북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를 14일간 등교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p> <p>도교육청 정영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이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학교·학년·학급 등은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임을 감안해 현 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14일 동안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주여고는 7월 1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여고는 내일 있을 모의수능(3학년)은 온라인 시험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1·2학년)는 자율적으로 치른다”고 말했다.</p> <p>전라북도교육청이 17일 전주여자고등학교 고3 학생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전라북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를 14일간 등교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p> <p>도교육청 정영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이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학교·학년·학급 등은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임을 감안해 현 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14일 동안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주여고는 7월 1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여고는 내일 있을 모의수능(3학년)은 온라인 시험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1·2학년)는 자율적으로 치른다”고 말했다.</p> <p>이어 지난 16일 감염 학생의 검사가 늦어진 데에 대해 김쌍동 도교육청 인성건강과장은 “학생의 체온이 높았다가 다시 내려가는 등 일</p>		

	<p>정치 않았으나 높은 발열 의거해 보호관찰실로 이동해 머물렀으며, 보호자가 학교에 온 후에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체 채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p> <p>감염 학생이 다니던 미술학원에 정 대변인은 “현재 보건당국이 학원 77명(원장·교사 11명, 학생 66명)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하고 있으며, 밀접 접촉자 분류 및 심층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p> <p>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현재 전북대학교 선별진료소에 입원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p> <p>- 확진자 발생학교에 대한 전수 검사 및 심층역학조사와 더불어 14일 동안 등교 중지 명령으로 원격수업 진행</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코로나 19라는 비상상황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해 철저한 방역과 안전수칙으로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방과 후 활동으로 감염</p> <p>- 초동대처에 대한 부실 논란에 대한 비판과 불만 등을 수렴하여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p> <p>- 또한 인근 학교의 등·하교 동선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감염자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 마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주여고 학생 가족 모두 음성...학교와 학원 등 960명 전수조사/전민일보(2020.06.17.)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176</p> <p>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전주여고, 7월 1일까지 등교 중단/전북일보(2020.06.17.)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361</p> <p>전북 22번째 확진자, 보건·교육당국 초동대처 부실 '논란'/전북일보(2020.06.17.)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385</p> <p>확진자 여고생 인근 학교 1곳 19일까지 원격수업/전북도민일보(2020.06.18.)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8308</p> <p>전주여고, 코로나 추가 감염자 없어/새전북신문(2020.06.18.)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6732</p> <p>전일중 원격수업/전주 MBC(2020.06.18.) https://www.jmbc.co.kr/news/view/14304</p> <p>전주여고, 2주 자가격리...'모의 수능' 온라인으로/JTV(2020.06.17.) https://jtv.co.kr/2012/?r=home&c=10/70&sort=uid&orderby=desc&w</p>
타시도 사례	<p>전국 11개교 '등교 중지'...등교 이후 학생 21명 확진/뉴스1(2020.06.24.) https://www.news1.kr/articles/?3975242</p> <p>오늘 전국 49개 학교 등교 중지...광주에 39곳 집중/조선일보(2020.06.24.)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3/2020062390084.htm</p>

제 목	도내 학생 21만8천명에 2차 농산물꾸러미 지원		
출 처	전북중앙	기사날짜	2020.06.22
기사주소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389#092a	작 성 자	정병창
인권범위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급식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도내 학생 21만8천명에 2차 농산물꾸러미 지원</p> <p>☞ 정병창 ☎ 승인 2020.06.22 18:12 ☞ 댓글 0</p> <p>도교육청, 3만2천원 상당 구성 70억 투입- 농가 소득 보탬</p> <p>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장기화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 소득 돕기 및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키 위해 2차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p> <p>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총 21만8,000명을 대상으로 2차 농산물 꾸러미 추가 지원에 나선다.</p> <p>이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총 70억 원으로 전북도교육청이 32억, 전북도 18억, 각 시·군이 20억을 각각 분담해 지원한다.</p> <p>지원될 농산물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3만 2,000원 상당의 친환경쌀, 잡곡류, 채소, 과일류 및 로컬가공품 등으로 구성된다.</p> <p>도교육청은 농산물 구성 품목을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각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고했다.</p> <p>이번 2차 농산물 꾸러미는 오는 7월 중으로 택배 배송을 이용해 지원대상 학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남은 예산을 활용, 2차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1~2차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p>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p>한편,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은 협업을 통해 지난 5월에도 1차 농산물 꾸러미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코로나19로 장기화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 소득 돕기 및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키 위해 2차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p> <p>- 농산물 구성 품목을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각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고</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1차 농산물꾸러미를 통하여 도내 농가의 판로 해결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좋은 사업으로 자리 잡아 2차 농산물꾸러미를 지원 사업을 결정</p> <p>- 1차 농산물꾸러미 사업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하되 타 시도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시하여야 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농산물꾸러미 사업 1차때 문제점 개선”/전북중앙(2020.06.17.)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078#092a</p> <p>전북교육청, 예산 70억 투입 2차 농산물 꾸러미 7월말부터 배송/전북도민일보(2020.06.22.)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8678</p> <p>신선도 더 높인 ‘농산물 꾸러미’ 7월말 제공/전라일보(2020.6.22.)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291</p> <p>전북도-교육청, 2차 농산물 꾸러미 지원...7월 말 배송 시작/전북일보(2020.06.22.)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695</p> <p>모든 학생에 2차 농산물 꾸러미 지원/JTV(2020.6.22.) https://jtv.co.kr/2012/?r=home&c=10/70&sort=uid&orderby=desc&where=subject%7Ctag&keyword=%EB%86%8D%EC%82%B0%EB%AC%BC&uid=2135882</p> <p>무상급식 예산 활용... ‘농산물 꾸러미’ 2차 공급 추진/전주 KBS(2020.06.2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6797</p>
타시도 사례	<p>대전교육청 농산물꾸러미 배송 시작...농촌사랑상품권도 배부/연합뉴스(2020.06.16)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6128500063?input=1195m</p> <p>“농산물 외면” vs “학교 자율” 식재료 꾸러미 제공 놓고 논란/연합뉴스(2020.06.15.)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5132400061?input=1195m</p> <p>“식재료 꾸러미에 공산품이 가득”...친환경농민단체 반발/연합뉴스 TV(2020.06.16.) https://tv.naver.com/v/14326332</p>

제 목	‘전북교육청, 코로나19 포괄적 심리 지원		
출 처	전북일보	기사날짜	2020.06.22
기사주소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668	작 성 자	양다훈
인권범위	- 복지에 관한 권리<복지에 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전북교육청, 코로나19 포괄적 심리 지원</p> <p> <input type="checkbox"/> 백세중 <input type="checkbox"/> 승인 2020.06.22 20:06 <input type="checkbox"/> 댓글 0 </p> <p>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전체기사 <input type="checkbox"/> 교육일반 <input type="checkbox"/> 초중고 <input type="checkbox"/> 대학 </p> <p>전주여고 학생 A양학급 친구 등 대상 현재 당사자들, 불안정안 심리상태 전해져</p>  <p>전북교육청사 전경.</p> <p>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인 전주여고 학생과 학급 친구, 해당 학교 교직원, 가정까지 포괄적인 심리지원에 나선다.</p> <p>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2일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단장으로 임상심리사·전문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꾸렸다.</p> <p>지원단은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14일간 자가격리 중인 학급 친구·해당학교 교직원의 심리상황 등을 파악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 <p>특히 해당 학생과 가족들은 확진판정 이후 서울 왕래설 등 각종 억측과 근거없는 소문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지원단은 보고 있다.</p> <p>전북도교육청이 <u>코로나19 확진자인 전주여고 학생과 학급 친구, 해당 학교 교직원, 가정까지 포괄적인 심리지원</u>에 나선다.</p> <p>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2일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단장으로 임상심리사·전문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꾸렸다.</p> <p>지원단은 <u>코로나19 확진 학생과 14일간 자가격리 중인 학급 친구·해당학교 교직원의 심리상황 등을 파악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u>이다.</p> <p>특히 해당 학생과 가족들은 확진판정 이후 서울 왕래설 등 각종 억측과 근거없는 소문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지원단은 보고 있</p>		

	<p>다.</p> <p>현재까지 보건당국이 파악한 감염경로는 해당학생은 대전 50번, 55번 환자와 같은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은 것뿐이다.</p> <p>김승환 교육감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마치 범죄자인 양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한 뒤 “코로나19 감염사실을 인식하거나 의심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비난받아서 안 되고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에서 당사자나 학급친구, 학교에 대한 안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당사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학생 확진자 발생으로 확진학생이 억측과 근거없는 소문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밀접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 심리안정을 위해 지원</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감염 의심이 상당히 드는 경우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회적·법적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감염됐는데, 그것을 마치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낙인을 찍어 버려 해당 학생이 받을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큰 만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함</p> <p>- 또한 이와 더불어 장기간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상 담과 지원을 위한 대책도 필요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코로나19 확진 학생-학교에 사회적 배려를”/전북중앙(2020.06.22.)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371#092a 김승환 교육감, 코로나19 확진 학생 심리적 안정 확보해 줘야/전라일보(2020.06.22.)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280</p>
타시도 사례	<p>경북도교육청,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심리검사·상담 지원/뉴시스(2020.06.2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4_0001070909&cID=10810&pID=10800 부산교육청, 내성고 '코로나19 감염병 극복 심리지원단'운영/노컷뉴스(2020.06.03.) https://www.nocutnews.co.kr/news/5354689</p>

제 목	여중생 무차별 구타에 동영상까지 ‘충격’		
출 처	전북일보	기사날짜	2020.06.24
기사주소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894	작 성 자	송승욱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정보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여중생 무차별 구타에 동영상까지 ‘충격’</p> <p>송승욱 송인 2020.06.24 20:34 댓글 0</p> <p>【사회】 전체기사 사회일반 경찰 사건·사고 보건·의료 법원·검찰 환경 날씨</p> <p>도내 A중학교 2학년 “어디 부러뜨려 줄까” 협박·욕설·폭행 폭행 장면 동영상 촬영해 단체채팅방 올리고 조롱성 발언 해당학교, 자체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결과 교육청에 보고 피해 학생 및 관련학생 접촉금지 조치. 학폭위 개최는 미정 학교전담경찰관 인지한 경찰, 24일 저녁 피해 학생 부모 조사</p> <p>여중생이 동급생을 무차별 구타하고 동영상까지 찍어 유포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p> <p>24일 도내 SNS 커뮤니티에 여중생을 폭행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에는 “어디 부러뜨려 줄까” 등의 협박성 발언과 욕설이 난무하고 피해 학생을 놀려 놓고 무차별 폭행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p> <p>당초 이 동영상은 다수 학생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올라왔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성 댓글까지 담겨 SNS를 타고 급속도로 유포됐다.</p> <p>동영상 속 폭행을 한 학생은 도내 A중학교 2학년 B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곧바로 자체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한 조사에 나섰고 1차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했다. 또 피해를 당한 학생과 관련학생간 접촉금지 조치를 취했다.</p> <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폭행을 당한 학생은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여중생이 동급생을 무차별 구타하고 동영상까지 찍어 유포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p> <p>24일 도내 SNS 커뮤니티에 여중생을 폭행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에는 “어디 부러뜨려 줄까” 등의 협박성 발언과 욕설이 난무하고 피해 학생을 놀려 놓고 무차별 폭행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p> <p>당초 이 동영상은 다수 학생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올라왔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성 댓글까지 담겨 SNS를 타고 급속도로 유포됐다.</p> <p>동영상 속 폭행을 한 학생은 도내 A중학교 2학년 B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곧바로 자체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한 조사에 나섰고 1차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했다. 또 피해를 당한 학생과 관련학생간 접촉금지 조치를 취했다.</p> <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폭행</p>		

	<p>을 당한 학생은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짜 세상이 요지경인데 학교 보내기 무서워 죽겠음’, ‘소년법 폐지’, ‘참교육 가자’ 등의 반응이다.</p> <p>학교전담경찰관 통해 사안을 인지한 경찰은 24일 피해 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추후 관련학생 등을 불러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도내 중학교 2학년 “어디 부러뜨려 줄까” 협박·욕설·폭행하고 폭행 장면 동영상 촬영해 단체채팅방 올리고 조롱성 발언</p> <p>- 해당학교에서는 자체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결과 교육청에 보고</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학교폭력과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신속한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p> <p>- 조사와 학폭위 결정이 이루어지기 까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어디 부러뜨려 줄까?” 소주 먹이고 폭행...익산 무서운 여중생/동아일보 (2020.06.25.)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25/101687389/2</p> <p>‘구타하고 강제로 소주 먹여’...익산서 여중생 학교폭력 폭로/연합뉴스 (2020.06.25.)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5074100055?input=1195m</p> <p>“용서해줘” 울부짖는데...전북 익산 여중생 구타 동영상 파문/서울신문 (2020.06.2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2500127&wlog_tag3=naver#csidx9caa811198597cfbb7fd2dd3aea752d</p> <p>경찰, 여중생 폭행·영상 유포 여부 조사/JTV(2020.06.25.) https://jtv.co.kr/2012/?r=home&c=10/70&p=2&sort=uid&orderby=desc&uid=2135976</p> <p>“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 폭행”...경찰, 동영상 유포 등 수사/전주 KBS(2020.06.2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8925</p>
타시도 사례	<p>또래 여중생 폭행해놓고 “미안해? 죄송하다고 해야지” 무차별 구타/부산일보(2020.05.26.)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52610172214760</p> <p>광주 여중생 또래 집단폭행...“따귀 때리고 발길질”/이데일리 (2020.05.2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32086625772528&mediaCodeNo=257&OutLnkChk=Y</p>

* 6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일지(타시도)

제 목	학생 간 접촉 막는다며...7교시 수업에 쉬는 시간 '0분'		
출 처	한겨레	기사날짜	2020.06.02
기사주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47585.html	작 성 자	이유진 최원형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휴식을 취할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학생 간 접촉 막는다며...7교시 수업에 쉬는 시간 '0분'</p> <p>등록: 2020-06-02 18:13</p> <p>☞</p> <p>[등교 2주 학교 현장, '방역과 교육 사이' 혼선] 4시간40분 연달아 수업 뒤 귀가 학생들 "영양이 아프고 지친다" 방역 수칙상 금지된 모듬활동</p> <p>"수행평가시험 보기 위해 등교" 일선 학교 교사들 고민 깊어가</p>  <p>3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등교하고 있다. 수포증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산발적인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3일부터 초·중·고 학생 178만명이 휴가로 등교길에 오른다. 고1·중2·초3~4학년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다. 연휴스</p> <p>고3을 시작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등교를 재개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선 '방역과 교육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고1과 중2, 초3~4학년까지 등교를 재개하면 전국 학생 595만명 가운데 77%인 459만명이 등교 대상이 되는데, 일부 학교에선 학생 간 접촉을 막겠다며 쉬는 시간 자체를 없애버려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p> <p>고3을 시작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등교를 재개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선 '방역과 교육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고1과 중2, 초3~4학년까지 등교를 재개하면 전국 학생 595만명 가운데 77%인 459만명이 등교 대상이 되는데, 일부 학교에선 학생 간 접촉을 막겠다며 쉬는 시간 자체를 없애버려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p>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3학년부터 등교한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는 쉬는 시간을 모두 없앴다. 학생들은 아침 8시4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4시간40분 동안 1~7교시를 연달아 들은 뒤 점심 급식을 먹고 귀가했다. 수업시간을 이렇게 조정한 것은 쉬는 시간에 학생들 사이 접촉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방역을 위한 교육지침임을 고려하더라도 학생들은 “연속으로 수업을 들으니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지쳐서 선생님 질문에 대답할 힘도 없다”고 호소했다.

쉬는 시간이 없어지면서 화장실 이용도 어려워졌다. 학생들은 “매 교시 끝나기 10분 전 화장실 갈 사람 손 들고 하는 데 남녀합반이라 서로 눈치 보느라 잘 안 가게 된다” “생리를 하는 여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매시간 손을 드느냐”고 말했다. 이 학교 교사 ㄱ씨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학교장 재량으로 쉬는 시간을 없앤 학교는 이 학교뿐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방역 지침상 모둠활동을 할 수 없고, 학생 간 대화도 자제시켜야 한다는 점도 교사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그동안 수업 교과·주제에 따라 모둠활동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했던 수업 방식을 활용할 수 없어 답답하다. 더구나 교사들도 만나서 반가워하는 학생들한테 뚝 떨어져서 대화하라고 단속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교육은 ‘관계’에서 시작되는데, 코로나19로 교우관계 형성은 물론 교사와 학생 사이 관계맺음도 이전보다 쉽지 않다고 했다.

어렵게 재개한 등교수업이 평가 위주로 흘러가는 것도 학생들에겐 부담이다. 등교 4일 만에 수행평가만 최소 6번을 봤다는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오로지 수행평가와 성적 때문에 학교에 나오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원격수업 때 배운 내용을 등교수업 때 복습하느냐, 바로 시험을 치르느냐도 학교마다 다르다. 경기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는 “학사일정이 빠듯한데다 복습을 하면 학생·학부모 사이에서 ‘문제 찍어주기’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복습 없이 그대로 시험을 치르고 진도도 나가기로 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라”고만 안내했다.

교육당국이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급급했던 사이, 일선 학교 교사들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육부는 등교 여부에, 학교는 평가 공정성에만 신경을 기울이다 보니 정작 등교수업

	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는지는 아무도 살피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그동안 입시를 위한 평가만을 중심으로 움직여왔기 때문에 더욱 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간 접촉을 막겠다며 쉬는 시간 자체를 없애버려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한 중학교는 쉬는 시간을 모두 없애버려 학생들은 아침 8시4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4시간40분 동안 1~7교시를 연달아 들은 뒤 점심 급식을 먹고 귀가하고 있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어려움 및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 - 또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어려움 및 고충에 대한 조사 및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쉬는 시간 0분”에 교육부 “학생 휴식권 보장하라”/오마이뉴스 (2020.06.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8337</p> <p>교육부 “쉬는시간 아예 없앤 건 문제…개선 조치 취할 것”/한겨레 (2020.06.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47698.html)</p>
타시도 사례	

제 목	'기초생활 수급자? 부모 이혼?'...평택 한 여중서 비인권적 가정조사		
출 처	중앙일보	기사날짜	2020.06.04
기사주소	https://news.joins.com/article/23793756	작 성 자	김지혜
인권범위	<p>-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p> <p><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정보에 관한 권리></p> <p>-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p>		
기사내용	<p>'기초생활 수급자? 부모 이혼?'...평택 한 여중서 비인권적 가정조사</p> <p>[중앙일보] 입력 2020.06.04 18:56</p> <p>김지혜 기자</p> <p>경기 평택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가정 형편과 부모의 직업, 이혼 여부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캐묻는 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p> <p>4일 교육계에 따르면 평택 A여중 2학년생은 지난 3일 첫 등교 후 담임 교사에게 '학생기초자료 조사서'를 받았다. 이 중 일부 학생은 인권이 침해될 만한 질문이 포함된 조사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p> <p>문제의 조사서에는 '지금 저희 집의 경제적 형편은 어떻습니까'라는 항목과 함께 '기초생활 대상자인지,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를 했는지' 등을 묻는 문항이 있었다. 또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항목에는 부모의 직업을 적는 칸이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 안 계심, 돌아가심, 이혼 등으로 써달라'는 설명도 붙어 있었다.</p> <p>경기 평택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가정 형편과 부모의 직업, 이혼 여부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캐묻는 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p> <p>4일 교육계에 따르면 평택 A여중 2학년생은 지난 3일 첫 등교 후 담임 교사에게 '학생기초자료 조사서'를 받았다. 이 중 일부 학생은 인권이 침해될 만한 질문이 포함된 조사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p> <p>문제의 조사서에는 '지금 저희 집의 경제적 형편은 어떻습니까'라는 항목과 함께 '기초생활 대상자인지,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를 했는지' 등을 묻는 문항이 있었다. 또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항목에는 부모의 직업을 적는 칸이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 안 계심, 돌아가심, 이혼 등으로 써달라'는 설명도 붙어 있었다.</p>		

	<p>평택교육지원청이 이날 오전 해당 학교를 현장 조사한 결과 2학년 10개 반 중 4개 반에서 이와 유사한 조사서를 학생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개 반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통된 양식의 간략한 조사서를 이용해 물의 없이 학생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p> <p>평택교육청 관계자는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가 학생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의도에서 전에 가지고 있던 문서를 프린트해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며 해당 교사가 이같은 조사를 하자 다른 교사들도 문서를 전달받아 배포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p> <p>이 관계자는 “4개 반 담임 교사들은 곧바로 학생들에게 사과했다”며 “오늘 중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한 뒤 배부한 조사서는 가정에서 폐기해달라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A여중은 해당 교사들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교장 명의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p> <p>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담당은 <u>“학생 입장에선 이런 조사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u>며 <u>“더구나 교사가 가정환경에 따라 차별을 한다고 느낀다면 이는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u>고 지적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학생기초자료 조사서에 가정 형편과 부모의 직업, 이혼 여부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캐묻는 조사를 진행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이미 2005년부터 학기 초에 학부모의 주민등록이나 직위, 수입 등 개인정보나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을 가정환경조사서에서 삭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 전달하였음</p> <p>-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함</p> <p>“부모님 이혼했니?”…가정형편 조사/MBC(2020.06.05.)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99948_32524.html</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평택 A중, 가정 형편·부모 이혼·직업 조사 물의/OBS(2020.06.05.)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492</p> <p>‘너희집 기초생활수급자니?’…평택 한 여중서 비인권적 가정조사/연합뉴스(2020.06.04.)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4156300061?input=1195m</p>
타시도 사례	

제 목	창녕서 양상 다리로 구조된 학대 피해 아동...경남교육청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예정”		
출 처	세계일보	기사날짜	2020.06.08
기사주소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08514185	작 성 자	김동환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폭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창녕서 양상 다리로 구조된 학대 피해 아동...경남교육청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예정”</p> <p>등록 : 2020-06-08 17:59:52 수정 : 2020-06-08 22:20:24</p> <p>경남도교육청, 8일 회의 열고 피해 여아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혀...현재 피해 여아는 치료 중</p>  <p>▲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창녕군에서 발생한 의붓아버지의 초등학생 여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 A(39세)와 진모 6(7세)가 지난 6일 불구속 입건됐다. 부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말 C(양양)를 상습적으로 폭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널A가 전남(7일) 공개한 전남경찰 제4회(도CCV) 영상에는 면담에 이른 후 솔리타를 신고 시민과 함께 들어서는 C양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으며, 자기를 닮은 시민이 계선대에서 종전을 결정하는 사이에도 소녀는 불안한 듯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재널A 영상 캡처</p> <p>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창녕군에서 발생한 의붓아버지의 초등학생 여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p> <p>도 교육청은 우선 학교 측에 피해 학생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진행한다. 창원지검에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했으며, 퇴원 후에는 양육시설 등에서 여아를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도 교육청 대책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각 신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p> <p>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창녕군에서 발생한 의붓아버지의 초등학생 여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p> <p>도 교육청은 우선 학교 측에 피해 학생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진행한다. 창원지검에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했으며, 퇴원 후에는 양육시설 등에서 여아를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도 교육청 대책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각 신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p> <p>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열린 월요회의에서 “2년 동안 아동학대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p>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담당자를 문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 창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 A(35)씨와 친모 B(27)씨가 지난 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부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딸 C(9)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의 학대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쯤 창녕의 한 거리에서 눈에 멍이 든 C양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온몸이 멍든 소녀는 의붓아버지가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는 등의 학대를 저질러 일부 지문이 보이지 않을 만큼 훼손된 상태이기도 했다.

채널A가 전날 공개한 편의점 CCTV 영상에는 맨발에 어른용 슬리퍼를 신고 시민과 함께 들어서는 C양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C양은 자기를 달래준 시민이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는 사이에도 불안한 듯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영상에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소녀에게 약을 발라주는 시민의 모습도 담겼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창녕군에서 발생한 의붓아버지의 초등학생 여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 A(35)씨와 친모 B(27)씨가 지난 6일 불구속 입건됐다. 부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딸 C양(9)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전날(7일) 공개한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맨발에 어른용 슬리퍼를 신고 시민과 함께 들어서는 C양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으며, 자기를 달래준 시민이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는 사이에도 소녀는 불안한 듯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C양을 구해준 송은정씨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맨발에다가 일반적인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다”며 “멍이 이렇게 들어있었고, 흠투성이에다가 배고프다고 해서 데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많이 굶었다고 하더라”고 당시 C양의 모습을 전했다.

소녀를 최초 목격한 시민도 “애가 덜덜 떨면서 자기 아빠가 지켰다며 손을 보여줬다”며 “얼굴은 식별 불가능할 정도였다.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 충격적이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년 전 재혼해 올해 1월 경남 거제시에서 창녕군으로 이사했으며, B씨는 수 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면서도 상습폭행 등은 부

	<p>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p> <p>현재 C양은 아동기관의 보호 아래 경남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상태는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얼굴 부기와 멍도 거의 없어졌고 정수리 상처도 많이 아문 상태며, 얼굴부위 MRI 촬영 결과도 이상 없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경남 창녕에서 9살의 여자 어린이가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도로에서 도망치듯 뛰어가다 지나가던 주민에게 발견되었는데,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으며 손가락은 심하게 화상을 입었고, 쇠사슬을 목에 찬 채 베란다에 묶여 있다 옆 집 베란대를 통해 탈출 하였음</p> <p>-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 폭력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사건이며 일반적인 체벌이나 학대 수준을 넘는 고문</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사회적 관심 특히 학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동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함</p> <p>-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양쪽 눈·몸에 멍 자국 확인... 경찰, 창녕 여아 아동학대 수사/경남신문 (2 0 2 0 . 0 6 . 0 4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26644</p> <p>천안 계모 이어 창녕서도 또 아동학대... “기관·경찰, 안일하게 생각” /동아일보 (2020.06.0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8/101408710/2</p> <p>“말 듣지 않아서” 초등생 딸 학대한 계부·친모 입건/경향신문 (2020.06.0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81204001&code=940202</p> <p>이렇게 지졌어요“ 화상에 멍투성이 9살, 간신히 도망/SBS(2020.06.08.) https://www.youtube.com/watch?v=H9NliFFj8cs</p> <p>목에 쇠사슬 채우고 하루 한 끼만 먹여...창녕 아동학대 ‘참담’ /KBS뉴스(2020.06.11.) https://www.youtube.com/watch?v=N0QWRYleCgU</p>
타시도 사례	

제 목	19군데나 수정... 충남 학생인권조례, 실망입니다		
출 처	오마이뉴스	기사날짜	2020.06.22
기사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2114	작 성 자	이상재
인권범위			
기사내용	<p>19군데나 수정... 충남 학생인권조례, 실망입니다 [주장]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 개악수준의 수정조례안 철회해야 20.06.22 17:16 최종 업데이트 20.06.22 17:16 이상재(tjstong) 0</p> <p>좋아요 142개 · 13개 · 1개 · 1인 · URL을이거 · 스크랩 · 19 · 12 · 댓글달기</p> <p>본문보기 · 원고료로 응원하기</p> <p>▲ 충남 학생인권조례 개정 홍보에 나선 학생들</p> <p>© 충남학생인권조례개정본부</p> <p>충남 학생인권조례안이 4시간의 진통 끝에 원안에서 무려 19군데나 수정돼 19일 통과했다. 26일 본회의 표결만을 앞둔 시점이지만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는 수정 조례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p> <p>2013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7년 만의 전국 5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다려온 지역 시민사회는 왜 수정안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표하고 있을까?</p> <p>이게 학생인권조례라고?</p> <p>충남 학생인권조례안이 4시간의 진통 끝에 원안에서 무려 19군데나 수정돼 19일 통과했다. 26일 본회의 표결만을 앞둔 시점이지만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는 수정 조례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p> <p>2013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7년 만의 전국 5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다려온 지역 시민사회는 왜 수정안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표하고 있을까?</p> <p>이게 학생인권조례라고?</p> <p>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안을 확인한 결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난도질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부실한 조례안을 학생인권조례라고 불러야 하는지 의문일 정도다.</p> <p>수정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에 대한 조</p>		

항이 미흡했다. 또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수정 조항 등이 큰 문제다.

먼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 조항의 경우 제7조 1항에서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놓고는 2항 반성문, 서약서 강요 금지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반성문 강제가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직장에서의 반성문 강요가 위법행위라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반성문과 서약서 강요금지는 이미 제정된 네 개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서도 공통으로 항목을 두고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헌법상 양심의 자유 조항인데 충남 학생인권조례안에서는 왜 빠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10조 4항 '교직원은 학생에게 지문날인, 서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를 삭제해 버린 것도 갈수록 중요해지는 개인정보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삭제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 인권 문헌에서는 교육의 중요성과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기본적인 권리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성장하고 배우는 단계인 초중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라면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 4개 지역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에게 인권교육을 해야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정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원안에 있는 45조 6항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또한 28조에 규정된 노동인권 교육과 현장실습 시 학교장의 책무 조항은 역시 통째로 삭제해 버렸다.

인권교육 의무조항이 빠진 학생인권조례의 효과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한참 늦은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개악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 보호와 관련해 조례에 따른 조직을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 인권침해 대응과 체계적인 학생 인권 교육이 주요 업무이다.

그런데 이 조직에 대한 수정안도 비상식적인 수준이다. 원안 35조는

학생인권센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규정해 놓았는데 특히 3항에는 센터에는 상담조사관 1명을 포함한 상근 사무직원을 둔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수정안은 이 규정 중 '포함한 상근 사무직원'이란 내용을 없애 버렸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인권옹호관과 조사관 외 상근 사무직원을 더해 센터 인력구성을 할 여지를 없애 버린 것이다. 수정안대로라면 충청남도 내 1200개가 넘는 교육기관의 인권업무를 센터장인 인권옹호관과 조사관 1명, 단 두 명의 직원이 담당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안인 것이다.

조직구성도 문제지만 학생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해야 하는 인권옹호관 업무의 독립성을 수정안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원안 43조는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의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관, 센터 및 학생인권상담실의 사무직원은 구제신청과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조항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이 삭제 수정안을 관철한 도의원은 학생 인권 침해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조사담당자가 비밀을 지키지 않을 시에 나올 우려스러운 역효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자기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안다면 충남교육청 인권옹호관에게 상담이나 진정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수정안이 의도하는 것이 혹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간섭을 정당화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실제 41조 학생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에 대한 규정 원안은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한다'라고 돼 있는데 수정안은 피해 학생의 동의 외에 '교육감의 동의'도 추가했다.


이 수정안만 놓고 보면 피해 학생이 조사를 동의했어도 교육감이 자신 업무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사가 불가능하게 해 놓은 것이다.

열아홉 군데 수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은 인권옹호관과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방해하고 충남교육청이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과 같은 인권업무 전반에 걸쳐 책무를 덜 지려는 흐름으로 수정됐다.

김지철 교육감 선거공약 중 하나였던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됐음에도

	<p>충남교육청 차원의 공식적인 지지나 환영의 의사가 없었는데, 원안에 대한 불만과 수정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p> <p>이번 충남 학생인권조례 원안은 한두 명 도의원의 즉흥적인 발상의 결과가 아니라 6명의 도의원과 1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가 8개월 넘게 학생인권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나온 성과물이다.</p> <p>그럼에도 발의한 안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한 보완이 될 줄 알았던 교육위원회가 무려 19군데에 걸쳐 사실상의 개악안을 수정심의 통과시켰다. 이것은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의 실질적 보장과 발전을 바랐던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사건이다.</p> <p>만약 수정안 그대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기존 4개 광역시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뒤늦게 제정된 조례임에도 가장 부실한 학생인권조례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p> <p>지금이라도 충남교육청과 도의회는 인권의 보편성과 진보성, 평등권이 해치지 않도록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2013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7년 만의 전국 5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다려온 충청남도 지역 시민사회 수정안에 대해 분노와 실망</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p> <p>-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독소조항 및 제도적 보장을 위한 기본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나고 있음</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인권위원장 “충남 학생인권 조례 조속히 제정되길”/연합뉴스 (2020.06.16.)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6033100004?input=1195m</p> <p>충남학생인권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조사관 독립성 축소/연합뉴스 (2020.06.22.)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2092100063?input=1195m</p> <p>교육감 승인받아야만 조사?... “누더기 된 충남학생인권조례안” /한겨레 (2020.06.23) http://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50677.html#csidx0fc9a62a4fc583785a3441034732041</p>
타시도 사례	

* 7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일지(전라북도)

제 목	수학여행 원칙적 금지...체험학습은 학교장 판단		
출 처	새전북신문	기사날짜	2020.07.01
기사주소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7827	작 성 자	양정선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권리<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수학여행 원칙적 금지...체험학습은 학교장 판단</p> <p>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07월 01일 17시21분</p>  <p>전라북도교육청 새전북신문</p> <p>코로나19 사태로 전북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은 올해 1박 이상의 수학여행을 떠나지 못한다. 다만 '당일치기' 여행은 학교장 결정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p> <p>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학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취소된 수학여행은 내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한 상태다.</p> <p>다만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장에게 선택권을 넘겼다. 학내 구성원 등 동의를 얻으면 당일치기 여행은 가능하다는 의미다.</p> <p>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 취소로 아쉬워 할 학생들이 많겠지만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수학여행은 갈 수 없지만</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체험학습은 학교장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집단 감염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수학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장에 선택권을 부여하였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여행은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일정기간 전면 금지 되었으며, 현재 코로나 19 상황은 이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수학여행을 내년에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음 - 수학여행 전면 금지는 전국적 상황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수학여행지, 수학여행 시설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p>부산시교육청, 올해 초·중·고·특수학교 수학여행 전면 취소/글로벌에듀(2020.07.13.) http://www.globaledunews.co.kr/view.php?ud=2020071315513266533233fa3143_29</p> <p>“코로나19 재유행 조짐“…올해 수학여행 못 간다/경북일보(2020.07.14.)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529</p> <p>제주교육청 “올해 숙박형 수학여행 전면 취소“/한라일보(2020.07.26.)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95747147688366014</p>

제 목	군산에도 청소년 자치배움터가 들어섰다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07.02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981	작 성 자	한경연
인권범위	- 자치와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자유> - 복지에 관한 권리<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p>군산에도 청소년 자치배움터가 들어섰다</p> <p>▲ 한경연 도민기자 ▲ ● 승인 2020.07.02 15:37 ● 댓글 0</p>  <p>군산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자몽</p> <p>군산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진로활동,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자치배움터 '자몽'이 지난달 27일 (구)군산월명초등학교가 이전한 자리에 개관했다.</p> <p>'자몽'은 스스로 자(自), 꿈 몽(夢)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18년에 익산 '어울누리'에 이어서 만들어진 청소년 자치문화공간이다.</p> <p>군산지역 <u>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진로활동,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자치배움터 '자몽'이 지난달 27일 (구)군산월명초등학교가 이전한 자리에 개관했다.</u></p> <p>'자몽'은 스스로 자(自), 꿈 몽(夢)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18년에 익산 '어울누리'에 이어서 만들어진 청소년 자치문화공간이다.</p> <p>이번 개관식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 지역기관장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거나 기획하고 있는 관계자 다수와 지역 주민들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p> <p>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은 지상 3층 26실 규모로 조성되었는데, 1층은 요리실(제과제빵실),식당, 아띠놀이터(4개의 노래방과 포켓볼장), 광장카페, 북카페<들림>, 도예작업실, 목공작업실 등이 있어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충분히 고려한 공간임을 알 수 있게 했다. 2층은 청소년</p>		

	<p>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청각실과 사무실, 포토스튜디오, 1인미디어실, 밴드연습실, 몸짓실, 홈페이지제작실로 꾸며졌고 3층은 미디어작업실, 컴퓨터작업실과 회의실이 5개 있으며, <툼>이라는 광장이 있고 책을펴방과 작업실, 그리고 무언가방 등이 있어서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며 학교 밖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p> <p>군산교육청 관계자는 “자몽은 활용 전 명칭 선정부터 청소년들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며 “청소년들이 주도해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기쁘다” 고 말했다.</p> <p>제18대 전라북도교육감 공약으로 청소년자치 교육문화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뜻으로 출발하여 이제 두 발을 뻗 것이다. 익산 <어울누리>에 이어서 군산 <자몽>이 개관하였고 완주와 장수에도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김제, 전주, 정읍에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을 통해서 지역 청소년들의 자치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고 다양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길 기대한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진로활동,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 지역에 청소년 자치배움터 자몽 개관 - 지역 청소년들의 자치활성화와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고 다양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배움의 주체성과 주도성 보장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달그락달그락] 청소년이 만든 꿈의 발판,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 개관/새전북신문(2020.07.01.)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7736</p> <p>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 27일 개관/전라일보(2020.06.25.)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636</p> <p>전북교육청 27일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 개관식/전북도민일보(2020.06.25.)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203</p>
타시도 사례	<p>세종 청소년 자치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 본격 운영/연합뉴스(2020.07.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16000063?input=1195m</p> <p>인천 청소년자치학교 추진단, 청소년이 배움 주도하는 청소년자치배움터 세움/경인매일(2020.07.19.)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827</p>

제 목	“차도로 아슬아슬” 익산 신동초등학교 학생들 위험천만 등교		
출 처	전민일보	기사날짜	2020.07.06
기사주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12	작 성 자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차도로 아슬아슬” 익산 신동초등학교 학생들 위험천만 등교</p> <p>☞ 정세진 기자 ☎ 승인 2020.07.06 17:27 💬 댓글 0</p>  <p>익산 신동초등학교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천만한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p> <p>아이들은 등하교 때마다 차도에 차량들과 뒤섞여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p> <p>실제 6일 오전 8시께 익산시 신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앞.</p> <p>아이들은 차도 위에 삼삼오오 모여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학부모는 연신 “차 조심하라”고 당부하기 바빴다.</p> <p>학교로 출발하자 폭이 7미터가 채 되지 않는 좁은 길이 펼쳐졌고, 양 옆으로는 불법주차 차량들이 뺨뺨이 늘어서 있었다.</p>		
	<p>익산 신동초등학교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천만한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p> <p>아이들은 등하교 때마다 차도에 차량들과 뒤섞여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p> <p>실제 6일 오전 8시께 익산시 신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앞.</p> <p>아이들은 차도 위에 삼삼오오 모여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학부모는 연신 “차 조심하라”고 당부하기 바빴다.</p> <p>학교로 출발하자 폭이 7미터가 채 되지 않는 좁은 길이 펼쳐졌고, 양 옆으로는 불법주차 차량들이 뺨뺨이 늘어서 있었다.</p> <p>아이들은 차량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차도로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차가 지나가며 경적을 울리면 아이들은 깜짝 놀라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숨었다.</p> <p>이처럼 출근길 차량들과 불법주차 차량, 보행하는 학생들이 모두 뒤섞</p>		

	<p>여 아이들의 등굣길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p> <p>신동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한모(42)씨는 “어린 자녀를 혼자 보내기 불안해 매일 애가 탄다”며 “차들이 지나가면 아이들은 피할 공간조차 없어 불법주차 차량 옆에 바짝 붙어야 한다”고 토로했다.</p> <p>이어 “인도가 아닌 차선규제봉이라도 도로 옆에 설치해달라고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거절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이처럼 아이들이 위험한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익산시는 대책 마련에 회의적인 입장이다.</p> <p>시 관계자는 “도로 폭이 9미터 이상 돼야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해당 도로는 6.5미터이므로 공사가 불가능하다”며 “설치를 위해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꿔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경찰 소관”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p> <p>경찰 관계자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아이들은 인도가 있는 대로변으로 돌아서 가고 있다”고 변경에 난색을 보였다.</p> <p>지자체의 이 같은 회피행정에 신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p> <p>또 다른 학부모 박모(39)씨는 “어린 자녀를 혼자 보내기 불안해 매일 애가 탄다”며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이나”고 분통을 터뜨렸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천만한 차도로 내몰리고 있음 - 아이들은 등하교 때마다 차도에 차량들과 뒤섞여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해 스쿨존에서의 학생들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아이들의 등하교길에 대한 안전도 고려하여야 함 - 민식이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의 보장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교길에 대해 점검하고 또한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익산 신동초 통학로 공사 미진.. 차도로 통학하는 아이들/전민일보(2020.07.22.)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350</p> <p>스쿨존서 차량 따라가는 ‘민식이법 놀이’ 위험천만/전북일보(2020.07.06.) http://www.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692</p>
타지도 사례	

제 목	전북교육청, 특색있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		
출 처	전북일보	기사날짜	2020.07.06
기사주소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677	작 성 자	백세종
인권범위	- 복지에 관한 권리<복지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전북교육청, 특색있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p> <p>☞ 백세종 ☎ 승인 2020.07.06 20:06 ☎ 댓글 0</p> <p>【교육】 전체기사 교육일반 초중고 대학</p>  <p>전북교육청사 전경.</p> <p>전북도교육청이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맞잡고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p> <p>도교육청은 7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근석)를 개최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역교육 문화 만들기에 나선다.</p> <p>마을교육생태계란 지속가능한 마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참여하는 협력 체제를 말한다.</p> <p>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마을교육생태계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 추진위원회와 추진지원단을 꾸리고 시·군 지역에서는 지역추진단을 구성,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알맞은 마을교육사업을 추진해왔다.</p> <p>전북도교육청이 <u>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맞잡고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u></p> <p>도교육청은 7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근석)를 개최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역교육 문화 만들기에 나선다.</p> <p>마을교육생태계란 지속가능한 마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참여하는 협력 체제를 말한다.</p>		

	<p>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마을교육생태계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 추진위원회와 추진지원단을 꾸리고 시·군 지역에서는 지역추진단을 구성,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알맞은 마을교육사업을 추진해왔다.</p> <p>총 11명으로 꾸려진 추진위원회는 이번 협의회에서 2019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과 방과후마을학교 사업 성과내용을 공유하고, 2020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과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p> <p>주요내용은 △마을교육생태계 체계 및 예산지원 △마을교육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204개 기관) △연수 및 컨설팅 추진 등이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으로 교육 신뢰성을 제고하고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참학력 신장으로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맞잡고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추진 -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으로 교육 신뢰성을 제고하고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참학력 신장으로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배우는 과정에서 신뢰와 소통, 참여와 협력을 경험하며 행복한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도교육청, 특색있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새전북신문 (2020.07.06.)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8141</p>
타시도 사례	<p>전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미래형 교육자치 모델' 주목/이뉴스투데이(2020.07.22.)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2333</p> <p>강원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 도내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신아일보 (2020.07.21.)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461</p> <p>울산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교육 허브로 도약/울산제일일보 (2020.07.05.) http://www.uje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087</p>

제 목	도내 학교급식, 안전한 식재료만 쓴다		
출 처	전북중앙신문	기사날짜	2020.07.09
기사주소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718#092a	작 성 자	정병창
인권범위	- 복지에 관한 권리<급식에 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도내 학교급식, 안전한 식재료만 쓴다</p> <p>△ 정병창 © 승인 2020.07.09 17:00 > 댓글 0</p> <p>도교육청 Non-GMO 시범학교 64개교 희망 성분 검사도 실시</p> <p>전북도교육청이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유전자 변형없는 식재료(Non-GMO)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p> <p>이 사업은 전북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제1의제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변형 식품 배제 방안에 대한 논의에 따른 것이다.</p> <p>이로써 학교급식 Non-GMO 시범사업을 희망한 전북지역 64개교 학생 1만7,191명이 도내에서 생산된 Non-GMO 식재료(된장, 간장, 고추장, 두부 등)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구입해 이용하게 된다.</p> <p>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총 2억4,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Non-GMO 식재료 지원뿐 아니라 GMO 성분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도 확보할 방침이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식재료 대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Non-GMO 식재료를 지원함으로써 GMO 사용에 따른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한편 전북지역 농가와 생산업체의 안정적 판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 <p>한편,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대응투자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무상급식뿐 아니라 2007년에 유초등학교 지원을 시작으로 2008년 중학교, 2010년 고교까지 친환경쌀 지원을 확대해왔다.</p> <p>도교육청 Non-GMO 시범학교 64개교 희망 성분 검사도 실시</p> <p>전북도교육청이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유전자 변형없는 식재료(Non-GMO)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p> <p>이 사업은 전북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제1의제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변형 식품 배제 방안에 대한 논의에 따른 것이다.</p> <p>이로써 학교급식 Non-GMO 시범사업을 희망한 전북지역 64개교 학생 1만7,191명이 도내에서 생산된 Non-GMO 식재료(된장, 간장, 고추장, 두부 등)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구입해 이용하게 된다.</p> <p>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총 2억4,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Non-GMO 식재료 지원뿐 아니라 GMO 성분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도 확보할 방침이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p>		

	<p>식재료 대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Non-GMO 식재료를 지원함으로써 GMO 사용에 따른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한편 전북지역 농가와 생산업체의 안정적 판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 <p>한편,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대응투자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무상급식 뿐 아니라 2007년에 유·초등학교 지원을 시작으로 2008년 중학교, 2010년 고교까지 친환경쌀 지원을 확대해왔다.</p> <p>또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도교육청이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유전자 변형없는 식재료(Non-GMO)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 - 학교급식 Non-GMO 시범사업을 희망한 전북지역 64개교 학생 1만 7,191명이 도내에서 생산된 Non-GMO 식재료(된장, 간장, 고추장, 두부 등)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구입해 이용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GMO의 유해성과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Non-GMO 가공품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해 학생들의 입맛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함 - 시범사업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및 효과를 분석하여 모든 학교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교육청,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전민일보(2020.07.09.)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573</p> <p>전북교육청, 도내 64개교에 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 제공/전라일보(2020.07.09.)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794</p>
타시도 사례	<p>여주시, 11개 학교 급식에 Non-GMO 식재료 공급/노컷뉴스(2020.07.17.) https://www.nocutnews.co.kr/news/5380146</p> <p>충북도교육청 학교급식 Non-GMO 사업 추진/충청투데이(2020.07.09.)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912</p>

제 목	완주군 청소년, 첫 참정권 행사한다		
출 처	전라일보	기사날짜	2020.07.17
기사주소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428	작 성 자	임영선
인권범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p>완주군 청소년, 첫 참정권 행사한다 임영선 기자 · 승인 2020.07.17 · 10분</p> <p>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p> <p>완주군의 청소년들이 투표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의 공약을 직접 평가한다. 17일 완주군은 도내 최초로 제5대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선거를 치른다고 밝혔다.</p> <p>앞서 지난달 제5대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원예 54명(어린이 21명, 청소년 33명)이 지원했으며, 이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p> <p>이번 선거는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을 평가해 사전에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파악한다.</p> <p>인물이 아닌 공약 중심의 선거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정권 교육 효과를 높이고, 완주군의 정책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게 된다.</p> <p>투표는 만10세부터 18세(2009.1.1.~2002.12. 31. 출생자)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모바일투표 시스템(QR코드)으로 진행된다.</p> <p><u>완주군의 청소년들이 투표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의 공약을 직접 평가한다.</u> 17일 완주군은 도내 최초로 제5대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선거를 치른다고 밝혔다.</p> <p>앞서 지난달 제5대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원예 54명(어린이 21명, 청소년 33명)이 지원했으며, 이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는 <u>어린이·청소년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을 평가해 사전에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파악한다.</u> <u>인물이 아닌 공약 중심의 선거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정권 교육 효과를 높이고, 완주군의 정책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게 된다.</u> 투표는 <u>만10세부터 18세(2009.1.1.~2002.12. 31. 출생자)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모바일투표 시스템(QR코드)으로 진행</u>된다.</p> <p>유권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후보자들의 사진과 공약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투표가 가능하다. 지역구별로 1인 2명을 투표할 수 있다.</p> <p>현재 청소년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완주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과 관내 초중고 학교, 청소년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치고 있다.</p> <p>특히, 이번 투표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내 생애 첫 투표’ 만큼 교육기관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p> <p>제5대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지원자들은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신호등 확대설치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직업체</p>		

	<p>힘 교육확대 ▲관내 노후 버스정류장, BIS 수리 및 버스노선 개편, 어르신 친화적인 정류장 만들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시설확충 ▲완주군 청소년의 세계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수립 ▲ 청소년 의회 유튜브 동아리 만들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p> <p>투표결과는 7월 31일 오후 6시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wanjucfc)를 통해 공개 된다.</p> <p>박성일 완주군수는 “도내 최초 법적으로 선거권이 없는 어린이·청소년에게 18세 선거권 확대에 대한 예비적 경험을 실현하고, 아동청소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회 모델로 정착시키려 한다”며 “대의 정치 및 간접 민주주의 경험을 통해 참여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투표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의 공약을 직접 평가 -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을 평가해 사전에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인물이 아닌 공약 중심의 선거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정권 교육 효과를 높이고, 완주군의 정책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참여는 사회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과정으로 학생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그 개선을 요구할 줄 알아야 사회가 발전함 - 학생들은 후보 공약들을 통해 그리고 선거운동의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투표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의 이해관계와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향후 수정 보완을 통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완주군 청소년, 첫 참정권 행사한다/전민일보(2020.07.19.)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090</p> <p>완주군 청소년들, 어린이·청소년 의원 공약 평가한다/전북일보(2020.07.19.)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555</p>
타시도 사례	<p>도교육청-선관위 ‘참정권교육 활성화’ 힘 모은다/경남신문(2020.07.08.)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29264</p> <p>안산 청소년, 국회의원 손에 ‘청소년 정책’ 직접 전달하다/오마이뉴스(2020.06.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191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p>

제 목	생명존중 교육, 학생들 마음 치유한다		
출 처	전북중앙	기사날짜	2020.07.19
기사주소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343#092a	작 성 자	신중식
인권범위	- 교육에 관한 권리<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복지에 관한 권리<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p>생명존중 교육, 학생들 마음 치유한다</p> <p>☞ 정병창 ☎ 승인 2020.07.19 00:13 💬 댓글 0</p> <hr/> <p>도교육청 마음치유 생명지킴이 학교 운영 90개교 교육연극 등</p> <p>전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키 위해 '마음치유·생명지킴이 학교'를 운영한다.</p> <p>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해(살)예방 및 마음치유를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90개교에서 '마음치유·생명지킴이 학교'를 본격 운영한다.</p> <p>이들 학교에는 자해(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과 위험군 학생을 위한 상담 및 병원치료비가 지원된다.</p> <p>특히 도내 90개교 중 27개교에 대해선 교육연극(역할극) 프로그램을 지원한다.</p> <p>역할극 등 연극활동을 통해 보다 실질적·효과적인 생명존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p> <p>도교육청은 교육연극 운영을 위해 도내 연극단체 중 공모를 통해 10개 단체를 선정, 각 학교별로 매칭하고 오는 12월까지 교육연극을 추진할 예정이다.</p> <p>도교육청 마음치유 생명지킴이 학교 운영 90개교 교육연극 등</p> <p>전북도교육청이 <u>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키 위해 '마음치유·생명지킴이 학교'를 운영한다.</u></p> <p>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해(살)예방 및 마음치유를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90개교에서 '마음치유·생명지킴이 학교'를 본격 운영한다.</p> <p>이들 학교에는 <u>자해(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과 위험군 학생을 위한 상담 및 병원치료비가 지원된다.</u></p> <p>특히 도내 90개교 중 27개교에 대해선 교육연극(역할극) 프로그램을 지원한다.</p> <p>역할극 등 연극활동을 통해 보다 실질적·효과적인 생명존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p> <p>도교육청은 교육연극 운영을 위해 도내 연극단체 중 공모를 통해 10개</p>		

	<p>단체를 선정, 각 학교별로 매칭하고 오는 12월까지 교육연극을 추진할 예정이다.</p> <p>더욱이 교육연극을 하기 전 연극단체와 충분한 협의회를 통해 마음치유·생명지킴과 관련한 주제설정·방법·공간·준비물 등을 정해 연극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p> <p>교육이 끝난 후에는 평가회도 진행한다.</p> <p>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6월부터 교육연극 운영학교를 모니터링 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육과정 내에서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배려,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생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키 위해 ‘마음치유·생명지킴이 학교’를 운영 - 자해(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과 위험군 학생을 위한 상담 및 병원치료비가 지원되며, 교육연극을 통하여 역할극 등 연극활동을 통해 보다 실질적·효과적인 생명존중 교육을 진행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폭력, 자살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존중 교육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함 -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받은 연극계를 지원하고 교육연극을 통하여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하여 위험군 학생들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교육연극으로 마음치유·소중한 생명 지켜요” /전민일보(2020.07.18.)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052</p> <p>전북도교육청, 마음치유·생명지킴이 학교 운영/전북도민일보(2020.07.19.)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2083</p>
타시도 사례	<p>충북교육청, 생명존중 만화·포스터 공모 우수작 발표/중도일보(2020.07.19.)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0719010005783</p>

제 목	“전주교육지원청 학폭위 결정, 부적절했다”		
출 처	전북일보	기사날짜	2020.07.26
기사주소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24	작 성 자	백세중 엄승현
인권범위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기사내용	<p>"전주교육지원청 학폭위 결정, 부적절했다"</p> <p>☞ 전북일보 ☞ 승인 2020.07.26 19:32 ☞ 댓글 0</p> <p>【교육】 현재기사 교육일반 초·중·고 대학</p> <p>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 "2건의 학폭 사건, 가해학생 처분 부적절" 음란사진 전송한 가해학생에 전학처분 내려 집단폭행·기절놀이 일부 주도학생에 전학조치</p>  <p>전북교육청사 전경.</p> <p>최근 음란사진전송과 기절놀이 집단폭행 등 전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2건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처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행정심판결과가 나왔다.</p> <p>26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는 지난 15일 전주 A중학교 학생 B군이 여자 동급생 두 명에게 음란사진 전송을 한 사건과 관련, 출석정지결정을 한 전주교육청의 학폭위 결정을 뒤집고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을 내렸다.</p> <p>피해학생 측은 "성범죄 사안을 놓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한 전주교육청이 단순 정학수준의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에 행정심판 신청을 냈다.</p> <p>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 "2건의 학폭 사건, 가해학생 처분 부적절" 음란사진 전송한 가해학생에 전학처분 내려 집단폭행·기절놀이 일부 주도학생에 전학조치</p> <p>최근 음란사진전송과 기절놀이 집단폭행 등 전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2건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처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행정심판결과가 나왔다.</p> <p>26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는 지난 15일 전주 A중학교 학생 B군이 여자 동급생 두 명에게 음란사진 전송을 한 사건과 관련, 출석정지결정을 한 전주교육청의 학폭위 결정을 뒤집고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을 내렸다.</p> <p>피해학생 측은 "성범죄 사안을 놓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한 전주교육청이 단순 정학수준의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에 행정심판 신청을 냈다.</p> <p>이에 가해학생 측은 "정학처분은 너무 무겁고 교내 봉사로 낮춰달라"고 맞섰다.</p> <p>이에 대해 도교육청 행심위는 "전주교육청 학폭위가 사안을 미흡하게 판단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p> <p>앞서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 소년부는 해당 가해학생에게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수강 명령 40시간과 피해자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리는 등 사실상 엄벌에 준하는 판결을 내렸다.</p>		

	<p>행심위는 또 지난 4월 23일 전주시 평화동 놀이터에서 13명의 학생들이 C군(15)을 집단폭행하고 기절놀이까지 한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주도학생은 전학조치를 하고 정학 기간을 늘리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폭행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가해학생들이 학생들을 공동폭행한 부분은 인정되며, 학생별로 가담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행심위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현직 교육공무원과 변호사와 경찰관 등 법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p> <p>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일선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결정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학폭위의 전문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판단에 대해 옳고 그름을 떠나 성인지 감수성 등 보편적 국민들의 눈높이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심했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사진전송과 기절놀이 집단폭행 등 전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2건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처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행정심판 결과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란이 됐던 학폭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국선대리인을 통한 결정이 이루어 졌음 - 학폭위의 전문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지적하고 있으나 제도적 보완 장치로서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어 문제 되지 않음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성폭력 가해 학생 처벌 요구 국민청원 호응/전주 MBC(2020.06.09.) https://www.jmbc.co.kr/news/view/14198</p> <p>음란사진 보낸 남학생 출석정지 15일...피해 학생 측 반발/YTN(2020.06.10.) https://www.youtube.com/watch?v=5YejeolJh5A</p> <p>학폭위 숨방망이 처분, 전북교육청 “학폭위 결정 존중...이 결정에 개입 못 해” 기존 입장 되풀이/전북도민일보(2020.06.15.)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7777</p> <p>전북교육청, 사이버 성범죄 관련 “행정심판 접수시 신속 처리”/전북일보(2020.06.15.)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p> <p>전주 집단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도움 받는다/전북일보(2020.06.15.)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p> <p>코·입 틀어막고 또래 집단폭행...처벌은 '출석정지 5일'/JTBC(2020.06.10.)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4686</p>
타시도 사례	

* 7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일지(타시도)

제 목	故 최숙현 다닌 학교 ‘운동선수 인권보호’ 조례조차 없었다		
출 처	서울경제	기사날짜	2020.07.16
기사주소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BRLKECC	작 성 자	김창영
인권범위	<p>-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p> <p><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p>		
기사내용	<p>故 최숙현 다닌 학교 ‘운동선수 인권보호’ 조례조차 없었다</p> <p>‘학생선수 인권보호’ 조례 제정 전국 17개 시도 중 8곳에 그쳐 "지도자 교육 의무화 입법 필요 교육감 책무 명시해 사고 예방을" 안민석 의원 등 29명 법안 발의</p> <p>김창영기자 2020-07-16 15:53:16 사회일반</p>  <p>최숙현 선수가 지난 2013년 전국해양스포츠클럽대회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p> <p>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교육감의 학생선수 인권보호 책임을 조례로 명시한 지역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가 학생 때부터 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사건이 터진 직후에야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학생선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p> <p>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교육감의 학생선수 인권보호 책임을 조례로 명시한 지역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u>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가 학생 때부터 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u> 사건이 터진 직후에야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학생선수 인</p>		

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경제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곳은 서울·경기·인천·광주·울산·제주·충남·충북 등 8곳에 그쳤다.

수도권·광주·울산·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조례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8곳을 제외한 9개 지방의회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조례 제정 움직임이 아예 없었거나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는 의미다. 최 선수의 출신 고등학교가 있는 경북 역시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가 지난 9일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의 면담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8개 교육청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보면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책임들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학생선수를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운영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개선·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생선수의 폭행 및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청마다 자체 실태 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해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조례가 없는 지방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분기별로 운동부 학생들의 생활을 점검하는 등 자체 노력이 있지만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차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 및 폭행 사건이 해마다 불거지는 만큼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안 의원 등 29명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권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체육계 자살·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선수의 인권 문제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가 학생 때부터 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선수 폭력 사태를 보면서 학생인권조례와 제도적 보장을 담보하고 있는 기구와 제도의 중요성을 실감함 -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지역 초중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전북도민일보(2020.07.22.)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2690</p> <p>제2 최숙현 없게.../조선일보(2020.07.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0179.html</p> <p>‘제2 최숙현 없도록’...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한겨레(2020.07.21)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54485.html#csidx1c9336fed5b3976a6497337a64318e8</p> <p>“훈련 날보다 맞는 날이 많았다”...운동선수들이 말하는 “나도 최숙현이다”/경향신문(2020.07.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0600005&code=940100#csidx37e4b1b989d14b49f79564dd178bbe8</p> <p>“최숙현 비극 막으려면‘...’단순 폭언’도 중징계/MBC(2020.07.14)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42310_32524.html</p>
타시도 사례	

제 목	인권위 “학교 폭력 피해자 공개조사는 인격권 침해”		
출 처	한겨레	기사날짜	2020.07.07
기사주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2579.html	작 성 자	박윤경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기사내용	<p>인권위 “학교 폭력 피해자 공개조사는 인격권 침해”</p> <p>출처: 2020-07-07 13:19 수정: 2020-07-07</p>  <p>국가인권위원회 건물. 한겨레 자료사진</p> <p>학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운동부 폭력 피해 학생을 세워두고 학교폭력을 조사한 중학교의 체육 지도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도자 ㄱ씨의 대처가 “학생에 대한 2차 피해이자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p> <p>7일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중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는 ㄱ씨는 부원 ㄴ군이 다른 부원과 어깨를 부딪히는 등 폭력 피해를 입자 학교폭력 조사에 나섰다. ㄱ씨는 전체 야구부원 20여명 앞에 ㄴ군을 세운 뒤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다른 부원들에게 “ㄴ과 같이 야구를</p>		

	<p>할 수 있겠냐”는 질문도 던졌다. 이 자리에서 ㄴ군은 다른 부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부인하고 자신과 함께 야구 할 수 없다며 성토하는 말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지난 2월 ㄴ군 어머니는 ㄱ씨가 부적절한 조사를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p> <p>ㄱ씨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ㄴ군과 다른 부원들이 서로 얘기를 들은 뒤 화해하고 관계를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p> <p>인권위는 ㄱ씨의 조사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비밀 보장과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소외감을 느끼고 따돌림을 재확인하는 2차 피해까지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 학교 교장에게 ㄱ씨를 주의 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 모두를 대상으로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운동부 폭력 피해 학생을 세워두고 학교폭력을 조사한 중학교의 체육 지도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학교폭력 조사에서 피해에 대한 비밀보장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신속한 조사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학교폭력 피해자 공개조사는 인격권 침해” /KBS(2020.07.0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9928&ref=A</p> <p>다른 학생들 앞에서 학폭 피해자 공개조사…인권위 “인권침해” /MBC(2020.07.07.)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34248_32633.html</p> <p>야구선수 “학폭 공개조사” …인권위 ‘인권침해’ /광주매일(2020.07.14.)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94719374517458005</p>
타시도 사례	

제 목	“학교 화장실 몰카는 용서 받을 수 없는 흉악범, 재발방지책 세워야”		
출 처	오마이뉴스	기사날짜	2020.07.12
기사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7576	작 성 자	윤성효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기사내용	<div> <h2>"학교 화장실 몰카는 용서 받을 수 없는 흉악범, 재발 방지책 세워야"</h2> <p>전교조 경남지부 성명 "범죄자를 선처없이 엄벌에 처할 것" 촉구</p> <p>20.07.12 11:19 최종 업데이트 20.07.12 11:57 윤성효(cjnews) ▼</p> <div> <div> <div>👍 좋아요 14개</div> <div>+ 크게</div> <div>- 작게</div> <div>🖨 인쇄</div> <div>URL줄이기 ▼</div> <div>☆ 스크랩</div> </div> <div> <div>f 0</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원고료로 응원하기</div> <div> <div>👍 0</div> <div>💬 댓글달기</div> </div> </div> <p>최근 경남지역 2개 학교에서 현직 남자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범죄"라며 "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p> <p>전교조 경남지부는 12일 낸 성명을 통해 "사회도, 학교도,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p> <p>이번 몰카에 대해, 전교조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충격에서 미처 헤어 나오기도 전에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것이 교사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p> <p>최근 경남지역 2개 학교에서 현직 남자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범죄"라며 "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p> <p>전교조 경남지부는 12일 낸 성명을 통해 "사회도, 학교도,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p> <p>이번 몰카에 대해, 전교조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충격에서</p> </div>		

미처 헤어 나오기도 전에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것이 교사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과 연대해야 할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며 “학교에서 두 건이나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번 한 학교 몰카는 <오마이뉴스>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사건이 일어난지 보름만에 언론에 알려지면서 도교육청의 대처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전교조는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두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경남지역 학교에 다니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두려움과 분노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해당 교사 중 한명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근무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수련원을 이용했던 경남의 수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은 본인이 그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사건발생에 대한 단순한 정보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학교장은 이 사건에 대한 그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제대로 된 해결도 아니다“며 “교육청은 경남지역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이 불안을 하루속히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내 모든 학교 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라“, “불법촬영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사건이다. 범죄자를 선처없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남 A학교에서는 지난 6월 24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고, 경찰 수사에서 남자교사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남자 교사는 9일 구속되었다.

경남 B학교에서는 6월 26일 2층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있고, 이 학교 남자교사가 사흘 뒤 경찰에 자수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지역 2개 학교에서 현직 남자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사건 - 모든 학교 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화장실, 탈의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인식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교원과 학생 대상 성교육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학교 화장실이 무섭다...교사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SBS(2020.07.0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7578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 <p>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설치범은 '현직 교사들'이었다/세계일보(2020.07.09.)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09514597?OutUrl=naver</p> <p>김해·창녕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범인은 교사들...압수 휴대폰엔/부산일보(2020.07.09.)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70919293895032</p> <p>전북교육청, 31일까지 불법카메라 단속/전라일보(2020.07.20.)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600</p>
타시도 사례	

* 8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일지(전라북도)

제 목	도교육청, 어린이 안전 스마트화 본격		
출 처	전북중앙	기사날짜	2020.08.04
기사주소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615	작 성 자	정병창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도교육청, 어린이 안전 스마트화 본격</p> <p>정병창 승인 2020.08.04 17:09 댓글 0</p> <hr/> <p>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학생 비콘 보급 시범학교 운영</p> <p>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설치 시범학교 1곳을 선정해 본격 운영한다.</p> <p>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안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p> <p>이를 위해 IoT(사물인터넷) 기반 무선통신장치(비콘)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사전 알림, 통학정보 알림 대응 등 학생안전 스마트화를 추진한다.</p> <p>개인정보 동의하에 초등학교 학생에게 무선통신장치(비콘)를 보급하고, 비콘을 소지한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접근하면 도로표지판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학생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p> <p>현재 무선통신장치(비콘)는 노인돌보기, 위급상황 알림, 산악구조, 치매환자 실종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p> <p>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학생 비콘 보급 시범학교 운영</p> <p>전북도교육청이 <u>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설치 시범학교 1곳을 선정해 본격 운영한다.</u></p> <p>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u>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안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u></p> <p>이를 위해 IoT(사물인터넷) 기반 무선통신장치(비콘)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사전 알림, 통학정보 알림 대응 등 학생안전 스마트화를</p>		

	<p>추진한다.</p> <p>개인정보 동의하에 초등학교 학생에게 무선통신장치(비콘)을 보급하고, 비콘을 소지한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접근하면 도로표지판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학생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p> <p>현재 무선통신장치(비콘)은 노인돌보기, 위급상황 알림, 산악구조, 치매환자 실종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p> <p>장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1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p> <p>도교육청은 9월 중 1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해 학생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안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비콘을 소지한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접근하면 도로표지판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학생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줘 안전운전을 유도</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민식이법 시행 이후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시설 정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p> <p>- 전라북도, 전주시, 경찰청에서는 시설과 CCTV 등을 설치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설치효과 등을 분석하여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공감 어렵다”...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 한 달 반응 ‘시들’ /새전북신문(2020.08.03.)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0434</p> <p>스쿨존 내 주민신고제 취지 무색, 여전히 불법 주정차 ‘성행’/전북도민일보(2020.08.04.)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343</p> <p>전북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설치 시범학교 운영/전북도민일보(2020.08.04.)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352</p> <p>전북교육청,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설치 시범학교 1곳 모집/전라일보(2020.08.04.)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877</p>
타시도 사례	<p>노원구, 자율주행차 센서 활용 어린이보호시스템 구축/한겨레(2020.08.27.)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7228.html</p> <p>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과태료 8만원/동아일보(2020.08.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02/102264764/2</p>

제 목	전북교육청, 방학·휴가기간 중 생활방역 수칙 안내		
출 처	전민일보	기사날짜	2020.08.03
기사주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28	작 성 자	이재봉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전북교육청, 방학휴가기간 중 생활방역 수칙 안내</p> <p>이재봉 기자 승인 2020.08.03 16:42 댓글 0</p>  <p>전북교육청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한 여름방학·휴가 보내기 수칙'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p> <p>이는 최근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름방학과 휴가를 이용해 지역 간 이동, 모임 증가, 관광지 밀집도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p> <p>도교육청은 방학 테마를 건강과 안전으로 삼아 한적한 야외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밀폐·밀집·밀접 시설 가지 않기를 안내했다.</p> <p>전북교육청이 <u>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한 여름방학·휴가 보내기 수칙'</u>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p> <p>이는 최근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름방학과 휴가를 이용해 지역 간 이동, 모임 증가, 관광지 밀집도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p> <p>도교육청은 방학 테마를 건강과 안전으로 삼아 <u>한적한 야외에서 규칙</u></p>		

	<p><u>적으로 운동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밀폐·밀집·밀접 시설 가지 않기</u>를 안내했다.</p> <p>또 <u>안전한 방학생활을 위한 수칙으로 ‘3행’과 ‘3금’을 제시</u>했다.</p> <p>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3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원 같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꼭 착용하기, 자주 손 씻기(손 소독제를 이용하거나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사람 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다.</p> <p>반드시 피해야 하는 ‘3금’으로는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르면 외출하지 않기, pc방, 노래방 같은 밀폐·밀집·밀접(3밀) 장소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를 제시했다.</p> <p>교직원 역시 안전한 휴가를 위해 가급적 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행은 가족 단위로 가급적 짧게 하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교직원들은 ‘3행’, ‘3금’ 생활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한 여름방학·휴가 보내기 수칙’을 각급 학교에 안내</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안전한 방학생활을 위한 수칙으로 ‘3행’과 ‘3금’을 제시</p> <p>- 여름방학 및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도로서 학생들에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음</p> <p>- 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제시하여 타의 모범과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교육청 ‘안전한 여름방학·휴가 보내기 수칙’ 안내/전북도민일보 (2020.8.03.)</p> <p>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191</p> <p>“안전한 여름방학-휴가 보내기 수칙 지켜요”/전북중앙(2020.8.03.)</p> <p>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522</p> <p>방학-휴가철 ‘3행3금’ 꼭 지켜주세요/전라일보(2020.08.03.)</p> <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804</p> <p>코로나19 이후 짧은 방학, 학생 안전 무방비 우려/전북도민일보 (2020.08.13.)</p> <p>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648</p> <p>전북교육청, 여름방학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당부/전주 KBS(2020.08.18.)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9172</p>
타시도 사례	

제 목	전북청소년연극제, 사상 최초 비대면으로 열린다		
출 처	새전북신문	기사날짜	2020.08.03
기사주소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0384	작 성 자	이종근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권리<정규교과 이와 교육활동의 자유> - 복지에 관한 권리<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p>전북청소년연극제가 사상 최초로 비대면으로 치러진다.</p> <p>올해로 제24회를 맞은 전북청소년연극제가 12일부터 15일까지 4개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린다.</p> <p>전북청소년연극제는 전북 지역 청소년연극의 대표적인 축제로 전북의 연극발전 초석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연극이 인간의 감성과 시대를 반영하는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청소년들이 펼치는 무대는 기성세대들이 잊고 살았던 순수함과 진실함이 발견되는 자리라 여겨지고 있다.</p> <p>12일 오후 4시엔 전주제일고 까멜레온의 ‘행복한 집의 아이를 구해주세요(김송비 작, 황미영, 김송비 연출)’, 13일 오후 4시엔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산목의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김정숙 작, 신재은 연출)’가 무대에 올려진다.</p> <p>이어 14일 오후 4시엔 지평선고등학교 아파시오 나토의 ‘포에티카비행사(정은비 작, 임여원 연출)’, 15일 오후 4시엔 전주산업정보고 ING</p>

	<p>의 ‘그날의 외침(ING 연극부 작, 정윤지 연출)’을 선보인다.</p> <p>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가팀이 줄었다. 하지만 끼멜레온과 ING 등 2팀은 창작 초연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p> <p>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조민철)가 주관하는 이번 연극제는 성적에 대한 고민, 청소년 자살 등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와 죽음, 부모와의 갈등 사회적 문제를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p> <p>이번 연극제를 통해 최우수작품상(전북도지사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오는 11월 경남 밀양에서 열리는 제24회 전국청소년연극제 본선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p> <p>전북연극협회장 조민철회장은 “비록 예년에 비해 출전학교의 수는 줄어들었다하나 고난을 뚫고 성취하려는 의지와 팀워크는 역대 최고라 할 수 있을 것” 이다면서 “단 한 번의 공연을 위해 흘려온 땀과 노력은 무대 위에서 보상 받을 것이고 이는 어쩌면 여러분 가슴에 영원히 각인이 될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이라고 했다.</p> <p>이어 “연극제의 주인이자 전북연극의 미래인 모든 참가자들은 이미 모두가 진정한 승리자다” 며 “여러분의 말에, 표정에, 몸짓에 관객들은 웃고, 울고, 환호할 것인 만큼 세상의 주인이 될 무대의 주인들인 여러분이 애써 만든 연극잔치를 마음껏 즐겨달라 “고 덧붙였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청소년연극제가 사상 최초로 비대면으로 치러짐 - 성적에 대한 고민, 청소년 자살 등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와 죽음, 부모와의 갈등 사회적 문제를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상황에서 오랜 전통의 전북청소년연극제가 최초로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은 좋은 의도임 -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우울감, 정신적 피로감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이 비대면으로 통하여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제24회 전북청소년연극제...코로나19도 꺾지 못한 청소년들의 열정/전북도민일보(2020.08.06.) 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640</p> <p>‘행복한 집의 아이를 구해주세요’ 24회 전북청소년연극제 대상/새전북신문(2020.08.17) http://sibnews.com/news/news.php?number=691341</p>
타시도 사례	<p>경기도, 비대면 평생교육 사업비중 확대...올해 사업예산 32%까지 늘려/중부일보(2020.08.26.)</p> <p>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41275</p>

제 목	학교폭력 중재 나선 경찰 ‘논란’		
출 처	전북일보	기사날짜	2020.08.03
기사주소	http://www.i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736	작 성 자	송승욱
인권범위	<p>-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p>		
기사내용	<p>학교폭력 중재 나선 경찰 논란</p> <p>송승욱 승인 2020.08.03 21:26 댓글 0</p> <div> [사회] 전체기사 사외일반 경찰 사건·사고 보건·의료 법정·검찰 환경 날씨 </div> <p>경찰, 피해학생 부모 동의 없이 가해학생 측 부모와 만남 주선 피해부모 “2차 피해 두려워 익명 요구하고 절차상 문제 제기했더니 경찰이 되레 화를 내” 해당 경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런 것일 뿐 다른 의도 없다”</p> <p>학교폭력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일선 지구대가 피해·가해학생 부모간 만남을 주선해 논란이다.</p> <p>전주지역 중학교 1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학교폭력을 신고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았다. 지구대 B경사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와야 한다는 점을 피해부모에게 유선으로 안내했다. 다음날 오후 6시 37분께 통화에서 피해부모가 일정이 어려워 하루 연기를 요구하자 B경사는 가해학생 부모가 오후 8시에 오기로 했으니 나와야 한다고 안내했다.</p> <p>피해부모가 다시 전화를 걸어 왜 가해학생 부모에게 연락을 했는지, 왜 만나야 하는지를 묻자 B경사는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된다고 말했다. 피해부모가 절차상 문제를 문제 삼자 B경사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다.</p> <p>경찰청 현장매뉴얼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를 보면 가해학생 검거보다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하고, 경찰서 인계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반드시 분리 동행토록 하고 있다.</p> <p>경찰, 피해학생 부모 동의 없이 가해학생 측 부모와 만남 주선 피해부모 “2차 피해 두려워 익명 요구하고 절차상 문제 제기했더니 경찰이 되레 화를 내” 해당 경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런 것일 뿐 다른 의도 없다”</p> <p>학교폭력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일선 지구대가 피해·가해학생 부모간 만남을 주선해 논란이다.</p> <p>전주지역 중학교 1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학교폭력을 신고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았다. 지구대 B경사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와야 한</p>		

	<p>다는 점을 피해부모에게 유선으로 안내했다. 다음날 오후 6시 37분께 통화에서 피해부모가 일정이 어려워 하루 연기를 요구하자 B경사는 가해학생 부모가 오후 8시에 오기로 했으니 나와야 한다고 안내했다.</p> <p>피해부모가 다시 전화를 걸어 왜 가해학생 부모에게 연락을 했는지, 왜 만나야 하는지를 묻자 B경사는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된다고 말했다. 피해부모가 절차상 문제를 문제 삼자 B경사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이라며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다.</p> <p>경찰청 현장매뉴얼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를 보면 가해학생 검거보다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하고, 경찰서 인계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반드시 분리 동행토록 하고 있다.</p> <p>피해부모는 “보복이 두려워 익명 신고를 원했는데 피해·가해학생 부모가 만나 자칫 2차 피해를 입을 뻔했다”면서 “경찰관은 오히려 민원인에게 ‘따지는 거냐’, ‘지적질하는 거냐’, ‘경찰관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며 강압적 어조로 응대했다”고 주장했다.</p> <p>이에 대해 B경사는 “아이들이 우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사건화하기보다 양측 이야기를 듣고 원만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p> <p>또 “피해부모 측 사전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서 다시 미리 전화를 드린 것이고 싫으면 안 만나도 된다고 안내했는데 계속 절차만 문제를 삼았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일선 지구대가 피해·가해학생 부모 간 만남을 주선해 논란이 됨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를 보면 가해학생 검거보다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하고, 경찰서 인계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반드시 분리 동행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를 위반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2차 피해임 -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처리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제 목	학교를 학생에게 돌려주자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08.06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652	작 성 자	한경연
인권범위	- 자치와 참여의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학교 규정에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p>학교를 학생에게 돌려주자</p> <p>△ 한경연 도민기자 ○ 승인 2020.08.06 16:54 ☎ 댓글 0</p>  <p>학생자치문화 형성을 위한 토론</p> <p>학교를 학생에게 돌려주기 위한, 아니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자치 교사연구회 모임이 그 것이다. 지난 6월에 이어서 7월, 그리고 8월에도 학생자치 교사연구회 모임이 있었다. 6월에는 학생자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 방향을 설정했는데, 7월에는 익산지역 학교의 생활규정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나 보장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협의와 토론을 했다. 8월에는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찾아보고 학교에 정착시키기 위해 교사연구회에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협의하고 토론하는 등 매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활발하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있다.</p> <p>학교를 학생에게 돌려주기 위한, 아니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자치 교사연구회 모임이 그 것이다. 지난 6월에 이어서 7월, 그리고 8월에도 학생자치 교사연구회 모임이 있었다. 6월에는 학생자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 방향을 설정했는데, 7월에는 익산지역 학교의 생활규정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나 보장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협의와 토론을 했다. 8월에는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찾아보고 학교에 정착시키기 위해 교사연구회에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협의하고 토론하는 등 매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활발하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있다.</p> <p>익산지역 초등과 중등 학교생활규정을 분석, 정리 발표를 맡은 A교사</p>		

	<p>(여, 초등)는 “예전에는 미성년자와 성인의 인격 또는 인권의 무게가 다르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어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는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다” 며 “학생이 시민이자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사회가 곧 도래할 것” 이라고 말했다.</p> <p>익산 학생자치 교사연구회는 이런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학생회 선거관리규정이 학생회 규정에 포함되었고, 학교생활규정과 학생자치 등이 인권적인 조항으로 탈바꿈했다. 학교생활규정에 학생의 권리가 마련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에 의한 학생회장에 대해서도 학교장의 임명장이 아닌 당선증을 주는 것도 커다란 변화의 일부이다. 학생회 구성 역시 학교장이 아닌 학생회장의 임명장으로 바뀌어 학생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p> <p>이창수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장은 “중요한 것일수록 놓치는 것이 많은데, 선생님들의 노력과 학생들의 자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면서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생활규정을 곧 만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하며 학생자치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p> <p>B교사(남, 중등)는 “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삽입한 조항들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해 고쳐 나갈 것” 이라고 하며 보여주기 위한 규정에 대한 반성을 하기도 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학생에게 돌려주기 위한, 아니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학생자치 교사연구회를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학생회 선거관리규정이 학생회 규정에 포함되었고, 학교생활규정과 학생자치 등이 인권적인 조항으로 탈바꿈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연구회 및 인권 연구 모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제 목	[독자기고] 우리 아이들의 선거, 온라인 투표로!		
출 처	전라일보	기사날짜	2020.08.06
기사주소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114	작 성 자	임영선
인권범위	- 자치와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기사내용	<div> <div> <div> <div>[독자기고] 우리 아이들의 선거, 온라인 투표로!</div> <div>영영규 기자 · 승인 2020.08.06 · 11면</div> <div> <div>댓글 0</div> <div>트위터</div> <div>페이스북</div> </div> <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p>지난 8월 3일 장계초등학교 2학기 임원선거를 온라인투표로 진행했다.</p> <p>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학교현장에 나가 온라인투표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 날 온라인투표를 체험하는 어린이들은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었다.</p> <p>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거에 출마하고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선거이자 귀한 경험이다.</p>  <p>아이들의 학교회장·부회장선거, 학급반장과 같은 선거의 경험은 그들이 10여년 후에 참여하게 될 미래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선거와 조합장, 각종 사회단체장 선거 등 사회기구를 구성하는 선거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며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경험이다.</p> <p>아직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는 대리투표 및 공개투표, 해킹 등의 위험성을 이유로 온라인투표가 도입되고 있지 않고 있다.</p> <p>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유권자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미래에는 공직선거에도 온라인투표가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다.</p> <p>지난 8월 3일 장계초등학교 2학기 임원선거를 온라인투표로 진행했다.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학교현장에 나가 온라인투표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 날 온라인투표를 체험하는 어린이들은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었다.</p> <p>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거에 출마하고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선거이자 귀한 경험이</p> </div> </div>		

다.

아이들의 학교회장·부회장선거, 학급반장과 같은 선거의 경험은 그들이 10여년 후에 참여하게 될 미래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선거와 조합장, 각종 사회단체장 선거 등 사회기구를 구성하는 선거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며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경험이다.

아직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는 대리투표 및 공개투표, 해킹 등의 위험성을 이유로 온라인투표가 도입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유권자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미래에는 공직선거에도 온라인투표가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다.

사실 공직선거에 온라인투표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술적 이유보다는 우리 유권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안면인식기술이나 지문인식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보급, 블록체인기술의 응용 등 현대의 기술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투표, 개인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투표를 얼마든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토대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세대 간 또는 유권자마다 아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공직선거에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가장 큰 위협은 투표율의 저하다. 온라인투표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유권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 투표일에 투표장까지 나가야 하는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장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투표제도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 이는 건전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온라인투표에 대한 편리성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들이 자라나서 주역이 되는 미래의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한 선거에서의 유비쿼터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고, 비대면을 권장하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온라인투표는 학생임원선거에 가장 부합하는 투표방식이라고 할만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학교 임원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적극 활용해 미래의 유권자인 아이들이 온라인투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온라인투표가 공직선거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계초등학교 2학기 임원선거를 온라인투표로 진행 - 온라인투표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유권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 투표일에 투표장까지 나가야 하는 기회비용을 절감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고, 비대면을 권장하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온라인투표는 학생임원선거에 가장 부합하는 투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문제점 및 개선을 통하여 전북 학교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및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함 -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에 대한 용이한 접근 및 사용으로 인하여 관심과 또 다른 선거운동 방식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짐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학생회장단선거 지원/새전북신문(2020.08.12.)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1072</p> <p>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원/새전북신문(2020.08.18.)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1458</p> <p>무주선관위 학교 선거지원 및 민주시민교육 실시/새전북신문(2020.08.04.)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0451</p> <p>전주덕진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한 학교 선거지원/전북연합신문(2020.08.23.) http://www.jbyonhap.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097</p>
타시도 사례	<p>내 손 안의 투표소, 온라인 선거/경남도민일보(2020.08.24.)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7462</p>

제 목	전주시내 고교서 식중독 의심환자 43명 발생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08.09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907	작 성 자	이휘빈
인 권 범 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급식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div> <h2>전주시내 고교서 식중독 의심환자 43명 발생</h2> <p>이휘빈 기자 승인 2020.08.09 15:21 댓글 0</p> </div> <p>전주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p> <p>지난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 소재 A고교서 총 43명(학생 41명, 교직원 2명)이 오전 9시경부터 복통과 어지럼증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또한 이중 3명은 증상이 심해 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p> <p>전북도교육청 및 전북도, 전주시 보건소 등은 오전 11시경 현장에 나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기관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환자 가검물 채취 및 오는 13일까지 급식 중단을 결정했다. 현재 보건 당국은 보존식 및 음용수, 식기 등 가검물을 채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p> <p>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추가환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식생활관 위생관리·조리종사원 위생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p>전주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p> <p>지난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 소재 A고교서 총 43명(학생 41명, 교직원 2명)이 오전 9시경부터 복통과 어지럼증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또한 이중 3명은 증상이 심해 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p> <p>전북도교육청 및 전북도, 전주시 보건소 등은 오전 11시경 현장에 나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기관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환자 가검물 채취 및 오는 13일까지 급식 중</p>		

	<p>단을 결정했다. 현재 보건 당국은 보존식 및 음용수, 식기 등 가검물을 채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p> <p>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추가환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식생활관 위생관리·조리종사원 위생교육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집단으로 발생</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추가환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식생활관 위생관리·조리종사원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p> <p>- 습도와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식자재 및 위생 기준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주 고교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검출/전북도민일보(202.08.24)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6824</p> <p>전주지역 고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40여명 발생/전북일보(2020.08.09.) http://www.i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149</p> <p>전주 한 고등학교서 42명 식중독 증세.. 역학조사 진행 중/전민일보(2020.08.09.)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404</p> <p>2학기 학교급식 안전 점검...급식소 등 위생 점검/전주KBS(2020.08.2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4321</p> <p>전주 한 고등학교서 학생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전주KBS(2020.08.0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1889</p> <p>학교급식 위협하는 여름철 불청객...식중독 주의 요망/전주일보(2020.08.13.) http://www.j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614</p>
타시도 사례	<p>정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은 냉장고 이상 탓...원장 고발”/연합뉴스(2020.08.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2076700530?input=1195m</p> <p>울산 고교서 16명 식중독 의심증세/조선비즈(2020.07.0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239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p>

제 목	전북지역 11개 학교 집중호우 피해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08.10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126	작 성 자	이휘빈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전북지역 11개 학교 집중호우 피해</p> <p>이휘빈 기자 승인 2020.08.10 18:28 댓글 0</p>  <p>전북도교육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11개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p> <p>도교육청은 10일 집중호우와 강풍, 낙뢰로 인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남원지역 피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p> <p>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 학교는 모두 11개교로 남원 6교(월락초, 대강초, 남원서원초, 수지중, 남원용성중, 남원여고), 전주 2교(전주근영중, 전주신흥고), 군산 1교(군산 상업고), 김제 1교(봉남초), 순창 1교(순창중) 등이다.</p> <p>특히 이번 호우로 피해가 큰 남원의 경우 초 3교, 중 2교, 고 1교에서 운동장 침수, 교사 누수, 토사 유출, 경사면 붕괴 등이 발생했다.</p> <p>전북도교육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11개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p> <p>도교육청은 10일 집중호우와 강풍, 낙뢰로 인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남원지역 피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p> <p>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 학교는 모두 11개교로 남원 6교(월락초, 대강초, 남원서원초, 수지중, 남원용성중, 남원여고), 전주 2교(전주근영중, 전주신흥고), 군산 1교(군산 상업고), 김제 1교(봉남초), 순창 1교(순창중) 등이다.</p> <p>특히 이번 호우로 피해가 큰 남원의 경우 초 3교, 중 2교, 고 1교에서 운동장 침수, 교사 누수, 토사 유출, 경사면 붕괴 등이 발생했다.</p>		

	<p>다행히 이번 호우로 학생들의 인명 피해는 없다. <u>초등학교는 지난달 말부터 올해 초 방학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등교 중인 학교가 있어 학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u>이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 426교 중 53교(12.4%), 중학교 210교 중 137교(65.2%), 고교 133개교 중 115교(86.5%)로 총 769교 중 305교가 등교 중에 있다.</p> <p>또한 도교육청은 현재 이재민 임시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방역조치 점검 및 방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학교는 총 13교(남원 8교, 임실 2교, 진안 1교, 순창 1교, 전주 1교)며 특히 남원 송동초초와 산동초에 각각 79명과 52명이 수용돼있다.</p> <p>도교육청은 <u>현장점검을 통해 신속한 복구와 추가피해 예방,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할 예정</u>이다.</p> <p>먼저 지역별 피해 현황 파악 및 피해학교 학사일정을 확인하고, 교육학교와 학생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재민 임시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 및 학생과 이재민 동선등도 다시 점검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현장 점검 및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한편 도교육청은 12일부터 전주생명과학고를 비롯해 전주한일고, 무주부당초, 이리유치원 등 지난달 30일 집중호우 피해 학교 복구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11개교에서 피해를 입었음 - 현장점검을 통해 신속한 복구와 추가피해 예방,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할 예정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현장 조사와 점검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요소들을 빠르게 복구할 필요가 있음 - 시설복구 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도교육청, 집중호우 피해 학교 현장 점검/새전북신문(2020.08.10.)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0941</p> <p>도교육청 집중호우 피해 학교 현장 점검나서/전북중앙(2020.08.10.)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030</p>
타지도 사례	

제 목	학교 운동부, 학교공공스포츠클럽으로 변신		
출 처	전북일보	기사날짜	2020.08.19
기사주소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861	작 성 자	백세중
인권범위	-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p>학교 운동부, 학교공공스포츠클럽으로 변신</p> <p>백세중 승인 2020.08.19 19:46 댓글 0</p> <p>【교육】 전체기사 교육일반 초중고 대학</p> <p>전북교육청, 전환 계획 마련...경남 이어 전국 2번째 178억 투입, 내년부터 학교가 만든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해당 학교 학생 아닌 도내 모든 학생 가입 가능</p>  <p>전북교육청사 전경.</p> <p>전북지역 학교운동부가 없어지고 이를 대신할 학교공공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진다.</p> <p>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회계부정, 입시비리, 성폭력 등 여러 문제점이 빈번했던 학교운동부를 공공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환경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p> <p>학교공공스포츠클럽은 기존 해당학교 학생만 운동부에 들어갈 수 있던 것과 달리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도내 모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경남도가 지난 2018년 도입했으며, 전북이 도입하면 두 번째다.</p> <p>전북교육청, 전환 계획 마련...경남 이어 전국 2번째 178억 투입, 내년부터 학교가 만든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해당 학교 학생 아닌 도내 모든 학생 가입 가능</p> <p>전북지역 학교운동부가 없어지고 이를 대신할 학교공공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진다.</p>		

내용분석	<p>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u>회계부정, 입시비리, 성폭력등 여러 문제점이 빈번했던 학교운동부를 공공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환경개선에 나선다</u>고 19일 밝혔다.</p> <p>학교공공스포츠클럽은 기존 해당학교 학생만 운동부에 들어갈 수 있던 것과 달리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도내 모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고, <u>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u>이다. 이 제도는 경남도가 지난 2018년 도입했으며, 전북이 도입하면 두 번째다.</p> <p>도교육청은 1단계로 학교운동부를 2021년까지 지역형 스포츠클럽(축구, 야구)과 위탁형 스포츠클럽(11개 종목)으로 전환하고, 2단계로 2022년부터 지역생활체육이 활성화된 종목 중심으로 클럽 가능한 종목 및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종목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시설확충비 150억원, 운영비지원 28억원이다.</p> <p>이 같은 계획에 따라 도내 초·중학교 축구 11팀(초6팀, 중5팀), 야구 8팀(초4팀, 중4팀)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신청을 받아 지역형 회원제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다. 고등학교 운동부는 제외다.</p> <p>지역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시 도교육청은 연간 3000만원씩 5년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휴게공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p> <p>위탁형 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이스하키와 유도,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스피드스케이팅, 싱크로나이즈드 피겨, 배구, 농구, 켈링, 탁구 등 10개 종목의 경우 종목별로 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고 2021년에는 수영 종목이 추가된다.</p> <p>클럽은 법인화를 통해 대표를 선임하며, 주로 체육코치 등 지도자들이 맡게 된다.</p> <p>특히 <u>도교육청은 시설확충을 위해 기존 폐교를 운영하거나 신규 부지를 매입해 클럽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u>이다. 또 <u>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안정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해 나갈 계획</u>이다.</p> <p>도교육청 김쌍동 인성건강과 과장은 “경남의 경우 전환 초기 학부모와 지도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정착된 상태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교, 지역, 국가대표로 연계가능하다”며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 학생이 소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클럽 수를 더 늘리고 대상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회계부정, 입시비리, 성폭력등 여러 문제점이 빈번했던 학교운동부</p>

및 쟁점사안	<p>를 공공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환경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공공스포츠클럽은 기존 해당학교 학생만 운동부에 들어갈 수 있던 것과 달리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도내 모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하여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준비해 나가야 함 - 타시도에서 시행시에 나타난 문제점 및 정책 등을 개선하여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학교스포츠클럽, 전북체육 앞 날 밝힐 수 있나/전북중앙(2020.08.27.)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285</p> <p>전북체육회,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전북일보(2020.08.26.)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370</p> <p>전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 공공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새전북신문(2020.08.18)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1523</p> <p>전북체육회,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10월 16일까지 공모/연합뉴스(2020.08.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32400055?input=1195m</p>
타시도 사례	<p>울산시교육청, 울산야구학생공공스포츠클럽 출범/경상일보(2020.07.30.)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901</p> <p>울산시교육청 “H고 축구부 ‘학생공공스포츠클럽’ 전환” /울산제일일보(2020.08.18.)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889</p> <p>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도내 4개소 선정/경남신문(2020.06.05.)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26724</p> <p>동해·양구,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선정/KBS(2020.06.0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4933&ref=A</p>

제 목	수도권은 원격수업, 전북은 3분의 1씩 등교 수업		
출 처	새전북신문	기사날짜	2020.08.25
기사주소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2079	작 성 자	공현철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수도권은 원격수업, 전북은 3분의 1씩 등교 수업</p> <p>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현장 상황 감안해 학교장의 재량 따라 전북 초중고 767개 가운데 444개 개학, 격주·격일제 홀짝제 등 순환 등교 대입 앞둔 고3 등교수업 유지, 전북도교육청 수능 D-100일 대비 전략 제언 “현 상태 유지하되 확진자 등 상황에 따라 수도권처럼 바뀔 수 있어”</p> <p>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08월 25일 17시05분</p> <p>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 수도권 유·초·중·고교의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전북 지역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등교 학생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p> <p>이날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 유·초·중학교는 등교 학생 수를 기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였다.</p> <p>단, 고등학교는 기존대로 3분의 2, 대입수능을 앞둔 고3은 등교수업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학입시 수시모집 준비와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3일)을 100일 남겨둔 상황에서 등교와 대면수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p> <p>또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현장 상황을 감안해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등교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시켰다. 적용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p> <p>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유·초·중·고교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약 3주간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 전 미리 학교 문을 먼저 닫아 감염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고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고3은 전북지역과 같은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일정이 다르나 이날 기준 초·중·고 767개교 가운데 444개교가 개학했다”며 “이들 학교는 격주·격일제, 홀짝제 등 등교시간을 조정해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한 채 순환 등교하게 된다”고 말했다.</p> <p>수도권은 원격수업, 전북은 3분의 1씩 등교 수업</p> <p>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현장 상황 감안해 학교장의 재량 따라 전북 초중고 767개 가운데 444개 개학, 격주·격일제 홀짝제 등 순환 등교 대입 앞둔 고3 등교수업 유지, 전북도교육청 수능 D-100일 대비 전략 제언 “현 상태 유지하되 확진자 등 상황에 따라 수도권처럼 바뀔 수 있어”</p> <p><u>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 수도권 유·초·중·고교의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전북지역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등교 학생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u></p> <p>이날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u>학교 밀집도 기준</u>’을 <u>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u>, 유·초·중학교는 등교 학생 수를 <u>기존 3분의 2에서</u></p>		

3분의 1로 줄였다.

단, 고등학교는 기존대로 3분의 2, 대입수능을 앞둔 고3은 등교수업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학입시 수시모집 준비와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3일)을 100일 남겨둔 상황에서 등교와 대면수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현장 상황을 감안해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등교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시켰다. 적용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유·초·중·고교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약 3주간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 전 미리 학교 문을 먼저 닫아 감염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고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고3은 전북지역과 같은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일정이 다르나 이날 기준 초·중·고 767개교 가운데 444개교가 개학했다”며 “이들 학교는 격주·격일제, 홀짝제 등 등교시간을 조정해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한 채 순환 등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수도권처럼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면서 “고3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특수성을 감안해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정시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이 절대적임을 감안해 △지망 대학 맞춤형 공부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 참고 △약점 보완 오답노트 활용 등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는 고3 수험생이나 N수생 모두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를 고려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 EBS 교재가 기본이 된 수능 학습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또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신에게 경쟁력이 있는 전형요소와 대학별 모집단위를 찾고, 전년도 입시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의 전형방법과 학과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규 전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올해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 준비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수능 학습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위대한 수험생들을 적극 응원한다”고 말했다.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 수도권 유·초·중·고교의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전북지역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등교 학생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 - 고등학교는 기존대로 3분의 2, 대입수능을 앞둔 고3은 등교수업을 그대로 유지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등교 학생수 조정은 필수 불가결함 - 1학기에 나타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업 불균형,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전라북도 지역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비수도권 지역 2학기 등교인원 2/3 유지 합의/전북중앙(2020.8.19.)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708</p> <p>전북 등교인원 3분의 2로 제한/전북도민일보(2020.08.20.)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6470</p> <p>전북교육청, 학교 밀집도 최소화/새전북신문(2020.08.20.)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1740</p> <p>전북교육청,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교육행사 연기.취소/전민일보(2020.08.22)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170</p> <p>“답답하고 짜증나도 마스크는 필수죠” /전라일보(2020.08.27.)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711</p> <p>학교 밀집도 최소화…전북, 등교·원격 수업 병행/전주KBS(2020.08.2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4683</p> <p>온라인 개학 중 초등학교 교직원 음주 논란/전주KBS(2020.05.2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5270</p> <p>26일부터 초·중학교 3분의 1만 등교/JTV(2020.08.24.) https://jtv.co.kr/2012/?r=home&c=10/70&cat=JTV+8%EB%89%B4%EC%8A%A4&sort=uid&orderby=desc&where=subject%7Ctag&keyword=%ED%95%99%EA%B5%90&uid=2138726</p>
타시도 사례	<p>31일부터 수도권 학원 대면수업 전면 금지… “위반 시 벌금·구상권” /세계일보(2020.08.28.)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28514367?OutUrl</p> <p>수도권 유·초·중·고, 26일~9월 11일 전면 원격 수업…고3은 등교/SBS(2020.08.2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46230&plink</p> <p>제주 초·중학교 등교 3분의 1로 제한된다/뉴제주일보(2020.08.24.)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9866</p>


제 목	제8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공개모집 한다		
출 처	전민일보	기사날짜	2020.08.28
기사주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601	작 성 자	이재봉
인권범위	- 자치와 참여의 권리<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p>제8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공개모집 한다</p> <p>이재봉 기자 승인 2020.08.28 20:03 댓글 0</p> <p> 초5~고2학년 대상...31일~9월18일까지 접수</p>  <p>전북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북 학생참여위원을 공개 모집한다.</p> <p>28일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도내 초등 5학년~고 2학년을 대상으로 '제8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p> <p>학생참여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p> <p>특히 학생참여위원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학생인권실천계획 의견 제출 △학생인권실태와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p>		
	<p>전북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북 학생참여위원을 공개 모집한다.</p> <p>28일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도내 초등 5학년~고 2학년을 대상으로 '제8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p> <p>학생참여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과 관련</p>		

	<p>된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p> <p>특히 학생참여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학생인권실천계획 의견 제출 △학생인권실태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p> <p>학생참여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p> <p>이후 도교육청은 9월 22일 공개 추첨을 통해 40명을 선발하고, 같은달 25일 선정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p> <p>또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 의견 반영 등을 위해 교육감이 위촉하는 10명을 포함해 총 50명으로 학생참여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예정이다.</p> <p>임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1년 간이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북 학생참여위원을 공개 모집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기째를 맞는 학생참여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학생인권 관련 정책에 대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여야 함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위촉식 및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임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p>전북교육청, 제8기 학생참여위원 모집…총 40명 선발/뉴스1(2020.08.29.) https://www.news1.kr/articles/?4041468</p>

* 8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일지(타시도)

제 목	권익위, “여학생 교복 치마 또는 바지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권고		
출 처	경향신문	기사날짜	2020.08.03
기사주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31343001&code=910100	작 성 자	김유진
인권범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성을 실현할 권리> -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기사내용	<p>권익위, "여학생 교복 치마 또는 바지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권고</p> <p>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2020-08-03 13:43 입력 2020-08-03 13:43 수정</p> <p>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여학생들이 교복을 신청할 때 치마나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p> <p>권익위는 2015년부터 실시된 '교복 학교 주관구매제도'에 따라 학교마다 입찰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제기된 여러 민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p> <p>대표적 민원 사례는 여학생들의 교복 바지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였다. 지난 1월 A씨는 국민신문고에 “교복을 바지로 주문하려하니 여학생은 치마로 기본 셋팅이 되어 있어 바지로 전환이 안 되며 추가금액을 내야 가능하다고 했다”며 “남학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로 규정해 단순한 선택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라고 적었다.</p> <p>또한 교복 가격 중액의 상한만 정할 뿐 재킷이나 바지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어 추가 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나 블라우스, 치마, 바지 등의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내게 하고 가격 적정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p> <p>권익위는 또 교복 품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 공고 시 섬유소재, 혼용률 등에서 현재 기준을 적용하고, 교복선정위원회 역할도 내실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한 교복 치수 측정 기간이 3일로 짧은 탓에 맞벌이 학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던 점을 고려해 주말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p> <p>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교복 선정 시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품질·디자인, 학생의 성 인지 감수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과 관련한 불만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여학생들이 교복을 신청할 때 치마나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p> <p>권익위는 2015년부터 실시된 ‘교복 학교 주관구매제도’에 따라 학교마다 입찰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제기된 여러 민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p> <p>대표적 민원 사례는 여학생들의 교복 바지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였다. 지난 1월 A씨는 국민신문고에 “교복을 바지로 주문하려하니 여학생은 치마로 기본 셋팅이 되어 있어 바지로 전환이 안 되며 추가금액을 내야 가능하다고 했다”며 “남학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로 규정을</p>		

	<p>해 단순한 선택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라고 적었다.</p> <p>또한 교복 가격 총액의 상한만 정할 뿐 재킷이나 바지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어 추가 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나 블라우스, 치마, 바지 등의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내게 하고 가격 적정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p> <p>권익위는 또 교복 품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 공고 시 섬유 소재, 혼용률 등에서 현재 기준을 적용하고, 교복선정위원회 역할도 내실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한 교복 치수 측정기간이 3일로 짧은 탓에 맞벌이 학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온 점을 고려해 주말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p> <p>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교복 선정 시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품질·디자인, 학생의 성 인지 감수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며 ”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과 관련한 불만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여학생들이 교복을 신청할 때 치마나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 - 남학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로 규정해 단순한 선택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선택과 형식을 학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결정하여 다양화 하여야 함 - 기존의 획일적인 교복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복 선정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여학생 교복, 치마 외 바지도 선택할 수 있다…가격도 인하/뉴스1(2020.08.03.) https://www.news1.kr/articles/?4014329</p> <p>스커트 입던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 자율화된다/매일신문(2020.08.03.) https://news.imaeil.com/Politics/2020080309115585594</p> <p>“교복 중 추가 구매 많은 셔츠·치마 등 비싸” 권익위 개선 권고/연합뉴스(2020.08.03.)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3022100001?input=1195m</p>
타시도 사례	

제 목	한국 청소년, 수면·운동 부족한데도 “난 건강” . . . “건강권 인식 필요”		
출 처	경향신문	기사날짜	2020.08.03
기사주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31517001&code=940100	작 성 자	김세영
인권범위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한국 청소년, 수면·운동 부족한데도 “난 건강”/“건강권 인식 필요” <small>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2020-08-03 15:17 일렉 2020-08-03 15:17 수정</small></p>  <p><small>경향신문 자료사진</small></p> <p>한국 청소년들은 수면 시간과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것에 비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p> <p>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3일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발표해 “청소년들은 학업 위주의 생활환경 때문에 건강의 기본요소인 운동, 영양, 휴식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청소년 건강 실태를 조사해 정책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학생 청소년 8201명과 교사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p> <p>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면시간은 평균 7시간18분으로, OECD 평균(8시간22분)에 1시간 이상 못 미친다. 특히 초등학생 수면시간(8시간41분)은 미국 수면재단이 권장하는 초등학생 수면시간(10~11시간)과 차이가 크며 중학생(7시간21분)에서 고등학생(6시간3분)으로 갈수록 짧아진다.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5.2%도 ‘수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p> <p>한국 청소년들은 수면 시간과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것에 비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p> <p>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3일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발표해 “청소년들은 학업 위주의 생활환경 때문에 건강의 기본요소인 운동, 영양, 휴식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청소년 건강 실태를 조사해 정책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학생 청소년 8201명과 교사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p> <p>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면시간은 평균 7시간18분으로, OECD 평균(8시간22분)에 1시간 이상 못 미친다. 특히 초등학생 수면시간(8시간41분)은 미국 수면재단이 권장하는 초등학생 수면시간(10~11시간)과 차이가 크며 중학생(7시간21분)에서 고등학생(6시간3분)으로 갈수록 짧아진다.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55.2%도 ‘수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p>		

	<p>또한 청소년 33.1%가 ‘학교 체육시간 이외 운동시간은 전혀 없다’ 고 응답하는 등 신체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시간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초등학교(16.3%), 중학교(34.4%), 고등학교(46.9%)로 높아졌으며 고3은 체육시간에조차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6.9%였다.</p> <p>식생활에선 편차가 컸다. 주 5일 이상 아침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은 24.3%인 반면 매일 아침식사를 한 청소년도 절반 이상(51.2%)이었다. 저녁식사를 한 날 역시 평균 주 6.49일이지만, 주 5일 이상 저녁식사를 결식한 비율도 2.8%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1.47일은 저녁식사로 라면, 빵, 삼각김밥 등 간편식을 섭취했다.</p> <p>이처럼 조사 결과는 수면·운동 부족을 드러내지만, 청소년 스스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인식 지표는 87.6%로 높게 나타났다. 교사 91.3% 역시 ‘실생활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p> <p>이같은 괴리에 대해 연구진은 “건강권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거나 건강에 대한 권리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건강권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최고 수준의 건강을 가질 권리”라며 “청소년이 학업보다 건강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청소년들은 수면 시간과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것에 비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 - 수면시간 부족 및 운동시간 부족이 나타나고, 식생활 개선도 필요함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건강은 코로나 19 상황 및 면역력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임 - 다양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영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청소년 평균 수면시간 7시간 18분…1주일 중 이틀 이상 아침 걸러/조선에듀(2020.08.03.)</p> <p>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1630.html</p> <p>잠 못 자고 운동 안 하는데…청소년 88% “난 건강해” /경향신문(2020.08.03.)</p> <p>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32044005&code=940401</p>
타시도 사례	

제 목	“ ‘짱깨’ ‘호모’ 안 돼요” …인권위,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전국 학교 배포		
출 처	한겨레	기사날짜	2020.08.04
기사주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6389.html	작 성 자	박윤경
인권범위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사내용	<p>“‘짱깨’ ‘호모’ 안 돼요”…인권위,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전국 학교 배포</p> <p>등록 : 2020-08-04 11:59 수정 : 2020-08-05 02:14</p> <p>☞</p> <p>인권위, 이번달 중 ‘혐오표현 학습지도안’ 배포 예정</p>  <p>국가인권위원회 인권·<한겨레> 자료사진</p> <p>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모욕 등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를 전국 초·중등학교에 배포했다. 교육현장에서 혐오표현 매뉴얼 역할을 하게 될 이 안내서는 교장·교감 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생,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작됐다.</p> <p>4일 인권위는 “교육현장에서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및 해설서, 실천 행동 포스터 등을 제작해 전국 1만2천곳 초·중등학교와 교육연구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p> <p>인권위가 공개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안내서)를 보면, <u>‘혐오표현’을 ‘특정 집단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이 필요하다고 부추기는 말과 행동’으로 정의했다.</u> 이어 “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과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편견에서 시작한다”며 “혐오표현으로 인해 사회</p>		

	<p>적 소수자들은 더 불안하고 불평등한 환경에서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p> <p>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30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p> <p>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30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p> <p><u>안내서가 인용한 혐오표현의 예로는 ‘김치녀’ ‘콩깡이’ (성별), ‘급식충’ ‘틀딱충’ (나이), ‘짱깨’ ‘흑형’ ‘똥남아’ (인종이나 출신국가), ‘병신’ ‘결정장애’ (장애), ‘호모’ ‘게이/레즈 같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제시됐다. ‘난민은 거짓말로 들어온 것이니 모두 추방해야 한다’ ‘성소수자 때문에 국민 건강이 위협하다’와 같이 편견에 근거해 증오심과 적대심을 부추기는 표현도 혐오표현으로 적시했다.</u></p> <p>인권위는 이번달 안으로 혐오표현 초·중등 학습지도안과 예방 캠페인 영상, 만화를 전국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모욕 등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를 전국 초·중등학교에 배포 - 혐오표현의 예로는 ‘김치녀’ ‘콩깡이’ (성별), ‘급식충’ ‘틀딱충’ (나이), ‘짱깨’ ‘흑형’ ‘똥남아’ (인종이나 출신국가), ‘병신’ ‘결정장애’ (장애), ‘호모’ ‘게이/레즈 같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제시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를 배포하고 그에 대한 사후 교육이 필요함 - 초·중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표현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인권위,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전국 초·중·고에 배포/MBC(2020.08.04.)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63841_32633.html</p> <p>인권위,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배포...“교육공동체 적극 대응해야”/YTN(2020.08.04)https://www.ytn.co.kr/_ln/0103_202008041433302617</p>
타시도 사례	

제 목	인권위 “학생 인권 침해하는 과도한 두발 규정 개정” 권고		
출 처	서울신문	기사날짜	2020.08.16
기사주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6500070&wlog_tag3=naver	작 성 자	오세진
인권범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성을 실현할 권리> -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인권위 “학생 인권 침해하는 과도한 두발 규정 개정” 권고 입력: 2020-08-16 16:12 수정: 2020-08-16 16:12		
기사내용	<div data-bbox="355 573 1133 884" data-label="Image"> </div> <p>▲ 사진은 2018년 11월 2일 오전 당시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2018 학생의 날' 두발 자유·청소년 참여권·스쿨미투에 응답하라! 기자회견의 모습. 2018.11.2 연합뉴스</p> <p>전교생의 두발을 스포츠형 머리로 제한한 대구의 한 사립고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두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p> <p>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학교가 두발 검사에서 투블록형(윗머리는 길고 옆머리와 뒷머리 아랫부분은 짧은 형태) 또는 상고형(뒷머리를 아랫부분부터 위 방향으로 짧게 깎은 형태) 머리로 금지하는 등 과도한 두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모두 남학생이다.</p> <p>이 학교 교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두발 규정에는 분명하게 스포츠 형태의 머리 규정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 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오랜 기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된 것이지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강압적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p> <p>이 학교는 평균 6주 간격으로 학생들의 두발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를 계속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p> <p>전교생의 두발을 스포츠형 머리로 제한한 대구의 한 사립고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두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p> <p>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학교가 두발 검사에서 투블록형(윗머리는 길고 옆머리와 뒷머리 아랫부분은 짧은 형태) 또는 상고형(뒷머리를 아랫부분부터 위 방향으로 짧게 깎은 형태) 머리로 금지하는 등 과도한 두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모두 남학생이다.</p> <p>이 학교 교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두발 규정에는 분명하게 스포츠 형</p>		

	<p>태의 머리 규정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 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오랜 기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된 것이지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강압적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p> <p>이 학교는 평균 6주 간격으로 학생들의 두발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를 계속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p> <p>그러나 <u>인권위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엔 협약)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학교의 두발 규정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u></p> <p>인권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및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 유엔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두발 규제가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p> <p>이어 “<u>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하게 만든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측면에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지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정당성은 부적합하다</u>”면서 “<u>이 학교 규정은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u>”고 판단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생의 두발을 스포츠형 머리로 제한한 대구의 한 사립고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 학교 규정은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발 제한 규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엔 협약),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임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투블록’ 등 유행 헤어스타일 안된다는 학교...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YTN(2020.08.16)https://www.ytn.co.kr/_ln/0103_202008161857294428</p> <p>‘투블록·상고머리’ 안된다는 학교...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연합뉴스(2020.08.16.)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6032100004</p> <p>‘투블럭’ 머리스타일 금지한 남고에 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세계일보(2020.08.16.)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16516314</p>
타시도 사례	

제 목	제주 학생인권 보장 조례 생긴다		
출 처	한겨레	기사날짜	2020.08.06
기사주소	http://www.hani.co.kr/arti/area/jeju/956718.html	작 성 자	허호준
인권범위			

기사내용

제주 학생인권 보장 조례 생긴다

f t ↗ ★ ☰ + -

제주도의회 입법예고...9월 임시회서 처리
교육·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 내용 담아



제주도의회

제주지역에도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제주도의회는 고은실 의원(정의당) 등 도의원 22명의 공동발의로 제주도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시행하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 금지 등을 명시했다. 또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 입법예고...9월 임시회서 처리

교육·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 내용 담아

제주지역에도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제주도의회는 고은실 의원(정의당) 등 도의원 22명의 공동발의로 제주도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야간 자

	<p>을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시행하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 금지 등을 명시했다. 또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p> <p>이와 함께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와 압수 금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사적인 기록물 열람 금지 등도 조례안에 담았다.</p> <p>또 교외에서의 이름표 부착 강요 금지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이나 서약 등 진술 강요 금지, 특정 종교행사 참여, 특정 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도 명문화했다. 이 밖에 교육감과 학교장 등이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이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 먼저 예산 배정에 노력하도록 했다.</p> <p>도의회는 그동안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주도교육청 학교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를 준비해왔다.</p> <p>앞서 지난 3월에는 제주도내 학생 등 1002명이 ‘제주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청원한 바 있다.</p> <p>도의회는 오는 18일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에도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서 6번째로 만들어지는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여러 찬반이 있겠지만 학생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함 -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보다 진일보한 학생인권조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학생인권조례 제정 앞두고 찬·반 맞붙 집회 격화/KBS(2020.08.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9909&ref=A</p> <p>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놓고 찬·반갈등/제주일보(2020.08.18.)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0007</p> <p>학생권리는 어디까지?인권조례 찬.반엇갈려/제주MBC(2020.08.19.) https://jejumbc.com/article/3PjsrV26NR5d</p>
타시도 사례	

제 목	‘성희롱’ 창원 사립중 교사 2명 징계 요청		
출 처	경남신문	기사날짜	2020.08.25
기사주소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2491	작 성 자	김호철
인권범위	<p>-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p> <p><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p> <p>‘성희롱’ 창원 사립중 교사 2명 징계 요청</p> <p>도교육청 “심의위 통해 성희롱 판단”</p> <p>기사입력 : 2020-08-25 20:57:08 좋아요 0%</p>		
기사내용	<p>경남도교육청은 25일 성희롱 등 발언을 한 창원의 모 사립중 교사 2명의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했다고 밝혔다.</p> <p>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발언 등 사안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며 외부전문가 5명을 포함한 창원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재단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경남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p> </div> <p>한편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지난 3일 교무실 옆 게시판에 교사 2명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하는 대자보를 붙였다.</p> <p>이 학생은 대자보에서 “교사들이 자기소개 시간에 ‘이름에서 성을 바꾸면 성폭행이죠?’, ‘나한테는 교복을 그렇게 입은 게 제일 야하더라’, ‘왕이 침대에서 왕비의 옷을 한 꺼풀 벗기면 하얏다’, ‘대가리에 총 맞은 소리 하지 마라. 교복 바지 입고 싶으면 전학 가라’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p> <p>경남도교육청은 25일 성희롱 등 발언을 한 창원의 모 사립중 교사 2명의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했다고 밝혔다.</p> <p>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발언 등 사안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며 외부전문가 5명을 포함한 창원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재단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p> <p>한편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지난 3일 교무실 옆 게시판에 교사 2명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하는 대자보를 붙였다.</p>		

	이 학생은 대자보에서 “ <u>교사들이 자기소개 시간에 ‘이름에서 성을 바꾸면 성폭행이죠?’</u> , ‘ <u>나한테는 교복을 그렇게 입은 게 제일 야하더라</u> ’, ‘ <u>왕이 침대에서 왕비의 옷을 한 껌 벗기면 하얏다</u> ’, ‘ <u>대가리에 총 맞은 소리 하지 마라. 교복 바지 입고 싶으면 전학 가라</u> ’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교육청은 25일 성희롱 등 발언을 한 창원의 모 사립중 교사 2명의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은 그 파장 및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볼 때 매우 중대한 사안임 -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병행되어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간추린 경남] ‘성희롱 발언’ 여중 교사 징계 요구/창원KBS(2020.08.2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5278&ref=A</p> <p>창원 한 여중서 ‘교사 성희롱·폭언’ 대자보/경남매일(2020.08.07.)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55198</p> <p>“야해 보이려고 교복 입었나“…女중학교 게시판에 붙은 글/중앙일보(2020.08.07.) https://news.joins.com/article/23842793</p> <p>“이름에서 성을 바꾸면 성폭행이죠?“…여자 중학교 ‘스쿨 미투’/연합뉴스(2020.08.06.)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6061500052?input=1195m</p>
타시도 사례	

제 목	프로야구 NC, 학교폭력 논란 김유성 지명 철회		
출 처	중앙일보	기사날짜	2020.08.27
기사주소	https://news.joins.com/article/23858460	작 성 자	김효경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프로야구 NC, 학교폭력 논란 김유성 지명 철회</p> <p>[중앙일보] 입력 2020.08.27 15:36 수정 2020.08.27 16:35</p>  <p>김해고 투수 김유성. [연합뉴스]</p> <p>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학교 폭력 논란이 있는 김해고 투수 김유성의 1차 지명을 철회했다.</p> <p>NC는 "김유성의 2021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을 철회한다. 해당 선수가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1차 지명 과정에서 해당 선수의 사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구단은 앞으로 신인 선수를 선발할 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프로야구에서 불법,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p> <p>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학교 폭력 논란이 있는 김해고 투수 김유성의 1차 지명을 철회했다.</p> <p>NC는 "김유성의 2021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을 철회한다. 해당 선수가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1차 지명 과정에서 해당 선수의 사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구단은 앞으로 신인 선수를 선발할 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프로야구에서 불법,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p> <p>김유성은 김해 내동중 3학년이던 2017년, 야구부 1년 후배를 폭행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돼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2018년 1월</p>		

	<p>창원지방법원은 피해자와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화해는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유성에게 20시간의 심리치료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p> <p>이 사실은 피해자 부모가 지난 11일 NC 구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유성을 지명한 NC는 25일 뒤늦게 “제보 내용을 놓친 부분과 선수 지명 과정에서 과거 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김유성 선수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NC의 대응과 관련한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p> <p>NC는 결국 1차지명권을 쓰지 못하게 됐다. KBO 관계자는 “이미 지명을 마쳤기 때문에 다른 선수를 지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NC는 “김유성의 2021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을 철회한다. 해당 선수가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행사했으며,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학교 폭력의 문제는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배제되는 중대한 사안임</p> <p>- 유명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이 학교폭력 전력 문제로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인권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영향, 결과를 제대로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음</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사흘 만에 '지명철회'...학교폭력에 '철퇴'/MBC뉴스(2020.08.27.)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90002_32524.html NC, 학교폭력 김유성에 지명 철회/조선일보(2020.08.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8/2020082800004.html 프로야구 NC, '학교폭력 논란' 김유성 1차 지명 철회/YTN(2020.08.27.) https://www.ytn.co.kr/_ln/0107_202008271602106807 </p>
타지도 사례	

* 9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일지(전라북도)

제 목	‘ “불쌍하다 너희 엄마는” ... ‘담임이 초등 1학년에 폭언’ 고소		
출 처	전주KBS	기사날짜	2020.09.01
기사주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0301	작 성 자	서윤덕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기사내용	<p>“불쌍하다 너희 엄마는”...‘담임이 초등 1학년에 폭언’ 고소</p> <p>입력 2020.09.01 (22:10) 수정 2020.09.01 (22:11) 뉴스9(전주)</p> <p>□ 0 ♡ 1 <</p> <p>고화질 표준화질 자동재생 OFF 카본드 컨트롤 안내</p>  <p>[앵커]</p> <p>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p> <p>해당 교사는 교육청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하는데요.</p> <p>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p> <p>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p> <p>[리포트]</p> <p>지난 7월, 군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한 학생에게</p> <p>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p> <p>해당 교사는 교육청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하는데요.</p> <p>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p> <p>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p> <p>[리포트]</p> <p>지난 7월, 군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한 학생에게</p>		


	<p>한 말입니다.</p> <p>[담임교사/음성대역 : “우리 반에서 한 명을 없애고 싶다면 그게 OOC (학생 이름)일 거야.”]</p> <p>수업 시간에 다른 짓을 했다는 게 이유인데, 꾸지람은 다음 시간까지 이어집니다.</p> <p>[담임교사/음성대역 : “불쌍하다. 불쌍해. 너희 엄마는 너를 낳고 행복했을텐데 네가 학교에서 이렇게 미움받는지 모르겠지.”]</p> <p>이 같은 발언은 대부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p> <p>해당 학생은 불안 증세 등을 보여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피해 학부모/음성변조 :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고. 1학년이잖아요. 아직은 잘 모르는 1학년.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p> <p>학생의 학부모는 폭언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 담임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p> <p>경찰의 의뢰로 해당 <u>학생을 상담한 전문기관은 교사의 발언을 훈육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같은 반 학생들도 공포심을 느꼈다며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u>했습니다.</p> <p>담임교사는 학교와 교육청 조사에서 학부모가 주장한 것과 비슷한 발언을 몇 차례 했지만 훈육을 위해서였다며, 학대 의도를 부인했습니다.</p> <p>취재진은 해당 교사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학교를 통해 연락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p> <p>경찰은 담임교사를 입건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고소가 경찰에 접수 되었음 - 학생을 상담한 전문기관은 교사의 발언을 훈육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같은 반 학생들도 공포심을 느꼈다며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하고 있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조사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명확한 조사와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및 구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p>‘ “담임이 초등 1학년에게 폭언” 고소…경찰 수사/전주KBS(2020.09.02.)</p> <p>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0770</p>

제 목	‘2020 전북학생 창의미술 릴레이전’ 개막		
출 처	전라일보	기사날짜	2020.09.06
기사주소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374	작 성 자	이병재
인권범위	- 교육에 관한 권리<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복지에 관한 권리<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p>‘2020 전북학생 창의미술 릴레이전’ 개막 이병재 기자 승인 2020.09.06 12만</p> <p>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p> <p>‘2020 전북학생 창의미술 릴레이전’이 오는 5일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개최된다.</p> <p>‘창의미술 체험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창의력과 풍부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내·외 미술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릴레이 전시에는 한국전통문화고·이리북중·서전주중·양현고·백화여고·원광정보예술고·전주한일고·전주서곡중 등 8교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다.</p> <p>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규모 오프라인 전시뿐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전시를 병행해 학생들의 안전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p> <p>가장 먼저 한국전통고는 오는 7일까지 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 오프라인 전시를 갖는다.</p> <p>또 이리북중·서전주중·양현고·백화여고는 오는 10월31일~11월4일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원광정보예술고·전주한일고·전주서곡중은 11월17~23일까지 같은 공간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p> <p>순수미술, 주제가 있는 웹툰, 디자인, 공예, 디자인 패션쇼 등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p> <p>‘2020 전북학생 창의미술 릴레이전’ 이 오는 5일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개최된다.</p> <p>‘창의미술 체험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창의력과 풍부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내·외 미술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릴레이 전시에는 한국전통문화고·이리북중·서전주중·양현고·백화여고·원광정보예술고·전주한일고·전주서곡중 등 8교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다.</p> <p>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규모 오프라인 전시뿐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전시를 병행해 학생들의 안전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p> <p>가장 먼저 한국전통고는 오는 7일까지 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 오프라인</p>		

	<p>전시를 갖는다.</p> <p>또 이북북중·서전주중·양현고·백화여고는 오는 10월31일~11월4일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원광정보예술고·전주한일고·전주서곡중은 11월17~23일까지 같은 공간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순수미술, 주제가 있는 웹툰, 디자인, 공예, 디자인 패션쇼 등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p> <p>이와 함께 온라인 전시는 JBART 홈페이지(http://www.jbart.co.kr)를 통해 운영된다. JBART 홈페이지에서는 전시소개, 전시일정, 학교별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오프라인 전시 오픈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p> <p>도교육청 예술교육 담당 장학사는 “창의미술체험 프로젝트에는 도내 30개 학교가 참여했고, 그중 8개 학교가 이번 릴레이 전시를 희망했다”며 “온라인 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미술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코로나19 대응에 의한 비대면 감상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전북학생 창의미술 릴레이전’ 이 오는 5일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개최함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규모 오프라인 전시뿐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전시를 병행해 학생들의 안전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상황에서 많은 학교 관련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 축소 및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오프라인 전시와 비대면 온라인 전시를 병행하여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 코로나 19로 인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제한 및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2020 전북학생 창의미술 릴레이전’ 5일부터 온·오프라인 개최/전북도민일보(2020.09.06.)</p> <p>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401</p>
타시도 사례	<p>‘제40회 삼성생명 미술대회’ 온택트 방식 개최...10월 18일까지 예선 접수/스포츠조선(2020.09.21.)</p> <p>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009220100194210012756&servicedate=20200921</p> <p>[메트로 컬처]오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접근성 높인다/경인일보(2020.09.19.)</p> <p>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918010004249</p>

제 목	스쿨존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교통안전의식 고취 나선다		
출 처	전민일보	기사날짜	2020.09.08
기사주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198	작 성 자	이재봉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스쿨존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교통안전의식 고취 나선다</p> <p>이재봉 기자 승인 2020.09.08 17:03 댓글 0</p> <p>■ 전북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p>  <p>전북교육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강신성)·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경섭)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p> <p>3개 기관은 8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5층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p> <p>이 협약은 민식이법 시행(20.3.25)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스쿨존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p> <p>주요 협약 내용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학교주변 전력설비 상시 점검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점검 및 홍보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이다.</p> <p>전북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p> <p><u>전북교육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강신성)·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경섭)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u></p> <p>3개 기관은 8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5층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p>		

	<p>이 협약은 민식이법 시행('20.3.25)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스쿨존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p> <p>주요 협약 내용은 <u>△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u>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u>△학교주변 전력설비 상시 점검 및 안전의식 확산</u>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u>△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점검 및 홍보</u>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이다.</p> <p>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진입 및 반대방향 한전전신주에 ‘어린이보호구역(규정속도) 안내 시트’ 를 제작 부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p> <p>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다. 학생안전은 교육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교육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강신성)·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경섭)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함 -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 전북교육청 등 3개 기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망 구축' 협약/연합뉴스(2020.09.08.) - 민식이법 시행 20.3.25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하고 있고 여전히 안전시설 및 안전망이 완전하지 못함 -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이러한 업무협약 확대를 통하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교육청, 교통안전공단·한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전북도민일보(2020.09.08.)</p> <p>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797</p> <p>전북교육청 등 3개 기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망 구축' 협약/연합뉴스(2020.09.08.)</p> <p>https://www.yna.co.kr/view/AKR20200908124800055?input=1195m</p> <p>[전북의 창] 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학교 환경 개선/전주KBS(2020.09.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8983</p>
타시도 사례	<p>세종시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업무협약/충청뉴스(2020.08.14.)</p> <p>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678</p>

제 목	학교밀집도 최소화 2단계 조치 20일까지 연장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09.08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790	작 성 자	이휘빈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학교밀집도 최소화 2단계 조치 20일까지 연장</p> <p>이휘빈 기자 승인 2020.09.08 18:10 댓글 0</p>  <p>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유치원 부분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제외를 추가하고, 조치제외 대상 학교 중 11일 등교를 권고했다.</p> <p>도교육청은 기존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처럼 유·초·중학교에는 등교생 3분의 1, 고등학교에는 3분의 2를 유지하고, 고 3학생은 가급적 등교할 것을 권장했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되, 지역과 여건에 따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p> <p>또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예외 부분에서는 1학급에 유아10명 이하인 유치원을 예외 대상에 추가했다. 이전에는 도내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및 해당 병설 유치원, 농산어촌 소재 학교 등이 대상이었다.</p> <p>또한 조치 제외 대상 학교를 중·현재·등교·원격·병행 운영 학교는 오는 11일 이후 등교수업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등교·원격 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p> <p>전북도교육청이 <u>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간을 20일까지 연장</u>했다. 또한 유치원 부분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제외를 추가하고, 조치제외 대상 학교 중 11일 등교를 권고했다.</p> <p>도교육청은 <u>기존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처럼 유·초·중학교에는 등교생 3분의 1, 고등학교에는 3분의 2를 유지하고, 고 3학생은 가급적 등교할 것을 권장</u>했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되, 지역과 여건에 따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p> <p>또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예외 부분에서는 1학급에 유아10명 이하인 유치원을 예외 대상에 추가했다. 이전에는 도내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및 해당 병설 유치원, 농산어촌 소재 학교 등이 대상이</p>		

	<p>었다.</p> <p>또한 조치 제외 대상 학교들 중 현재 등교·원격 병행 운영 학교는 오는 11일 이후 등교수업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등교·원격 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p> <p>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상담, 교육 소외계층 등을 위해 등교·대면하는 경우도 이전과 같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방과후 교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 한해 그대로 유지하며, 돌봄교실은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이전처럼 운영한다.</p> <p>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상황에 따라 학생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간을 20일까지 연장</p> <p>- 기존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처럼 유·초·중학교에는 등교생 3분의 1, 고등학교에는 3분의 2를 유지하고, 고 3학생은 가급적 등교할 것을 권장 함</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많은 학교에서 밀집도 최소화 조치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 격차 및 학습에의 접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p> <p>- 1학기부터 이어온 코로나 19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울림학교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밀집도와 밀폐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봄</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교육청,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간 20일까지 연장/전주KBS(2020.09.0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4968&ref=A</p> <p>“학교 밀집도·밀폐도 완화 방안 고민해야” /전민일보(2020.09.07.)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107</p> <p>김승환 교육감 “학교 밀집도 완화시키는 방안 강구할 시점” /경향신문(2020.09.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071720001&code=940100</p> <p>학교 밀집도 완화...어울림학교 확대 검토/JTV (2020.09.07.) https://jtv.co.kr/2012/?r=home&c=10/70&cat=JTV+8%EB%89%B4%EC%8A%A4&sort=d_regis+desc%2C+uid&orderby=desc&where=subject%7Ctag&keyword=%ED%95%99%EA%B5%90&uid=2139373</p> <p>원격 수업 장기화..“학습 격차 어찌나”/전주MBC (2020.09.15.) https://www.jmbc.co.kr/news/view/14977</p>
타시도 사례	

제 목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학교 급식에 만족할까		
출 처	새전북신문	기사날짜	2020.09.09
기사주소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3217	작 성 자	최유나 청소년
인권범위	- 복지에 관한 권리<급식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달그락달그락] 청소년, 학교 급식에 만족할까 “반복되는 메뉴 설정은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좋겠다”의견 가장 많아</p> <p>기사 작성: 최유나 청소년 - 2020년 09월 09일 13시54분</p>  <p>/도내 3개교 학교 급식 만족도 설문 결과</p> <p>특별지역 완주, 전주, 고창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 조사를 했다. 식생활이 더욱 중요한 청소년이 급식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와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 개선되어야 할 점을 인터뷰했다.</p> <p>완주, 전주, 고창의 지역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진행 방법은 먼저 학교 급식에 대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중 선택한 후 본인의 의견을 작성했다.</p> <p>■고창 A고등학교</p> <p>제일 먼저 설문조사를 했던 곳은 고창에 있는 A고등학교다.</p> <p>A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우 만족 2명, 만족 2명, 보통 13명, 불만족 12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명의 불만족 학생 중 한명을 인터뷰했다.</p> <p>특 모 학생</p> <p>Q. 급식 만족도에서 불만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p> <p>“일단, 학교 밥이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메뉴가 반복되어서 나와 불만이라고 선택했다”</p> <p>“특별지역 완주, 전주, 고창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 조사”를 했다. 식생활이 더욱 중요한 청소년이 급식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와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 개선되어야 할 점을 인터뷰했다.</p> <p>완주, 전주, 고창의 지역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진행 방법은 먼저 학교 급식에 대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중 선택한 후 본인의 의견을 작성했다.</p> <p>■고창 A고등학교</p> <p>제일 먼저 설문조사를 했던 곳은 고창에 있는 A고등학교다.</p> <p>A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우 만족 2명, 만족 2명, 보통 13명, 불만족 12명이</p>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명의 불만족 학생 중 한명을 인터뷰했다.

홍 모 학생

Q. 급식 만족도에서 불만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학교 밥이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메뉴가 반복되어서 나와 불만이라고 선택했다”

Q. 그렇다면 학교 급식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율 배식 제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많은 양을 먹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복되는 식단보다 다양한 식단을 원한다. 마지막으로 급식판의 반찬 칸을 늘리면 좋겠다”

■전주 B여자고등학교

다음으로 전주에 있는 B여자고등학교다. B여자고등학교의 경우 매우만족 13, 만족 11 보통 5 만족 1명이라는 결과였다. 이번에는 매우 만족 13명 중의 한명의 학생을 인터뷰했다.

김 모 학생

Q. 급식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매일 색다른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해서 좋다. 그리고 양도 많고 맛있어서 매우 만족을 선택했다”

■완주 C고등학교

마지막 학교는 완주에 있는 C고등학교다. 학생들은 매우만족 0명, 만족 5명, 보통 11명, 불만족 1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고등학교 학생들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 이번에는 불만족 13명의 학생 중 한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

학생(익명)

Q. 급식 만족도에서 불만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메뉴의 반복이 너무 심하고, 국이랑 반찬이 대체적으로 싱거워서 불만족을 선택했다”

Q. 그렇다면 학교 급식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국과 반찬의 간을 싱겁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색다른 반찬을 먹고 싶다”

이렇게 전라북도의 고창, 전주, 완주 지역에 있는 특정 3 곳의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전주의 B여자고등학교를 제외한 고창의 A고등학교, 완주의 C고등학교는 불만족의 의견이 많음 동시에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불만적인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가장 많았던 요구사항

	<p>중 첫번째는 ‘반복되는 메뉴 설정은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좋겠다’는 사항과 두번째, ‘맛의 질을 높여달라’는 사항이 대표적이었다.</p> <p>[취재후기]</p> <p>청소년 삶의 기초인 식생활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내 일부 학교 외에도 전체적으로 급식 만족도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개선 사항이 반영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 전주, 고창의 지역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전라북도내 일부 학교 외에도 전체적으로 급식 만족도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개선사항이 반영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급식 메뉴 및 만족도는 현재 온라인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급식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학교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사에 대한 민원 및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벤치마킹하고 메뉴를 다양화 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한다/전민일보(2020.09.16.)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698</p> <p>전북교육청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80명 수상자 발표/뉴시스(2020.09.02.)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2_0001151462&cID=10808&pID=10800</p>
타시도 사례	<p>‘채식할 권리 보장’ 선언한 울산시교육청/울산제일일보(2020.09.23.) http://www.uje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203</p> <p>“학교 랍스터 급식, 손품 발품 좀 팔았죠” /동아일보(2020.09.2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1/103021844/1</p>

제 목	전북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비대면 인문학 콘서트 개최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09.10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9135	작 성 자	신중식
인권범위	- 교육에 관한 권리<정교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복지에 관한 권리<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p>전북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비대면 인문학 콘서트 개최</p> <p>신중식 기자 승인 2020.09.10 17:46 댓글 0</p>  <p>전북교육청은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사람 책, 삶의 무늬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고등학생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한다.</p> <p>올해로 6해째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강연으로 이뤄진다. 12일에는 세계의 분쟁 지역을 누비며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해온 김영미 PD가 ‘세계 분쟁의 현장에 본 평화와 인권’이야기를 들려준다.</p> <p>19일에는 두터운 청소년 독자 팬을 거느리고 있는 아육수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 ‘10대, 장단이 없어도 노래하고 춤추는’을 주제로 우울한 시절을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보듬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들려준다.</p> <p>마지막 강인 26일에는 예선을 통과한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현대인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 인문학적 해석을 내리는 미니 인문학 강연 나눔을 펼친다. 학생 미니 인문학 강연 예선 참가자는 강연 계획서와 샘플 영상(1분 이내)을 9월 11일까지 reise70@jbedu.kr로 제출해야 한다.</p> <p>전북교육청은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사람 책, 삶의 무늬를 그리다’ 라는 주제로 고등학생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하다. 올해로 6해째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강연으로 이뤄진다. 12일에는 세계의 분쟁 지역을 누비며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해온 김영미 PD가</p>		

	<p>‘세계 분쟁의 현장에 본 평화와 인권’ 이야기를 들려준다.</p> <p>19일에는 두터운 청소년 독자 팬을 거느리고 있는 이옥수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 ‘10대, 장단이 없어도 노래하고 춤추는’ 을 주제로 우울한 시절을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보듬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들려준다.</p> <p>마지막 강인 26일에는 예선을 통과한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현대인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 인문학적 해석을 내리는 미니 인문학 강연 나눔을 펼친다. 학생 미니 인문학 강연 예선 참가자는 강연 계획서와 샘플 영상(1분 이내)을 9월 11일까지 reise70@jbedu.kr로 제출해야 한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전북교육청은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사람책, 삶의 무늬를 그리다’ 라는 주제로 고등학생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인문학 콘서트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임</p> <p>-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홍보와 상품을 통하여 학생들의 참여가 유도되어야 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도교육청, 고교생 랜선 인문학 콘서트 개최/위키�트리(2020.09.10.)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70776</p>
타시도 사례	<p>다시 닫힌 도서관에도 비대면 독서 서비스는 계속/뉴제주일보 (2020.09.09.)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796</p>

제 목	전북교육청, 안전한 학교환경 제공 앞장선다		
출 처	전민일보	기사날짜	2020.09.15
기사주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92	작 성 자	이재봉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전북교육청, 안전한 학교환경 제공 앞장선다</p> <p>이재봉 기자 승인 2020.09.15 17:15 댓글 0</p> <p>16일부터 '2020.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추진</p>  <p>전북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p> <p>15일 도교육청은 '2020.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p> <p>이는 학교 안전사고의 잠재적 요인을 분석·점검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p> <p>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15교에서 원스톱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초등학교 6교·중학교 6교·고등학교 8교 등 총 20교에서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p> <p>이를 위해 지난 2~4월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청구 자료를 기초로 학교안전사고 유형별 분석을 마친 상태다.</p> <p>전북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p> <p>15일 <u>도교육청은 '2020.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u></p> <p>이는 <u>학교 안전사고의 잠재적 요인을 분석·점검함으로써 학교 안전사</u></p>		

	<p>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p> <p>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15교에서 원스톱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초등학교 6교 · 중학교 6교 · 고등학교 8교 등 총 20교에서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p> <p>이를 위해 지난 2~4월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청구 자료를 기초로 학교 안전사고 유형별 분석을 마친 상태다.</p> <p>외부전문가와 교육청 합동으로 안전교육, 시설, 교통, 실험실습실, 환경(유해물질), 기타 안전포인트 · 안전시설 등 학교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한 뒤 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p> <p>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교육 교육과정 편성 현황, 건축 · 전기 · 소방 등 각종 설비의 관리방법 설명과 정상작동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과학실의 위험물질 약품 관리 등이다.</p> <p>도교육청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16일부터 10월 중순까지 개별 학교로 찾아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안전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안전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를 직접 방문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교육청은 ‘2020.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 - 학교 안전사고의 잠재적 요인을 분석 · 점검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 함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를 토대로 하여 개별 학교로 찾아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항임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교육청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추진/전북도민일보 (2020.09.15.)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9670</p> <p>전북교육청,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만전...20개 학교 점검/뉴스1 (2020.09.15.) https://www.news1.kr/articles/?4058918</p>
타시도 사례	<p>울산교육청, 2021년부터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 도입/세계일보 (2020.09.23.)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22514018</p>

제 목	유초중고 등교인원 제한 내달 11일까지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09.15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907	작 성 자	이휘빈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유초중고 등교인원 제한 내달 11일까지</p> <p>스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9.15 18:49 댓글 0</p> <p>유초중 3분의 1, 고교 3분의 2, 밀집도 최소화 유지 고3 등교·원격수업 병행... 쌍방향 조·종례도 운영</p>  <p>전북도민일보 DB</p> <p>유초·중학교 등교인원 3분의 1, 고교 등교인원 3분의 2 제한 조치가 내달 11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고3도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p> <p>교육부는 지난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익산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을 이와 같이 협의했다고 15일 밝혔다.</p> <p>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주간(14~27일) 2단계로 완화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21일부터 등교를 가능하도록 결정했다.</p> <p>당초 20일까지 2단계 조치가 적용됐던 비수도권의 경우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칠 경우,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최대 인원은 3분의 2까지 가능하다. 특수학교,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들이 등교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p> <p>이 원칙은 주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에 적용한다. 이후 등교 기간 연장 여부·교내 밀집도 제한 등은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다.</p> <p>유초중 3분의 1, 고교 3분의 2, 밀집도 최소화 유지 고3 등교·원격수업 병행... 쌍방향 조·종례도 운영</p> <p>유·초·중학교 등교인원 3분의 1, 고교 등교인원 3분의 2 제한 조치가 내달 11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고3도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p> <p>교육부는 지난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익산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을 이와 같이 협의했다고 15일 밝혔다.</p> <p>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주간(14~27일) 2단계로 완화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21일부터 등교를 가능하도록 결정했다.</p> <p>당초 20일까지 2단계 조치가 적용됐던 비수도권의 경우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칠 경우,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최대 인원은 3분의 2까지 가능하다. 특수학교,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들이 등교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p>		

	<p>이 원칙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에 적용한다. 이후 등교 기간 연장 여부·교내 밀집도 제한 등은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다.</p> <p>이어 교육부와 협의회는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를 위해 원격 수업 기간 동안 교사가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원격 수업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거나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채팅을 활용한 피드백 수업을 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원격수업이 일주일 내내 지속할 경우,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 및 개별 SNS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해야 한다. 아울러 원격수업 기간에도 1차시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간 수업 시간을 지켜달라고 일선 학교에 당부할 예정이다.</p> <p>교육부는 원격 수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교실 내 무선인터넷(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하고 노후 기자재 약 20만대를 신속히 교체하기로 했다.</p> <p>또한 교육부는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등교 수업 이후 수석 교사, 예비교사, 기간제 교원 등 가용 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지도를 하고, 기초학력 집중 지원 담당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과 협의한다. 또한 학교 방역 지원 인력을 1학기 수준인 약 4만명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에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면 10월 12일 이후 안정적으로 등교 수업 날짜를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중학교 등교인원 3분의 1, 고교 등교인원 3분의 2 제한 조치가 10월 11일까지 이어짐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육부의 일괄적인 등교제한 조치로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등교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등교제한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한 환경조성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교육청, ‘학교 밀집도 최소화’ 다음 달 11일까지 연(KBS(2020.09.1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6069&ref=A)</p> <p>전북교육청,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총력 나선다/전민일(2020.09.18)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846</p>
타시도 사례	<p>수도권 학교, 21일부터 등교수업 재개/문화일보(2020.09.1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15MW142843523125</p>

제 목	2020 학생 정책제안 선정 결과 발표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09.22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0727	작 성 자	신중식
인권범위	- 자치와 참여의 권리<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2020 학생 정책제안 선정 결과 발표

신중식 기자 | 승인 2020.09.22 17:51 | 댓글 0



전북교육청이 2020 학생 정책제안 '정책을 부탁해!' 제안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제안 사업은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참여로 11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우수 정책 제안 학생 10명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김강서 학생의 '선생님과 함께 하는 1대1 학습', 김시현 학생의 '준비물 대여소 운영', 김채원 학생의 '청소년 청원 홈페이지', 이지연 학생의 '학교 독서실을 만들어주세요', 이지원 학생의 '전북 학생 소식 발간', 임상훈 학생의 '달맞이교육정책', 정민영 학생의 '전북 꿈사다리 진로진학상담 밴드 활성화', 조은일 학생의 '행동으로 배우는 환경교육', 조정빈 학생의 '야 학교 너무 흥분기입장 쓸 수 있어', 지세인 학생의 '계단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설치' 등이다.

도교육청은 26일 오후 2시 도교육청 1층 징검다리에서 우수 정책을 제안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상 및 차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학생들과 제안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반영 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이 **2020 학생 정책제안 ‘정책을 부탁해!’ 제안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제안 사업은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참여로 11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우수 정책 제안 학생 10명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김강서 학생의 ‘선생님과 함께 하는 1대1 학습’, 김시현 학생의 ‘준비물 대여소 운영’, 김채원 학생의 ‘청소년 청원 홈페이지’, 이지연 학생의 ‘학교 독서실을 만들어주세요’, 이지원 학생의

	<p>‘전북 학생 소식 발간’, 임상훈 학생의 ‘달맞이교육정책’, 정민영 학생의 ‘전북 꿈사다리 진로진학상담 밴드 활성화’, 조은열 학생의 ‘행동으로 배우는 환경교육’, 조정빈 학생의 ‘야 학교 너무 용돈기입장 쓸 수 있어’, 지세인 학생의 ‘계단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설치’ 등이다.</p> <p>도교육청은 26일 오후 2시 도교육청 1층 징검다리에서 우수 정책을 제안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상 및 차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학생들과 제안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반영 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전북교육청이 2020 학생 정책제안 ‘정책을 부탁해!’ 제안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음</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또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어야 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학생들 목소리, 정책에 반영합니다./위키�트리(2020.09.28.)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76625</p> <p>도교육청, 학생 정책제안발굴 ‘정책을 부탁해’ 심사 10명 선정/전북중앙(2020.09.22.)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9271</p> <p>학교생활 도움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많았다/전민일보(2020.09.22.)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65</p> <p>도내 학생들 교육정책을 말하다/전북중앙(2020.09.28.)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9731</p> <p>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정책제안 ‘정책을 부탁해!’ 간담회/전라일보(2020.09.28.)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203</p>
타시도 사례	

* 9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일지(타시도)

제 목	라면 끓여먹으려다 불난 초등생 형제...이들째 의식 없어		
출 처	한겨레	기사날짜	2020.09.16
기사주소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62479.html	작 성 자	이정하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라면 끓여먹으려다 불난 초등생 형제...이들째 의식 없어

출처: 2020-09-16 20:53 수경 (2)

코로나19에 등교 없이 집에서 지내 생가려다 불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동생동 119신고로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형제끼리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 부모를 찾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불어머나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사고 발생 이들이 지나고도 의식을 찾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6일 인천 미추홀소방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전 11시10분께 미추홀구 빌라에서 ㄱ(10)군과 동생 ㄴ(8)군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났다. 이들 형제와 119신고로 불은 10여분 만에 꺼졌지만, ㄱ군은 전신 40%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다. ㄴ군은 5%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 등을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형제가 신고 당시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못한 채 “살려주세요”만 반복하다가 전화가 끊겨 구조가 늦어졌다.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장소를 찾아 이들을 구조했다.

이들 형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이어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형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었지만, 이들은 돌봄을 따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족은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지냈고 어머니 홀로 두 자녀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매달 수급비, 자활 근로비, 주거 지원비 등 160만여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p>이들 가족의 소식이 알려지자 미추홀구는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 300만원을 의료비로 지급하고, 형제가 입원한 병원 사회사업실이 나머지 치료비를 후원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자택 거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집을 수리하는 기간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준다는 방침이다. 260만원가량의 주택 보증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원한다.</p> <p>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날 인천 에스오에스(SOS)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및 간병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지원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이들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만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적극적으로 돌봄교실 이용을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p> <p>한편,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병을 앓아온 어머니로부터 이들 형제를 격리해달라는 내용의 보호명령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형제에 대한 지정 기탁 문의는 사단법인 학산나눔재단(032-230-1420)으로 하면 된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고도 의식을 찾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상황에서 돌봄 사각지대 있던 초등생 형제가 화재로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전라북도에서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현황 및 조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인천 빌라 초등생 형제 참변…엄마 나간새 라면 끓이려다 불/중앙일보(2020.09.16.) https://news.joins.com/article/23873679</p> <p>엄마 없이 라면 끓이던 10살·8살 형제, 화상 입고 이틀째 의식 불명/조선일보(2020.09.16.)</p> <p>https://www.chosun.com/national/2020/09/16/Y26B6GHW6ZA5ZCSJ22GKYZ26CU</p> <p>‘라면 형제 화재’ … ‘아동 돌봄’ 대책 추진/KBS(2020.09.23.)</p> <p>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1457&ref=A</p> <p>[복국장의 한 컷 정치] ‘라면 형제’ 비극 막아라…정부, 돌봄 사각지대 조사/JTBC(2020.09.23.)</p> <p>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0968</p> <p>아동 학대 지자체가 직접 조사… ‘전담 공무원제’ 도입/전주KBS(2020.09.2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0518</p>
타시도 사례	

제 목	과학고는 매일 등교, 일반고는 온·오프 병행...교육격차 더 벌린 '학급당 학생 수'		
출 처	경향신문	기사날짜	2020.09.27
기사주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72042015&code=940401	작 성 자	이성희
인권범위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과학고는 매일 등교, 일반고는 온·오프 병행...교육격차 더 벌린 '학급당 학생 수'</p> <p>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2020-09-27 20:42 입력 2020-09-27 20:49 수정</p> <p>「평균 16명 과학고, 일반고는 24명 넘어 '거리 두기' 적용 달리OECD도 등교 주요 변수 지목...」정부, 개선방안 수립해야</p> <p>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 변수로 학급당 학생 수를 꼽았다. 국내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4명인 일반고등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한 반면 학급당 평균 16명인 과학고는 상당수가 지난 1학기에 전 학년 등교수업을 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27일 교육계에 따르면 OECD는 이달 초 발표한 '교육지표 2020'에서 OECD 회원국의 학급당 학생 수 현황을 소개하며 '학급 규모,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 변수'라는 글을 수록했다.</p> <p>OECD는 코로나19에 따른 전면 휴교 후 등교수업 재개 결정 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요인으로 "감염병 단계와 확산 정도 및 2차 대유행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엇보다 거리 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1~2m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의 대응방안을 예로 들며 "당초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국가들은 거리 두기 조치를 쉽게 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현재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는 26.7명으로 평균(21.1명, 23.3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조사가 이뤄진 30개국 가운데 24위에 올라 있다.</p> <p>다만 국내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에 따라 등교수업 재개 여부가 엇갈렸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고등학교 유형별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과학고가 16.4명이었던 데 반해 일반고는 24.2명으로 1.5배 많았다. 이에 따라 전국 과학고 28곳(영재고 포함) 중 18곳에서는 지난 1학기 등교수업 재개 이후 전 학년의 매일 등교가 이뤄졌다.</p> <p>광주에서는 초등학교 확진으로 인근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을 때도 과학고는 등교수업을 했다. 광주는 과학고(15.9명)와 일반고(26.4명)의 학급당 학생 수 격차가 1.7배로, 전국 17개 시도별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다.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가 열악한 지역은 제주(28.4명), 광주(26.4명), 충남(25.7명) 등이다.</p> <p>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 변수로 학급당 학생 수를 꼽았다. 국내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4명인 일반고등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한 반면 학급당 평균 16명인 과학고는 상당수가 지난 1학기에 전 학년 등교수업을 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27일 교육계에 따르면 OECD는 이달 초 발표한 '교육지표 2020'에서 OECD 회원국의 학급당 학생 수 현황을 소개하며 '학급 규모,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 변수'라는 글을 수록했다.</p> <p>OECD는 코로나19에 따른 전면 휴교 후 등교수업 재개 결정 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요인으로 "감염병 단계와 확산 정도 및 2차 대유행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엇보다 거리 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1~2m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의 대응방안을 예로 들며 "당초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국가들은 거리 두기 조치를 쉽게 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현재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는 26.7명으로 평균(21.1명, 23.3명)에 못</p>		

	<p>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조사가 이뤄진 30개국 가운데 24위에 올라 있다.</p> <p>다만 국내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에 따라 등교수업 재개 여부가 엇갈렸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고등학교 유형별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과학고가 16.4명이었던 데 반해 일반고는 24.2명으로 1.5배 많았다. 이에 따라 전국 과학고 28곳(영재고 포함) 중 18곳에서는 지난 1학기 등교수업 재개 이후 전 학년의 매일 등교가 이뤄졌다.</p> <p>광주에서는 초등학생 확진으로 인근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을 때도 과학고는 등교수업을 했다. 광주는 과학고(15.9명)와 일반고(26.4명)의 학급당 학생 수 격차가 1.7배로, 전국 17개 시·도별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다.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가 열악한 지역은 제주(28.4명), 광주(26.4명), 충남(25.7명) 등이다.</p> <p>이은주 의원은 “OECD 교육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환경 개선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방역, 등교수업, 교육격차 해소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교육당국은 학급당 학생 수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 변수로 학급당 학생 수가 문제됨. 국내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4명인 일반고등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한 반면 학급당 평균 16명인 과학고는 상당수가 지난 1학기에 전 학년 등교수업을 진행함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로 교육환경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음 - 학급당 학생수 조정이나 소규모 학교에서의 병행수업 등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고민이 진행되어야함. 이러한 관점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주장하는 학교 밀집도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 확대가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코로나 장기화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줄여야' 주장 이어져/연합뉴스 (2020.09.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5137600530?input=1195m</p> <p>교사 79%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 확대“…학부모 절반 “불만족”/인천일보 (2020.09.2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9015</p> <p>OECD “코로나 국면, 등교수업 주요 변수는 학급당 학생수” /한겨레 (2020.09.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3758.html</p> <p>“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커지는 목소리…법제화 움직임도/한겨레 (2020.09.24.)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3484.html</p>
타시도 사례	




제 목	태블릿 열자 ‘지인 능욕’ 사진 등 수천장이… 대구 고등학생 체포		
출 처	조선일보	기사날짜	2020.09.25
기사주소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0/09/25/VJTZAGJRPBCEZFC7BDNZGHGC44/	작 성 자	이승규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정보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태블릿 열자 ‘지인 능욕’ 사진 등 수천장이… 대구 고등학생 체포</p> <p>친구 등 사진 음란물과 합성... 불법 촬영도 피해 학생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p> <p>이승규 기자 입력 2020.09.25 09:42</p> <p>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주변 지인들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속칭 ‘지인 능욕물’ 등 사진 수천여장을 보관하다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p>  <p>일러스트=정다운</p> <p>경찰은 25일 고등학생 A군을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태블릿 PC 등에 학교 친구 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보유하거나 이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A군의 비밀은 피해 학생으로 인해 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우연히 A군의 태블릿 PC에서 합성 사진을 발견한 뒤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군은 능욕물과 불법 촬영 사진, 일반 사진을 포함해</p> <p>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주변 지인들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속칭 ‘지인 능욕물’ 등 사진 수천여장을 보관하다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p> <p>경찰은 25일 고등학생 A군을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태블릿 PC 등에 학교 친구 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보유하거나 이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p>		

	<p>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A군의 비밀은 피해 학생으로 인해 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우연히 A군의 태블릿 PC에서 합성 사진을 발견한 뒤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군은 능욕물과 불법 촬영 사진, 일반 사진을 포함해 수천여장에 달하는 주변 지인들의 사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경찰은 A군의 태블릿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피해자 규모를 확인 중이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군의 사진 유포 및 공범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p> <p>대구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에게 대면 심리상담치료를 받게 했고, 가해 학생 A군은 가정에서 학습을 받도록 조치했다.</p> <p>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접수한 상황이며 경찰 조사 결과를 참고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주변 지인들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속칭 ‘지인 능욕물’ 등 사진 수천여장을 보관하다 발각됨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욕물과 불법촬영사진 등은 그 행위 및 보관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 및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p>고3 태블릿PC서 ‘지인능욕’ 사진 수천장이 쏟아졌다/국민일보(2020.09.2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46175&code=61122020&cp=nv</p>

* 10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일지(전라북도)

제 목	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체육활동 가이드라인		
출 처	전북중앙	기사날짜	2020.10.04
기사주소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9814	작 성 자	정병창
인권범위	<p>-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p> <p>-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대한 권리></p>		
기사내용	<p>학생발달단계-체력 고려 활동 실내마스크착용-환기등 담아</p> <p>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한 학교체육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급학교에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p> <p>이에 따르면 모든 신체활동은 학생의 발달단계, 개인별 체력수준 등을 고려해 저강도 활동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강도를 조절하고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한 후 창문 상시 개방으로 충분한 환기를 유지해 활동해야 한다.</p> <p>또한 운동장 등 실외에서는 1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 마스크를 벗고 활동 할 수 있으며, 체육활동 전·후 30초 이상 손 씻기와 손소독제를 사용해 건강 안전을 도모한다.</p> <p>자세한 체육수업 관련 활동 동영상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인성건강과 업무마당’ 체육교육에 탑재돼 있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비대면 교육상황에서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워 체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p> <p>학교체육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활기차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면역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학생 1인 1스포츠 활성화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생활화로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p> <p>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한 학교체육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급학교에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p> <p>이에 따르면 모든 신체활동은 학생의 발달단계, 개인별 체력수준 등을 고려해 저강도 활동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강도를 조절하고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한 후 창문 상시 개방으로 충분한 환기를 유지해 활동해야 한다.</p> <p>또한 운동장 등 실외에서는 1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 마스크를 벗고 활동 할 수 있으며, 체육활동 전·후 30초 이상 손 씻기와 손소독제를 사용해 건강 안전을 도모한다.</p> <p>자세한 체육수업 관련 활동 동영상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인성건강</p>		

	<p>과 업무마당’ 체육교육에 탑재돼 있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비대면 교육상황에서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워 체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p> <p>학교체육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활기차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면역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학생 1인 1스포츠 활성화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생활화로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p> <p>한편, 전북대사대부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지난 9월 21~28일까지 ‘온라인 체육한마당’을 운영한 바 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한 학교체육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함 - 학교체육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활기차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면역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것임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장기화,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체력과 신체활동이 감소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가이드라인과 세부내용을 안내하여 면역력 증진과 건강 증진을 위해 바람직함 -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과 학교별 편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교육청 코로나19 극복 안전한 학교체육활동 안내/전북도민일보 (2020.10.04.)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1821</p>
타시도 사례	<p>“즐거운 학교스포츠로 코로나 극복해요” /경북매일(2020.10.25.)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59283</p>

제 목	최근 3년간 전북 성비위 징계 교원 30여 명		
출 처	전북일보	기사날짜	2020.10.05
기사주소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975	작 성 자	백세종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기사내용	<p>최근 3년간 전북 성비위 징계 교원 30여 명</p> <p>  백세종  승인 2020.10.05 20:10  댓글 0 </p> <div> 【교육】 전체기사 교육일반 초중고 대학 </div> <p>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 자료 지난해에는 전년도 비해 2배 증가</p> <p>전북지역에서 성비위를 저질렀다 징계를 받은 교원이 지난 3년새 30여 명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성매매와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p> <p>연도별로는 2017년 8명, 2018년 7명, 지난해 14명이며, 올해 6월까지 2명이었다.</p> <p>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총 633명이었으며, 연도 별로는 2017년 170명, 2018년 163명, 2019년 233명, 올해 67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p> <p>지역별로는 서울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8명, 광주 45명, 대구와 충남이 34명, 부산 32명, 전북 31명, 경남 29명, 경북 28명, 충북, 전남 26명, 인천 23명, 강원 19명, 울산 17명, 대전 15명, 세종과 제주 8명의 순이었다.</p> <p>전국 평균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 비율이 더 높았다.</p> <p>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인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이 24건, 교사가 562건, 교장이 43건, 교육전문직이 4건이었다.</p> <p>전북지역에서 성비위를 저질렀다 징계를 받은 교원이 지난 3년새 30여 명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성매매와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p>		

	<p>연도별로는 2017년 8명, 2018년 7명, 지난해 14명이며, 올해 6월까지의 2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총 633명이었으며, 연도 별로는 2017년 170명, 2018년 163명, 2019년 233명, 올해 67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8명, 광주 45명, 대구와 충남이 34명, 부산 32명, 전북 31명, 경남 29명, 경북 28명, 충북, 전남 26명, 인천 23명, 강원19명, 울산 17명, 대전 15명, 세종과 제주 8명의 순이었다. 전국 평균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수가 적은 사립학교 비율이 더 높았다.</p> <p>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이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이 24건, 교사가 562건, 교장이 43건, 교육전문직이 4건이었다.</p> <p>박 의원은 이 가운데 징계수위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633건 중 173건(27.3%)이나 됐으며, 성매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p> <p>박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지역에서 성비위를 저질렀다 징계를 받은 교원이 지난 3년새 30여 명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증가함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에서 성비위 징계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신속한 조사와 처분에 따른 것임 - 다수가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성비위 교사 두명 중 1명 꼴 복귀, 방지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시급/전북도민일보(2020.10.21.)</p> <p>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136</p> <p>지난 3년간 전북 교원 성 비위로 31명 징계받아/전주KBS(2020.10.06.)</p> <p>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8648</p>
타시도 사례	<p>3년 새 부산 교원 21명 성비위로 직위해제/부산KBS(2020.10.17.)</p> <p>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7784&ref=A</p>

제 목	전북도내 학생 상담지원 '위 클래스' 설치율 전국 꼴찌		
출 처	전라일보	기사날짜	2020.10.05
기사주소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428	작 성 자	정해은
인권범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정보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전북도내 학생 상담지원 '위 클래스' 설치율 전국 꼴찌</p> <p>764곳 중 240곳 설치율 31.4% 전국 평균 65% 절반 수준 불과</p> <p>정해은 기자 승인 2020.10.05 5면</p> <p>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p> <p>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상담을 지원하는 도내 위(Wee) 클래스 설치율이 31.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p> <p>5일 국회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위(Wee) 클래스 설치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위 클래스 설치율은 65.6%으로 파악됐다. 대상 학교 1만1671곳 중 7653곳에 해당하는 수치다.</p> <p>전북의 위 클래스 설치율은 764개 대상 학교 중 240곳(31.4%)에 불과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421곳 중 55곳만 설치돼 그 비율이 13.1%에 그쳤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설치율도 각각 50.5%와 59.5%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p> <p>지역별 위(Wee) 클래스 설치현황을 보면 전북에 이어 전남 50.8%, 충북 52.8%, 경남도 53.9% 순이었다.</p> <p>위(Wee) 클래스는 학교폭력 및 자살·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위기학생과 학업중단, 따돌림,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부적응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심리검사·외부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p> <p>2015년부터 2018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개최 건수는 11만210건에 달한다.</p> <p>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상담을 지원하는 도내 위(Wee) 클래스 설치율이 31.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p> <p>5일 국회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위(Wee) 클래스 설치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위 클래스 설치율은 65.6%으로 파악됐다. 대상 학교 1만1671곳 중 7653곳에 해당하는 수치다.</p> <p>전북의 위 클래스 설치율은 764개 대상 학교 중 240곳(31.4%)에 불과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421곳 중 55곳만 설치돼 그 비율이 13.1%에 그쳤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설치율도 각각 50.5%와 59.5%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p> <p>지역별 위(Wee) 클래스 설치현황을 보면 전북에 이어 전남 50.8%, 충북 52.8%, 경남도 53.9% 순이었다.</p> <p>위(Wee) 클래스는 학교폭력 및 자살·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위기학생과 학업중단, 따돌림,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부적응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심리검사·외부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p>		

	<p>다.</p> <p>2015년부터 2018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개최 건수는 11만210건에 달한다.</p> <p>연도별로도 2015년 2만828건에서 2018년 3만316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p> <p>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월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살(해) 예방 계획’을 마련하고 위기학생 관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 성장지원 내실화 △자살(시도)사안 위기개입 역량 강화 △자살시도 및 자해 등 위기학생 지원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운영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위(Wee) 클래스는 전교생이 6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전북도 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많아 교육부의 관련 예산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설치율이 저조했다”고 말했다.</p> <p>김병욱 의원은 “위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의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 모든 학교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부적응 학생들을 적극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상담을 지원하는 도내 위(Wee) 클래스 설치율이 31.4%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 전북의 위 클래스 설치율은 764개 대상 학교 중 240곳(31.4%)에 불과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421곳 중 55곳만 설치돼 그 비율이 13.1%에 그쳤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설치율도 각각 50.5%와 59.5%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Wee) 클래스는 학교폭력 및 자살·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위기 학생과 학업중단, 따돌림,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부적응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심리검사·외부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확대 설치가 필요함 - 전라북도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설치율을 다시 한번 공표할 필요가 있음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위 클래스’ 설치 확대 인식해선 안 된다/전라일보(2020.10.15.)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839</p> <p>전북 초중고 위클래스 설치율 31.4%…전국 꼴찌/전주KBS(2020.10.0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2200</p>
타시도 사례	

제 목	지난해 전북지역 학생 46명당 1건 꼴 안전사고 발생		
출 처	전라일보	기사날짜	2020.10.06
기사주소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428	작 성 자	정 해 은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지난해 전북지역 학생 46명당 1건 꼴 안전사고 발생 <small>정해은 기자 승인 2020.10.06 2면</small></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 + - □ ▢ 인쇄하기 </div> <p>전북 도내 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46명당 평균 1건 가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6일 국회 김철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총 1만5329건으로 조사됐다.</p> <p>연도별로는 2017년 4791건, 2018년 5107건, 2019년 5431건으로 집계됐다.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70만 9042명으로 평균 학생 46명 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p> <p>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총 37만5489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수는 총 613만6793명으로 평균 학생 45명 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p> <p>지역별로는 제주와 세종이 34명 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p> <p>발생 시간별로는 체육수업이 11만6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7만5982건 ▷수업시간 5만8334건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5만5947건 ▷학교행사 2만7183건 ▷등·하교 1만9155건 ▷특별활동 1만8166건 ▷석식시간 2700건 ▷기숙사 생활 1712건 순으로 나타났다.</p> <p>전북 도내 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46명당 평균 1건 가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6일 국회 김철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총 1만5329건으로 조사됐다.</p> <p>연도별로는 2017년 4791건, 2018년 5107건, 2019년 5431건으로 집계됐다.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70만 9042명으로 평균 학생 46명</p>		


	<p>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p> <p>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총 37만5489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수는 총 613만6793명으로 평균 학생 45명 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p> <p>지역별로는 제주와 세종이 34명 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p> <p>발생 시간별로는 체육수업이 11만6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7만5982건 ▷수업시간 5만8334건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5만5947건 ▷학교행사 2만7183건 ▷등·하교 1만9155건 ▷특별활동 1만8166건 ▷석식시간 2700건 ▷기숙사 생활 1712건 순으로 나타났다.</p> <p>또 장소별로는 ▷운동장 13만8542건 ▷부속시설 9만7394건 ▷교실 6만6171건 ▷통로 5만6611건 등으로 집계됐다.</p> <p>김철민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 전북 도내 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46명당 평균 1건 가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전북교육청에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을 계속해서 시행할 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전북교육청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추진/전북도민일보 (2020.09.15.)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9670
타시도 사례	제주 학교 안전사고 빈번...34명당 1건 발생/제주일보(2020.10.07.)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2880 충북도내 학교안전사고 꾸준한 증가세/충북일보(2020.10.06.)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39220

제 목	혁신교육 10년 되짚어 보고 미래 혁신교육 방향 모색한다		
출 처	전라일보	기사날짜	2020.10.07
기사주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790	작 성 자	정재봉
인권범위	- 자치와 참여의 권리<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p>혁신교육 10년 되짚어 보고 미래 혁신교육 방향 모색한다</p> <p>△ 이재종 기자 ▷ 승인 2020.10.07 16:49 ⇄ 댓글 0</p> <p>■ 전북교육청, 19~23일 전북혁신교육 한마당 개최</p>  <p>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북혁신교육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한마당 행사를 준비했다.</p> <p>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혁신교육 10년, 그 너머를 주제로 한 ‘2020 전북혁신교육 한마당’이 오는 19~23일까지 펼쳐진다.</p> <p>이번 행사는 전북혁신교육의 경험을 성찰하고, 실천·공유하는 자리이자 미래 혁신교육 발전 방향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p> <p>△연대와 협력 △어울림과 화합 △지속과 도약 △모두의 참여 △기록과 역사를 큰 틀로 해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p> <p>먼저 19일에는 여는 마당으로 꾸며진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해 전북혁신교육에 대해 말하는 ‘공감토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주요 패널들이 참여해 전북혁신교육을 전망하는 ‘패널토의’가 마련돼 있다.</p> <p>20일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주제로 한 강연과 토의가, 21일에는 ‘혁신학교 역사기록물과 공간혁신’을 주제로 혁신학교 역사기록물을 살펴보고, 전북공간혁신 학교 사례 등을 공유한다.</p> <p>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북혁신교육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한마당 행사를 준비했다.</p> <p>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혁신교육 10년, 그 너머를 주제로 한 ‘2020 전북혁신교육 한마당’이 오는 19~23일까지 펼쳐진다.</p> <p>이번 행사는 전북혁신교육의 경험을 성찰하고, 실천·공유하는 자리이자 미래 혁신교육 발전 방향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p> <p>△연대와 협력 △어울림과 화합 △지속과 도약 △모두의 참여 △기록과 역사를 큰 틀로 해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p> <p>먼저 19일에는 여는 마당으로 꾸며진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해 전북혁신교육에 대해 말하는 ‘공감토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주요 패널들이 참여해 전북혁신교육을 전망하는 ‘패널토의’가 마련돼 있다.</p> <p>20일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주제로 한 강연과 토의가, 21일에는 ‘혁신학교 역사기록물과 공간혁신’을 주제로 혁신학교 역사기록물을 살펴보고, 전북공간혁신 학교 사례 등을 공유한다.</p>		

	<p>특히 혁신학교 역사기록물은 대리초 외 18교의 혁신학교 이야기를 단행본으로 출판하며, 남원초 외 10교의 영상을 상영한다.</p> <p>이어 22일에는 ‘연대와 협력’을 주제로 주중일 회현초 교장이 주제 강연을 진행하고, 혁신학교 교사·졸업생·학부모·직원 등이 차례로 혁신학교에서 경험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소개할 예정이다.</p> <p>마지막으로 23일에는 ‘지역공동체 포럼’이 전주 그랜드힐스톤에서 열린다. 풀뿌리지역교육연구회 대표를 맡고있는 추창훈 소양중 교감이 ‘교육의 미래,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맡는다.</p> <p>여기에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지역교사공동체, 전북교육협력지구, 청소년자치, 마을교육생태계 등을 대표하는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는다.</p> <p>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현장 참여는 최소화하고 모든 행사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p> <p>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도민은 유튜브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을 검색하여 구독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다.</p> <p>도교육청 혁신교육 담당 장학사는 “지난 10년간 전북혁신학교는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교자치를 확대하는 등 공교육 혁신의 모델로 성장해왔다”면서 “혁신교육을 전북지역 모든 학교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북혁신교육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한마당 행사를 준비함 - 전북혁신교육의 경험을 성찰하고, 실천·공유하는 자리이자 미래 혁신교육 발전 방향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임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혁신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살피보는 자리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교육청 ‘2020 전북혁신교육 한마당’ 19~23일 개최/전북도민일보 (2020.10.07.)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351</p> <p>전북혁신교육 10년 발자취 조명/전북중앙(2020.10.07.)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131</p> <p>전북교육청, ‘혁신교육’ 10년 되짚어본다/전주일보(2020.10.07.) http://www.j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45</p> <p>전북 혁신교육 10년, 교육 성과와 과제는?/전주KBS(2020.10.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8059&ref=A</p> <p>혁신학교 10년, 성과와 과제는?/전주MBC(2020.10.25.) https://www.jmbc.co.kr/news/view/15110</p>
타시도 사례	

제 목	익산 초등학교 1명 행방 묘연, 경찰 소재 파악 중		
출 처	전북일보	기사날짜	2020.10.07
기사주소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209	작 성 자	엄승현
인권법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h2>익산 초등학교 1명 행방 묘연, 경찰 소재 파악 중</h2> <p> 엄승현  승인 2020.10.07 20:34  댓글 0</p>		
	<div>[사회] 전체기사 사회일반 경찰 사건 · 사고 보건 · 의료 법원 · 검찰 환경 날씨</div>		
	<p>지난 6월부터 학교 수업 참여 안 해 경찰, 최근 수도권서 모습 포착소재 파악 주력</p>		
	<p>익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명이 학교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p> <p>7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익산에 거주하는 A군(8)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p> <p>A군은 올 초 온라인 개강에 맞춰 온라인 수업에 수차례 참여했지만 2학기부터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행방을 감췄다.</p> <p>경찰은 A군과 그의 어머니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수도권에서 포착되면서 강력범죄 연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p> <p>또 당초 A군의 외할아버지가 이들에 대한 가출 신고를 한 것을 비춰 단순 가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행방을 찾고 있다.</p> <p>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소재 불명 초등학교 4명(전북 1명·충남 2명·부산 1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p>		
	<p>익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명이 학교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p> <p>7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익산에 거주하는 A군(8)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p> <p>A군은 올 초 온라인 개강에 맞춰 온라인 수업에 수차례 참여했지만 2학기부터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행방을 감췄다.</p> <p>경찰은 A군과 그의 어머니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수도권에서 포착</p>		

	<p>되면서 강력범죄 연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p> <p>또 당초 A군의 외할아버지가 이들에 대한 가출 신고를 한 것을 비춰 단순 가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행방을 찾고 있다.</p> <p>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소재 불명 초등학생 4명(전북 1명·충남 2명·부산 1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명이 학교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상황 및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향 수업 등의 개선 등을 통한 확인을 하고 있음 - 교육에 방치되고 가정에서의 학대 등에 대하여 1차적으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익산 초등생 수개월째 행방 묘연 수사/전라일보(2020.10.07.)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641</p> <p>익산초등생 1명 2학기개학 이후 행방감취... 경찰 수사/전북중앙(2020.10.07.)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143</p> <p>제주서 실종 초등학생 나흘 만에 찾아/제주KBS(2020.10.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2508</p> <p>혼자서 제주도 간 초등학생 가족 품으로... '단순 가출' /새전북신문(2020.10.11.)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5456</p>
타시도 사례	

제 목	‘전북도교육청 추진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학생 신분 노출 2차 피해 논란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10.11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560	작 성 자	이휘빈, 양병웅
인권범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정보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전북도교육청 추진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학생 신분 노출 2차 피해 논란</p> <p>△ 이휘빈 양병웅 기자 · ○ 승인 2020.10.11 11:16</p> <p> 신분보장해야할 도교육청·학교가 신분노출</p>  <p>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과정에서 ‘술을 먹고 온 감독교사가 숙소에서 동료 선수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의 신분이 사실상 노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p> <p>특히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신분노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p> <p>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됐다.</p> <p>이 실태조사는 ‘소속팀에서 가족 형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체육계 고질적인 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p> <p>A군도 이 실태조사에서 지난 1월 하순께 숙소에서 술을 먹고 온 감독교사가 동료 선수를 폭행한 것을 봤다라는 내용을 적었다.</p> <p>도교육청은 공문과 함께 A학생의 실태조사 답변서를 해당 학교에 보냈고 이 과정에서 A학생의 신분이 사실상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p> <p>문제는 도교육청의 통보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교사가 피해 학생을 포함한 운동부 선수들을 소집해 일일이 면담을 진행했다는 점이다.</p> <p>소집한 해당 학년 부원들은 구조상 소수인원인데다 익명처리한 설문조사 내용을 감독이 읽었기에 운동부의 구조상 제보한 학생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과정에서 ‘술을 먹고 온 감독교사가 숙소에서 동료 선수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의 신분이 사실상 노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p> <p>특히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신분노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p>		

나오고 있다.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됐다.

이 실태조사는 소속팀에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체육계 고질적인 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A군도 이 실태조사에서 ‘지난 1월 하순께 숙소에서 술을 먹고 온 감독교사가 동료 선수를 폭행한 것을 봤다’ 라는 내용을 적었다.

도교육청은 공문과 함께 A학생의 실태조사 답변서를 해당 학교에 보냈고 이 과정에서 A학생의 신분이 사실상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도교육청의 통보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교사가 피해 학생을 포함한 운동부 선수들을 소집해 일일이 면담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소집한 해당 학년 부원들은 구조상 소수인원인데다 익명처리한 설문조사 내용을 감독이 읽었기에 운동부의 구조상 제보한 학생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학생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자 학교측은 감독교사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운동부 감독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 A군은 “감독교사가 면담을 하자고 했을때는 ‘안 썼다’ 고 대답했지만 당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었다” 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술렁거리서 이미 감독교사도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주칠 때마다 불안하다” 고 말했다.

A군의 학부모도 “익명성이 보장돼야 할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가 오히려 아이에게 2차 피해까지 우려돼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면서 “도교육청과 학교측에 해당 감독교사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는 “학교 체육 폭력을 바로잡겠다고 도교육청이 인권실태조사를 해놓고 오히려 솔직하게 응한 학생만 곤란하고 불안한 상황에 처했다” 며 “다른 운동부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다른 학교로 해당 감독교사를 보내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잘못된 것” 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보낸 공문은 실태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지만 설문 작성자 이름은 가려서 보냈다” 고 밝혔다.

감독교사 B씨는 “지난 1월 하순 대학팀과 연습경기를 했는데 성적이 안좋아서 앞으로는 잘하라는 차원에서 숙소에 들렀는데 당시 상황

	<p>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설문조사 공문은 체육부로 와서 우연히 보게 됐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물어보기 위해 아이들과 면담을 했으며 학교측의 경고 및 접근금지 처분에 따라 수시원서 쓸 때를 제외하고는 아이들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해당 학교 교장은 “감독교사가 열정이 앞서고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교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 방지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한편 도교육청은 전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추가적인 인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과정에서 ‘술을 먹고 온 감독교사가 숙소에서 동료 선수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의 신분이 사실상 노출, 2차 피해까지 우려됨</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고 최숙현 사건 계기로 운동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에 응답한 운동부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심각한 사안임</p> <p>-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및 학교 현장에서도 매뉴얼에 따른 조사가 필요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제 목	“애들아 학교가자”... 도내 등교수업 최대로		
출 처	전북중앙	기사날짜	2020.10.12
기사주소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335	작 성 자	정병창
인권범위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애들아 학교가자"... 도내 등교수업 최대로</p> <p>☞ 정병창 ☎ 승인 2020.10.12 17:38 💬 댓글 0</p> <hr/> <p>거리두기완화 소학교 밀집제한 제외 과대학교 2/3 밀집도 유지</p> <p>전북도 내 유·초·중·특수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 운영된다.</p> <p>전북도교육청은 1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p> <p>이에 따르면 전교생 3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밀집도 조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했다.</p> <p>전북지역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총 491개교(초 306개교, 중 135개교, 고 50개교)다.</p> <p>전체 학교 767개교 중 64%에 해당된다.</p> <p>300명 초과 900명 미만 학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교·등원 수업을 실시토록 안내했다.</p> <p>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에는 3분의2 이상 밀집도를 유지할 수 있다.</p> <p>특수학교 역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했다.</p> <p>전북도 내 유·초·중·특수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 운영된다.</p> <p>전북도교육청은 1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p> <p>이에 따르면 전교생 3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밀집도 조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했다.</p> <p>전북지역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총 491개교(초 306개교, 중 135개교, 고 50개교)다.</p> <p>전체 학교 767개교 중 64%에 해당된다.</p> <p>300명 초과 900명 미만 학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교·등원 수업을 실시토록 안내했다.</p> <p>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에는 3분의2 이상 밀집도를 유지</p>		

	<p>할 수 있다.</p> <p>특수학교 역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했다.</p> <p>다만 <u>과대학교(초등 1,000명 이상·중등 900명) 18개교(초 10개교, 중 2개교, 고 6개교)는 3분의2 밀집도를 유지해야 하며, 여건에 따라 등교수업 범위를 확대 적용이 가능토록 권고</u>했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위해 등교수업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등교수업이 이뤄지더라도 학급내 학생 활동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전북도 내 유·초·중등·특수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 운영되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코로나 19의 장기화 인한 학생들의 학습 저하 및 학력 부진 나타나는 상황에서 등교수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이후 학교내에서의 코로나 19 감염 및 위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p> <p>- 교육자치 하에서 전라북도의 코로나 19 상황과 감염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학교 현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 19일부터 300명 이하 학교 전면 등교수업/전북도민일보(2020.10.12.)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791</p> <p>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북 학교현장 등교 방안/전북일보(2020.10.12.)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407</p> <p>코로나19 1단계 조정...전북 초중고 학사 일정은?/전주KBS(2020.10.1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3553&ref=A</p> <p>등교수업 확대 첫날, 전북 초중고 98% 등교/전주KBS(2020.10.1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8737&ref=A</p> <p>도내 학교 98%, 전면 등교 수업 재개/전주MBC(2020.10.19.) https://www.jmbc.co.kr/news/view/15090</p>
타시도 사례	

제 목	고창서 '담임교사가 학생 학대했다' 고소장 접수돼 경찰 수사 나서		
출 처	전라일보	기사날짜	2020.10.14
기사주소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103	작 성 자	김수현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기사내용	<p>고창서 '담임교사가 학생 학대했다' 고소장 접수돼 경찰 수사 나서</p> <p>김수현 기자 승인 2020.10.14 4면</p> <p>     </p> <p>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p> <p>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초 고창군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같은 반 학생의 뺨을 꼬집거나, 허벅지를 강하게 쥐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p> <p>경찰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교사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다.</p> <p>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아동 및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다른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동학대는 발생 이전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p> <p><u>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u></p> <p>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초 고창군 <u>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같은 반 학생의 뺨을 꼬집거나, 허벅지를 강하게 쥐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고소장이</u> 접수돼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14일 밝</p>		

	<p>했다.</p> <p>경찰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교사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다.</p> <p>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아동 및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다른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동학대는 발생 이전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 -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같은 반 학생의 뺨을 꼬집거나, 허벅지를 강하게 쥐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됨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달에 이어 학교에서의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경찰 조사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철저한 조사와 후속 대책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1학년 초등학생 지속 학대한 교사, 경찰 수사/전북일보(2020.10.14.) http://www.i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635</p> <p>“애비 전화번호 뭐냐고!” …폭언한 초등학교 교사/전주KBS(2020.10.1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4432&ref=A</p> <p>[취재후] 8살배기 손에 쥐여준 녹음기와 ‘그 선생 목소리’ /KBS NEWS(2020.10.1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5289&ref=A</p> <p>‘교사가 8살 학생에 폭언’ …경찰 수사 착수/전주KBS(2020.10.1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5438&ref=A</p>
타시도 사례	

제 목	초등 저학년 기초문해력 부진 해소 '팔 걷어'		
출 처	전북중앙	기사날짜	2020.10.18
기사주소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759	작 성 자	정병창
인권범위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초등 저학년 기초문해력 부진 해소 '팔 걷어'</p> <p>△ 정병창 ⓒ 승인 2020.10.18 12:46 ☎ 댓글 0</p> <p>■ 도교육청 교사연수·교재지원 등</p> <p>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도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력 격차 예방 및 기초문해력 부진을 해소키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p> <p>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기초문해력(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교사연수를 비롯해 교재·교구 지원, 학생 지도 지원 등의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p>특히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생지도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뒀 초등 1학년 담임교사 중심 기초문해력 지도 연수, 국어과 더딤학생 이해 연수, 기초문해력 심화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p> <p>또한 읽기지도 동아리 지원을 통해 발음중심·의미중심 지도 방법 연수, 기초문해력 지도방법 연수, 난독학생진단 및 판별연수, 손바닥 그림책 제작 등에 나서고 있다.</p> <p>'손바닥 그림책'은 기초학습 더딤학생의 읽기, 쓰기 지도를 위한 교재로 학생과 함께 읽기, 글자 써넣기, 색칠하기, 오려붙이기 등 다양한 한글놀이를 통해 글자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p> <p>게다가 '두리교사제'와 '교사대 예비교원 보조교사제'도 눈에 띈다.</p> <p>두리교사제는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하는 수업 모델로 즉각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학습더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p> <p>전주북초, 먹달초, 용와초 등 3교에서 올해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2년간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p> <p>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도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력 격차 예방 및 기초문해력 부진을 해소키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p> <p>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기초문해력(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교사연수를 비롯해 교재·교구 지원, 학생 지도 지원 등의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p>특히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생지도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뒀 초등 1학년 담임교사 중심 기초문해력 지도 연수, 국어과 더딤학생 이해 연수, 기초문해력 심화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p> <p>또한 읽기지도 동아리 지원을 통해 발음중심·의미중심 지도 방법 연수, 기초문해력 지도방법 연수, 난독학생진단 및 판별연수, 손바닥 그림책 제작 등에 나서고 있다.</p> <p>'손바닥 그림책'은 기초학습 더딤학생의 읽기, 쓰기 지도를 위한 교재로 학생과 함께 읽기, 글자 써넣기, 색칠하기, 오려붙이기 등 다양한 한글놀이를 통해 글자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p> <p>게다가 '두리교사제'와 '교사대 예비교원 보조교사제'도 눈에 띈다.</p> <p>두리교사제는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하는 수업 모델로 즉각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학습더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p>		

	<p>수 있다.</p> <p>전주북초, 덕일초, 용와초 등 3교에서 올해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2년간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p> <p>교사대 학생들을 정규수업에 보조교사로 배치하는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도 기초학습지도, 학습코칭, 학생상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 올해 전주 금암초에서는 몽골 국적의 학생 2명이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통해 2개월 만에 한글을 터득했다.</p> <p>금암초 기초학력 보조교사로 참여했던 전주교대 2학년 학생은 “한국어 능력이 다른 두 아이를 한 수업에 재미있게 참여시키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해보았다”면서 “이를 통해 예비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관한 나의 능력치를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밝혔다.</p> <p>이 사업은 예비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초등 1학년 한글 책임교육인식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올해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돼 큰 주목을 받았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즉 문해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한글교수학습법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도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력 격차 예방 및 기초문해력 부진을 해소키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음</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 및 학력 부진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학습더듬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조교사제 등도 코로나 19 사태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학생들의 등교와 코로나 19상황에 맞춰 그 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한 실시가 필요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도교육청 학생 기초학력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전북일보(2020.10.18.)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862</p> <p>전라북도교육청 기초문해력 지원 앞장/전라일보(2020.10.18.) http://www.i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327</p> <p>“등교수업 차이 10배...학력격차 대책 수립해야” /청주KBS(2020.10.1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8960&ref=A</p>
타시도 사례	<p>부산시교육청, 지역 대학생 ‘학습 도우미’로 투입/부산KBS(2020.10.0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7718&ref=A</p> <p>울산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1수업 2교사제’ 추진/울산KBS(2020.10.0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7675&ref=A</p>

제 목	전북교육청, 외국국적 초·중학생에 아동양육비 한시지원		
출 처	전민일보	기사날짜	2020.10.19
기사주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429	작 성 자	이재봉
인권범위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사내용	<p>전북교육청, 외국국적 초·중학생에 아동양육비 한시지원</p> <p>☞ 이재봉 기자 ☎ 승인 2020.10.19 16:36 💬 댓글 0</p> <p> 초 201명, 중 214명 등 총 415명 대상</p>  <p>전북교육청이 도내 외국국적 초·중학생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p> <p>19일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및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p> <p>이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할 수 있다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에 따라 추진된다.</p> <p>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외국 국적 재학생으로 10월 8일 기준 초등학교 201명, 중학생 214명 등 총 415명이다.</p> <p>지원 금액은 총 7,230만원이며 초등학교 20만원, 중학생 15만원 현금으로 지원한다.</p> <p>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지역 국립학교, 특수학교 포함)은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없이 스쿨뱅킹 계좌나 수령을 원하는 계좌로 받으면 된다.</p>		
	<p>전북교육청이 도내 외국국적 초·중학생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p> <p>19일 <u>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및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u></p>		

	<p>이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할 수 있다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에 따라 추진된다.</p> <p>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외국 국적 재학생으로 10월 8일 기준 초등학교 201명, 중학생 214명 등 총 415명이다.</p> <p>지원 금액은 총 7,230만원이며 초등학교 20만원, 중학생 15만원 현금으로 지원한다.</p> <p>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지역 국립학교, 특수학교 포함)은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없이 스쿨뱅킹 계좌나 수령을 원하는 계좌로 받으면 된다.</p> <p>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계좌정보 및 동의 절차를 거친후 11월 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며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전북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전북교육청이 도내 외국국적 초·중학생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및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 사업을 진행함</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초·중등 학생에게 돌봄 지원금이 지원됐으나 외국인 학생들은 지원받지 못했으나,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돌봄 지원금을 전북교육청에서 지급한 것은 바람직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교육청 외국국적 초·중생에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전북도민일보(2020.10.19.)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3772</p> <p>전북도교육청, 외국 국적 학생 양육 지원금 한시 지급/전주KBS(2020.10.2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32998&ref=A</p>
타시도 사례	<p>'경기교육청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외국 국적 학생까지 확대/한국일보 2020.10.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513270005215?did=DA</p>

제 목	전북교육청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10.21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127	작 성 자	신중식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기사내용	<p>전북교육청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p> <p>신중식 기자 승인 2020.10.21 17:51 댓글 0</p> <div>  <p>전북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달 30일까지 도내 지역별 중학교 40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교장, 교감 및 학교폭력 담당자, 상담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p> <p>전라북도교육청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혐오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학교에서도 성별, 장애, 종교,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다.</p> <p>조사 내용은 ▲학교 내 학교폭력 사안 중 혐오표현 관련 현황(2019년) ▲혐오표현 관련 상담현황(2019년) ▲혐오표현 관련 교육(교직원, 학생 등) 현황(2019년) ▲학칙에 혐오표현 관련 규정 포함 유무 ▲학교생활규정에 혐오표현 관련 규정 포함 유무 ▲학교 내 혐오표현 예방 노력 ▲학생의 혐오표현 실태 등이다.</p> <p>조사 결과는 학교 내 소수자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혐오표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p> <p>전북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달 30일까지 도내 지역별 중학교 40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교장, 교감 및 학교폭력 담당자, 상담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p> <p>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혐오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학교에서도 성별, 장애, 종교,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다.</p> <p>조사 내용은 ▲학교 내 학교폭력 사안 중 혐오표현 관련 현황(2019년)</p> </div>		

	<p>▲혐오표현 관련 상담현황(2019년) ▲혐오표현 관련 교육(교직원, 학생 등) 현황(2019년) ▲학칙에 혐오표현 관련 규정 포함 유무 ▲학교생활규정에 혐오표현 관련 규정 포함 유무 ▲학교 내 혐오표현 예방 노력 ▲학생의 혐오표현 실태 등이다.</p> <p>조사 결과는 학교 내 소수자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혐오표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전북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달 30일까지 도내 지역별 중학교 40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교장, 교감 및 학교폭력 담당자, 상담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 조사를 진행함</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학교에서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혐오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실태조사를 통하여 혐오표현에 사용을 감소시키고 정책 및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p> <p>- 학교 규정에 대한 혐오표현 조사와 더불어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권에 반하는 규정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도교육청,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전북일보(2020.10.21.)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170 전북도교육청,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새전북신문(2020.10.21.)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6383 전북교육청, 30일까지 ‘학교 내 혐오 표현’ 조사/전주KBS(2020.10.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30875&ref=A</p>
타시도 사례	

제 목	전주시 한 고교생 교사 7명 신체 등 촬영, 교육 당국 조사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10.25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758	작 성 자	이휘빈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div> <div>  <p>전라북도교육청</p> </div> <div> <p>전주시 한 고교서 고등학생이 교사 7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발각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p> <p>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주시에 위치한 한 학교서 고등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해당 학생은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교사들의 전신 및 특정 부위를 사진촬영하고 신체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한 교사의 신분증 및 소지품, 가정 우편함까지 촬영했다고 밝혔다.</p> <p>피해를 입은 7명의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파일 유출등의 걱정으로 교단에 설 수 없다”고 호소했으며,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 조치로 피해 교원과 격리된 상태다. 또한 23일 학교권 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p> <p>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학생에게 징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며, 최대 조치인 퇴학까지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p> </div> </div> <div> <p>전주시 한 고교서 고등학생이 교사 7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발각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p> <p>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주시에 위치한 한 학교서 고등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해당 학생은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교사들의 전신 및 특정 부위를 사진촬영하고 신체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한 교사의 신분증 및 소지품, 가정 우편함까지 촬영했다고 밝혔다.</p> <p>피해를 입은 7명의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파일 유출등의 걱정으로 교단에 설 수 없다”고 호소했으며, 해당 학생은 가</p> </div>		

	<p>정학습 조치로 피해 교원과 격리된 상태다. 또한 23일 학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p> <p>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학생에게 징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며, 최대 조치인 퇴학까지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전주시 한 고교서 고등학생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교사들의 전신 및 특정 부위를 사진촬영하고 신체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한 교사의 신분증 및 소지품, 가정우편함까지 촬영함</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촬영이나, 특정 신체부위의 촬영,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됨을 인권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보호가 필요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여선생님 특정 신체부위 몰래 촬영’ 고교생, 경찰 조사/전북일보(2020.10.25.)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430</p> <p>여교사 불법촬영한 전북지역 고교생 퇴학 처분/전민일보(2020.10.28.)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26</p> <p>여선생 몰카 촬영 고교생 퇴학/전라일보(2020.10.28.) http://www.i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234</p>
타시도 사례	

제 목	“코로나19시대, 이후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하가 적정”		
출 처	전북일보	기사날짜	2020.10.27
기사주소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645	작 성 자	백세종
인권범위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코로나19시대, 이후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하가 적정”</p> <p>☞ 백세종 ☞ 승인 2020.10.27 21:27 ☞ 댓글 0</p> <p>【교육】 전제기사 교육일반 초중고 대학</p> <p>전교조 등 교육단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해야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대표발의”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야, 미숙한 원격수업과 교육질, 방역 등 문제 감안</p>  <p>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오세원 기자</p> <p>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를 위해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노재화)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27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로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p> <p>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를 위해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노재화)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27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로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p>		

	<p>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p> <p>이들은 “코로나 19의 교훈은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시간을 어떻게든 채우는 것으로 교육했다는 거짓이 더 이상 학교를 지배해서는 안된다”며 “전교조가 지난 8월에 실시한 2020년 1학기 교육실태와 교사요구조사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이 원격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낮다고 응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p> <p>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국가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23.1명, 중학교는 26.7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 21.1명과 23.3명을 웃돌고 있다.</p> <p>전북지역의 경우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도내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9.47명, 유치원 13.5명, 초등 20.16명, 중학교 23.18명, 고등학교 22.2명으로 중·고등학교의 수가 발의안의 기준인 20명을 넘는다.</p> <p>이같은 통계와 코로나19시대임을 감안할때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이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p> <p>이들은 그러면서 “교육을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 논리 아래 두어서는 안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수와 교원수를 감축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위기를 반복해서도 안된다”며 “<u>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교육공공성 확대와 국가의 책무성을 다하는 정책의 시작을 촉구한다</u>”고 강조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를 위해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 -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교육공공성 확대와 국가의 책무성을 다하는 정책의 시작을 촉구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조정이 필요함 - 법제화 요구와 더불어 현재 전북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울림 학교를 통하여 학교 밀집도가 완화될것이라 봄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교육단체 “학급당 학생수 20명이하 법제화 마련을“/전북중앙(2020.10.27.)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512</p> <p>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법제화해야” /전라일보(2020.10.27.)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134</p>
타시도 사례	

* 10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일지(타시도)

제 목	안산 시민단체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하라”		
출 처	경향신문	기사날짜	2020.10.08
기사주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1509001&code=940100	작 성 자	경태영
인권범위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사내용	<p>안산 시민단체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하라”</p> <p>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2020-10-06 15:09 입력 2020-10-06 15:09 수정</p> <p>경기 안산이주민센터, 오산이주민센터 등 28개 사회시민단체는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 및 학습지원금을 모든 이주 아동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p> <p>6일 안산이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돌봄지원예산 5900억원을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제활성화 및 중학생지원을 위해 각 학교에서 1인당 15만원을 스쿨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p> <p>그러나 이주아동은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p> <p>이들은 “이주아동 역시 대한민국의 자녀와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하게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으며, 그 부모 또한 아이를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동일하다”며 “정부의 코로나19 ‘비대면 학습 지원금’ 이주아동의 제외는 차별이자 UN아동권리협약의 위반”이라고 밝혔다.</p> <p>이들은 UN아동권리협약에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 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어 정부는 미등록 아이일지라도 중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UN의 권고에 따라 2004년 이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이들은 정부에 모든 이주 아동에게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고,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p> <p>또한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촉구했다.</p> <p>경기 안산이주민센터, 오산이주민센터 등 28개 사회시민단체는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 및 학습지원금을 모든 이주 아동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p> <p>6일 안산이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돌봄지원예산 5900억원을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제활성화 및 중학생지원을 위해 각 학교에서 1인당 15만원을 스쿨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p> <p>그러나 이주아동은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p>		

	<p>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p> <p>이들은 “이주아동 역시 대한민국의 자녀와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하게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으며, 그 부모 또한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동일하다” 며 “정부의 코로나19 ‘비대면 학습 지원금’ 이주아동의 제외는 차별이자 UN아동권리협약의 위반” 이라고 밝혔다.</p> <p>이들은 UN아동권리협약에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어 정부는 미등록 아이일지라도 중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UN의 권고에 따라 2004년 이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이들은 정부에 모든 이주 아동에게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을 지급하고,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p> <p>또한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촉구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 및 학습지원금을 모든 이주 아동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UN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위반으로서 학교에서는 국적, 성별,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외국인 자녀의 중학생 학습지원금 지급 차별 중단하라/오마이뉴스 (2020.10.06.)</p> <p>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1683</p> <p>‘외국인 학생 지원금 제외’ 차별 가르치는 교육부/경인일보(2020.10.08.)</p> <p>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007010001153</p>
타시도 사례	

제 목	아동들 “매일 걷는 ‘통학로’,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출 처	오마이뉴스	기사날짜	2020.10.13
기사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3555	작 성 자	윤성효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아동들 "매일 걷는 '통학로',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창원시-의회에 '안전한 통학로 촉구'</p> <p>20.10.13 10:09 최종 업데이트 20.10.13 10:09 윤성효(cjnews) ▼</p> <p>좋아요 7개 + 크게 - 작게 인쇄 URL줄이기 ☆ 스크랩</p> <p>원고료로 응원하기</p> <p>숨은 어린이보호구역 찾기! 분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없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기 어려움 통학로]</p> <p>문구점과 약원 앞에는 인도가 없어요! 복성초등학교 [학교 앞은 건너편 상가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인도가 없는 모습]</p> <p>학교 가는 길, 통학로 사진전. © 초록우산어린이재단</p> <p>관련사진보기</p> <p>어린이들이 '매일 걷는 길'인 통학로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는 13일 창원시청(의회)을 찾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요구했다.</p> <p>어린이와 학부모들은 허성무 시장과 이치우 창원시의회의 의장을 만나 '통학로 개선 촉구서'를 전달했다.</p> <p>이들은 '창원 그린로드대장경'에 참여한 어린이들이다.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아동 425명이 나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것이다.</p> <p>어린이들이 '매일 걷는 길'인 통학로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는 13일 창원시청(의회)을 찾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요구했다.</p>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허성무 시장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을 만나 통학로 개선 촉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창원 그린로드대장정'에 참여한 어린이들이다.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아동 425명이 나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것이다.

임시는 학생(하북초교 6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는 어린이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모든 길이 안전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은 특별히 더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져서 어린이들도, 부모님들도 마음 졸이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고 했다.

정혜선 학생(북성초교 6년)은 “이번 그린로드대장정을 통하여 학교 정문 앞 장애물을 제거하고, 인도를 넓혀 주시고 횡단보도도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위험하고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통학로가 개선되어 모든 학생들이 통학로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고 했다.

김민국 학생(석동초교 6년)은 “그린로드대장정을 함께 하면서 익숙한 통학로에 숨어 있던 위험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 길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 과속하는 차, 울퉁불퉁한 인도 등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고,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고 했다.

또 최가은 학생(온천초교 6년)은 “학교를 가는 골목길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과 마주치면 길옆으로 바짝 붙어야 하는데 '이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튀어 나오는 차들 때문에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등굣길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불편을 후배들은 계속 겪게 될 것이고, 위험 속에서 학교와 집을 오갈 것입니다. 동생과 후배들이 지금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가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학생(월성초교 6년)은 “6년간 다닌 친근한 통학길이 안전한 통학길이 되도록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친구들과 더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 김서울 학생(합성초교 6년)은 “불법주차 문제가 해결되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나고 싶습니다“고 했다.

창원 그린로드대장정은 UN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 이익 최우선'과 '제6조 생존권과 발달권'에 의거하여 통학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

	<p><u>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학교 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는 네트워크 활동</u>이다.</p> <p>지난 7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어린이참여교육에는 6개 초등학교, 28개 학급, 42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p> <p><u>학생들은 주로 불법주차, 과속,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 건기 불편한 인도 등이 위험하다며 개선을 요청하였고, 쓰레기와 담배꽂초, 동물 배설물로 인해 불쾌하다는 의견을 냈다.</u></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창원 그린로드대장정은 UN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 이익 최우선'과 '제6조 생존권과 발달권'에 의거하여 통학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학교 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는 네트워크 활동</p> <p>- 학생들은 주로 불법주차, 과속,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 건기 불편한 인도 등이 위험하다며 개선을 요청하였고, 쓰레기와 담배꽂초, 동물 배설물로 인해 불쾌하다는 의견을 냈음</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창원지역에서 그린로드대장정을 통하여 통학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유해환경에 대해 직접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정책과 시설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음.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참여를 통하여 정책이나 시설개선에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제 목	편의점 들렀다가 담배부터 배울라		
출 처	경향신문	기사날짜	2020.10.08
기사주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80928011&code=940100	작 성 자	김태훈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편의점 들렀다가 담배부터 배울라</p> <p>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p> <p>입력 : 2020.10.14</p> <p>“보려고 한 건 아닌데 눈이 가긴 해요. 색깔도 알록달록해서 눈에 잘 띄니까요.”</p> <p>하고 후 간식을 사 먹으러 친구들과 편의점에 들른 중학생 이모양(13)의 시선은 자기도 모르게 담배 광고에 꽂힌다. 계산대 앞에 서면 계산내역이 나오는 화면은 안 보여도 담배광고판은 눈에 확 들어 오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에 있는 이양의 중학교 정문에서 반경 100m 안에 있는 편의점은 모두 두 곳이다. 두 곳 모두 담배를 판매하는 점포이고 담배 진열장 말고도 담배광고가 여럿 붙어 있다. 눈 돌릴 곳 없는 계산대 앞에서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담배광고에 노출된다. 이양과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면서도 ‘담배 종류 정말 많네’, ‘담배가 뭐가 좋길래 저렇게 잘 팔리나’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p>  <p>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내부 곳곳에 담배 광고가 게시되어 있다. / 권도현 기자</p> <p>“보려고 한 건 아닌데 눈이 가긴 해요. 색깔도 알록달록해서 눈에 잘 띄니까요.”</p> <p>하고 후 간식을 사 먹으러 친구들과 편의점에 들른 중학생 이모양(13)</p>		

의 시선은 자기도 모르게 담배광고에 쫓힌다. 계산대 앞에 서면 계산대 역이 나오는 화면은 안 보여도 담배광고판은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에 있는 이양의 중학교 정문에서 반경 100m 안에 있는 편의점은 모두 두 곳이다. 두 곳 모두 담배를 판매하는 점포이고 담배 진열장 말고도 담배광고가 여럿 붙어 있다. **눈 돌릴 곳 없는 계산대 앞에서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담배광고에 노출된다.** 이양과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면서도 ‘담배 종류 정말 많네’, ‘담배가 뭐가 좋길래 저렇게 잘 팔리나’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11월부터 담배 광고물 외부노출 단속

오는 1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이 되면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물 외부노출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시작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광고가 점포 바깥에서 보여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고, 당국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규정은 2011년 도입된 이래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담배광고 외부노출을 금지하고 위반 점포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바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당국은 해당 조치를 11월로 미뤘다. 복지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담배광고·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시점이 지난해였던 점을 감안하면 담배소매점 입장에서라도 1년 이상 대비할 기간은 있었던 셈이다.

편의점에 유독 담배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은 편의점 점주들이다. 게시하는 담배광고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점주들은 광고물을 설치하는 대가로 담배회사로부터 20만~60만원가량의 광고비를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담배를 팔아 남기는 이문은 적지만 담배 판매로 들어오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들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상 담배광고 축소로 이어질 금연대책 때문에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담배 소매점주들의 입장도 이유는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점포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담배광고 때문에 특히 청소년을 흡연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및 조사결과는 지속적으로 나왔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

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학생 1500명 중 담배광고나 판촉을 접하고 ‘흡연 호기심이 생겼다’고 답한 비율이 20%를 차지했고, ‘실제 담배를 구매한 경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8%에 달했다. 서울만 보더라도 초·중·고교 반경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평균 7곳의 담배 소매점이 있고, 점포 1곳당 담배광고가 평균 22.3개에 달할 정도여서 청소년들이 담배광고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편의점 담배광고가 얼마나 눈길을 끄는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왜 유독 담배광고를 피하기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2018년 한국금연학회 학술대회에서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팀이 발표한 ‘아이트래킹을 활용한 편의점 담배광고의 시선 이동 연구’를 보면 계산대 옆 소형 입간판 형태의 담배 신제품 출시 광고는 조사 참여자 100%가 시선을 향할 정도였다. 이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조사 참여자로 선정해 시선이 향하는 곳을 파악할 수 있는 ‘아이트래킹’ 기기를 착용한 뒤 편의점 안에서 어느 지점에 눈길이 머무르는지를 분석했다. 조사시점 당시 새로 출시되거나 광고물의 크기·형태가 눈에 띄는 특정 상표의 담배 2종이 역시 조사 참여자 전원의 시선을 끌었고, 담배 진열장 역시 95%의 참여자가 시선을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도 담배·흡연 노출 심각

문제는 담배광고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유현재 교수가 조사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에서 청소년들은 ‘담배 맛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누가 옆에서 하나 주면 피워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잠재적 흡연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유 교수는 “담배광고는 청소년들의 흡연 시도 및 시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및 진열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배광고가 흡연을 하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포 외부노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아예 광고 자체를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을 2005년 비준했지만 2018년 기준 협약 이행률은 66.7%에 그쳤다. 특히 담배광고·판촉·후원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협약 제13조의 이행비율은 0%로 조치가 전무했고, 담배 공급을 줄이기 위해 담배 판매자나 연초 경작 농가에 대체활동을 지원하는 대책 역시 이행률 0%를 기록했다.

	<p>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담배와 흡연행위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노출되는 문제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확인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법령 위반사례 278건 중 법으로 금지된 인터넷 담배광고가 227건(81.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인터넷을 통한 담배 판매도 31건(11.2%)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드라마와 영화, 웹툰 콘텐츠 131개 작품 중 전체의 54.9%인 72개 작품에서 담배와 흡연 장면이 자주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영상의 경우 전체이용가 영상 537건(97.6%)에서 흡연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p> <p>유럽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거리 담배광고를 허용해 왔던 독일이 지난 9월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도 각종 미디어를 통한 담배광고를 금지해온 점은 비슷하지만 사실상 담배광고가 거리에선 노출돼 왔기 때문에 예정된 대로 점포 외부 광고 노출을 실질적으로 막고 전자담배 기기를 활용한 대체 판촉행위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금연지원센터)은 “담배광고가 여러 채널에서 막혀 있다고는 해도 인터넷 등을 통해 신제품 출시 공고를 이용한 사실상의 홍보 통로는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도 규제해야 사회 전체가 담배광고의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점에서 눈 돌릴 곳 없는 계산대 앞에서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담배광고에 노출되고 있음 -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담배와 흡연행위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노출되는 문제 역시 심각한 실정임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1월이 되면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물 외부노출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시작되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편의점 안에 붙은 담배 광고, 밖에선 하나도 안보이게 가려라?/중앙일보 (2020.10. 28.) https://news.joins.com/article/23905365</p> <p>편의점 93%가 담배광고 외부노출...위반 인식 점포 절반도 안돼/뉴시스 (2020.10.06.)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06_0001187773&cID=10201&pID=10200</p>
타시도 사례	

제 목	“선생님이 허벅지 더듬어…학교는 은폐” 여중생들 호소		
출 처	국민일보	기사날짜	2020.10.16
기사주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17246&code=61121411&cp=nv	작 성 자	이홍근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선생님이 허벅지 더듬어...학교는 은폐” 여중생들 호소 입력 : 2020-10-16 15:00 / 수정 : 2020-10-16 15:05		
기사내용	<div> <p>— 청원진행중 —</p> <h3>부산 **여중 성추행사건 은폐</h3> <p>참여인원 : [4,561명]</p> <div> <div>카테고리 인권/성평등</div> <div>행원시작 2020-10-16</div> <div>행원마감 2020-11-15</div> <div>행원인 kskao-***</div> </div> <div> <div>행원시작</div> <div>청원진행중</div> <div>청원종료</div> <div>당면판결</div> </div> <p>청와대 국민청원 캡처</p> <p>부산의 한 여중에서 60대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스쿨 미투' 증언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학교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p> <p>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엔 '부산 ○○여중 성추행사건 은폐'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중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라 밝힌 청원인은 “최근 뉴스와 SNS를 통해 지난해 있었던 교내 성추행 사건이 재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접했다”고 말했다.</p> <p>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재학생들이 60대 교사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u>최초 신고를 받은 담임교사는 학교측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는 A씨에게 “해당 학급에 사과하라”는 말만 한 채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교육청 매뉴얼 상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았을 땐 수사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나 이를 어긴 것이다.</u></p> <p>A씨는 이후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두 달 뒤 퇴직금을 받고 퇴직했다.</p> <p>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경찰과 교육청은 올해 8월 학교를 찾아가 사</p> </div>		

	<p>건 경위를 조사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찾아가 교사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다른 교사들은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다고 답변했다”며 “가해 교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학교 교장과 교감도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p> <p>이어 “심지어는 그 후 <u>학폭 담당 교사와 학생부교사가 신고한 학생을 따로 카페에 불러내 사건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u>”고 주장했다.</p> <p>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학생의 어깨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옆드려 자고 있는 학생 어깨를 주무르고, 남교사 휴게실에 누워 청소하는 학생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또 학생에게 “네가 예뻐서 너무 좋다”며 외모를 폄평하고 수업 중 유희주점 경험담을 늘어놓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p> <p>청원인은 교사들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학생부장을 비롯한 선생이 피해자를 불러 당시 일을 묻고, 우리가 알아서 처벌할 테니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영어 교과 선생은 수업 시간에 ‘나이 있는 사람이 사과까지 했는데 너네가 너무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p> <p>청원인은 “신고와 소문을 막으려던 교사들,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보라”며 “여태 저희가 선생님들을 보고 자란 것은 무엇이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p> <p>이어 “(이런 일은)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며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신고를 받은 담임교사는 학교측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는 A씨에게 “해당 학급에 사과하라”는 말만 한 채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으며, 교육청 매뉴얼 상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았을 땐 수사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나 이를 어긴 것임 - 학폭 담당 교사와 학생부교사가 신고한 학생을 따로 카페에 불러내 사건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데서 문제가 발생하였음.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제 목	“보복 두려워... 폭력 피해 학생선수 80% 침묵		
출 처	세계일보	기사날짜	2020.10.19
기사주소	http://www.segye.com/newsView/20201019520471?Ourl=naver	작 성 자	박지원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기사내용	<p>보복 두려워... 폭력 피해 학생선수 80% 침묵</p> <p>입력 : 2020-10-19 19:24:51 수정 : 2020-10-19 23:59:02</p> <p>인권위 조사... 가해자 주로 코치</p>  <p>초·중·고등학생 운동선수들은 여전히 신체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상황 전수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부처에 법률과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p> <p>인권위 스포츠인권조사단이 학교 운동부나 체육 단체에 소속된 학생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응답자 5만여명 가운데 신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자는 8440명 (14.7%), 성희롱·성폭력 피해 응답자는 3829건(6.7%)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는 주로 코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선배 선수가 많았다.</p> <p>초·중·고등학생 운동선수들은 여전히 신체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상황 전수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부처에 법률과 지침</p>		

	<p>개정을 권고했다.</p> <p>인권위 스포츠인권조사단이 학교 운동부나 체육 단체에 소속된 학생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응답자 5만여명 가운데 신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자는 8440명(14.7%), 성희롱·성폭력 피해 응답자는 3829건(6.7%)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는 주로 코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선배 선수가 많았다.</p> <p>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 피해 학생의 79.6%,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 53.6%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초·중·고등학생 운동선수들은 여전히 신체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기관에서 운동선수들에 대한 신체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음</p> <p>-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여야 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보복 두려워, 대응 방법 몰라”...폭력 피해 학생선수 80% '침묵' / MBC뉴스 (2020.10.19.)</p> <p>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45560_32633.html</p> <p>'폭행·성폭력 피해' 학생 선수 “신고 2~3%뿐...보복 두려워서” / YTN(2020.10.20.)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200454182096</p>
타시도 사례	

* 11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일지(전라북도)

제 목	전북교육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고1·2학년 39명 대상		
출 처	전민일보	기사날짜	2020.11.03
기사주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357	작 성 자	이재봉
인권범위	- 교육에 관한 권리<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기사내용	<p>전북교육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고1·2학년 39명 대상</p> <p>☞ 이재봉 기자 ☎ 승인 2020.11.03 15:51 💬 댓글 0</p>  <p>전북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p> <p>도교육청은 4일 공무원을 꿈꾸는 도내 고1, 2학년 학생 39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p> <p>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부서별 체험활동을 진행한다.</p> <p>근무수칙과 직장 예절을 익힌 후 멘토와의 만남, 부서별 탐방 인터뷰, 1일 현장 업무 체험 등을 통해 교육행정공무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행정기관의 다양한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p> <p>학교교육과에서는 대입진학지도실 운영과 진로교육 필요성을, 교육혁신과에서는 혁신학교와 참학력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자치 및 환경·인권교육 필요성 등을 소개한다.</p> <p>예산과에서는 교육청과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등을 소개하고 행정과에서는 학생배치 계획 및 학급편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직업윤리와 진로탐색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전북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p> <p><u>도교육청은 4일 공무원을 꿈꾸는 도내 고1, 2학년 학생 39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u></p> <p>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부서별 체험활동을 진행한다.</p>		

	<p>근무수칙과 직장 예절을 익힌 후 멘토와의 만남, 부서별 탐방 인터뷰, 1일 현장 업무 체험 등을 통해 교육행정공무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행정기관의 다양한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p> <p>학교교육과에서는 대입진학지도실 운영과 진로교육 필요성을, 교육혁신과에서는 혁신학교와 참학력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자치 및 환경·인권교육 필요성 등을 소개한다.</p> <p>예산과에서는 교육청과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등을 소개하고 행정과에서는 학생배치 계획 및 학급편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u>진로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직업윤리와 진로탐색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u>” 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을 꿈꾸는 도내 고1, 2학년 학생 39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의 날’ 을 운영 -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직업윤리와 진로탐색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임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 체험 및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활동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교육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전북도민일보(2020.11.03.)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5893</p> <p>2020년 드림스타트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교육 실시/위키트리(2020.11.23.)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94099</p>
타시도 사례	

제 목	도교육청,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만들어간다		
출 처	전라일보	기사날짜	2020.11.04
기사주소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849	작 성 자	정해은
인권범위	- 자치와 참여의 권리<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p>도교육청,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만들어간다</p> <p>6일 ‘제2회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p> <p>정해은 기자 승인 2020.11.04 5면</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 </div> <p>+ - ☐ 🔍</p> <p>전라북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의 권익증진과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발굴을 위해 6일 ‘제2회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연다.</p> <p>5층 정책협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6대 추진방향의 20개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현황과 지난 6월 1차 회의 때 제안된 내용에 대한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p> <p>제안사항으로는 △민주주의 역사탐방 등 민주주의 직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필요 △학습과 심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실 공간혁신의 방향 모색 △지역사회 연계 도시지역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생 홍보 및 전달방안 필요 △가해 방지 중심으로 학생 성교육 방향 전환/성교육 강사에 대한 교육 및 평가 필요 등이 있다.</p> <p>또 △지역별 학생자치연합체 구성 △학생 예술경험 확대를 위한 문화체험지원사업 강화 △중학생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홍보 필요성 등도 제안됐다.</p> <p>위원회는 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특히 전체 27명의 위원중 10명을 학생위원으로 구성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p> <p>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가능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p> <p>전라북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의 권익증진과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발굴을 위해 6일 ‘제2회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연다.</p> <p>5층 정책협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6대 추진방향의 20개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현황과 지난 6월 1차 회의 때 제안된 내용에 대한</p>		

	<p>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p> <p>제안사항으로는 △민주주의 역사탐방 등 민주주의 직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필요 △학습과 쉼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실 공간혁신의 방향 모색 △지역사회 연계 도시지역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생 홍보 및 전달방안 필요 △가해 방지 중심으로 학생 성교육 방향 전환/성교육 강사에 대한 교육 및 평가 필요 등이 있다.</p> <p>또 △지역별 학생자치연합체 구성 △학생 예술경험 확대를 위한 문화 체험지원사업 강화 △중학생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홍보 필요성 등도 제안됐다.</p> <p>위원회는 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특히 전체 27명의 위원중 10명을 학생위원으로 구성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p> <p>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가능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의 권익증진과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발굴을 위해 6일 ‘제2회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가능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추진 중임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 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권익증진과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도교육청 내일 청소년정책위 개최... 학생위원 정책 직접 참여/전북중앙 (2020.11.04.)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133</p> <p>전북도교육청, ‘2020. 제2회 청소년정책위원회’ 오는 6일 개최/새전북신문 (2020.11.04.)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7603</p> <p>전북교육청, 제2회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전북도민일보 (2020.11.04.)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6045</p>
타시도 사례	

제 목	전북교육청 2020 전라북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11.08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6414	작 성 자	신중식
인권범위	- 교육에 관한 권리<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전북교육청 2020 전라북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p> <p>신중식 기자 · 승인 2020.11.08 15:51 · 댓글 0</p> <div>  <p>전라북도교육청</p> </div> <p>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0 전라북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p> <p>올해 대회는 '함께 극복하자! 코로나19'를 주제로 7일부터 20일까지 11개 종목에서 현장경기 및 온라인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된다.</p> <p>특히 온라인 챌린지를 병행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 활동 제한의 기회를 온라인으로 옮겨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다.</p> <p>온라인 챌린지 종목의 경우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연습이 가능하고, 참여 가능한 종목으로 구성했다.</p> <p>참가대상은 도내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학생으로 현재 1,900여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p> <p>육상·피구·축구 등 현장진행 경기는 출전 학교별 대항전으로 실시하되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한 종목별 비접촉 분산 개최 및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p> <p>농구·킨볼·탁구·배드민턴·줄넘기·택견·아매달리·홈트레이닝 등의 종목은 온라인 챌린지로 운영된다.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학교에서 영상을 제출하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p> <p>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0 전라북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p> <p>올해 대회는 '함께 극복하자! 코로나19'를 주제로 7일부터 20일까지 11개 종목에서 현장경기 및 온라인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된다.</p> <p>특히 온라인 챌린지를 병행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 활동 제한의 기</p>		

	<p>회를 온라인으로 옮겨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다.</p> <p>온라인 챌린지 종목의 경우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연습이 가능하고, 참여 가능한 종목으로 구성했다.</p> <p>참가대상은 도내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학생으로 현재 1,900여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p> <p>육상·피구·축구 등 현장진행 경기는 출전 학교별 대항전으로 실시하되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한 종목별 비접촉 분산 개최 및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p> <p>농구·킨볼·탁구·배드민턴·줄넘기·터크걸이·매달리기·홈트레이닝 등의 종목은 온라인 챌린지로 운영된다.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학교에서 영상을 제출하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0 전라북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 -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한 종목별 비접촉 분산 개최 및 무관중 경기와 온라인 챌린지로 운영하고 있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 및 집중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함 - 감염위험 및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전라일보(2020.11.08.)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050</p> <p>2020 전라북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새전북신문(2020.11.08.)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7860</p>
타시도 사례	

제 목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설치 운영		
출 처	전북중앙	기사날짜	2020.11.12
기사주소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782	작 성 자	김기현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설치 운영</p> <p>☞ 김기현 ☎ 승인 2020.11.12 14:44 💬 댓글 0</p> <p> 시의회 행복위 조례안 가결 행·재정적 지원·법적 보호 센터 위탁 공개모집 원칙 </p>  <p>군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함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p> <p>특히 청소년들이 노동현장과 노동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발명하거나 창의적인 사항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p> <p>12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가결했다.</p> <p>이번 조례안은 조경수배형원·정지숙 의원 공동대표 발의로 이뤄졌으며, 오는 26일 군산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p> <p>군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함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p>		

특히 청소년들이 노동현장과 노동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발명하거나 창의적인 사항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12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정수·배형원·정지숙 의원 공동대표 발의로 이뤄졌으며, 오는 26일 군산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의원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교육(조정수)과 복지(배형원), 노동(정지숙)분야로 나눠 조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화상회의 줌(Zoom)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청취했다.

또한 청소년 단체를 비롯해 청소년 개개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듣고, 통계 및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또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노동인권 침해 사례와 급여 미지급 및 착취, 차별과 성적 고통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도 확인했다.

여기에다 관련부서 공무원과 수차례에 걸친 자료검토와 토론회를 거쳐 이번 조례안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군산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청소년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군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센터에서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도 포함됐는데,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p>또한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상담·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홍보해야 한다.</p> <p>또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등도 포함시켰다.</p> <p>조경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법적 근거를 통해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군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함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 운영</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2017년 전북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그 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통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있음</p> <p>- 전라북도에서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하여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학생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시급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p>충북청소년노동인권단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개정 환영” / 동양일보(2020.06.25.)</p> <p>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159</p>

제 목	군산지역 A중학교 장애우 폭행·괴롭힘 파문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11.15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7367	작 성 자	조경장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군산지역 A중학교 장애우 폭행·괴롭힘 파문</p> <p>△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11.15 14:58 △ 댓글 0</p> <p>네이버 메인에 #전북도민일보 추가</p>  <p>군산지역 한 중학교에서 장애우를 폭행하는 등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p> <p>13일 피해 학생의 부모에 따르면 군산 A중학교 2학년인 B모군은 같은 학교 C모군 등 동급생들과 3학년 선배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놀림과 폭행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p> <p>B군은 이들로부터 팔굽혀펴기 등 신체적 괴롭힘과 집에서 가지고 온 물을 억지로 마시도록 정신적 강요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또 가해 학생들은 B군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땐 '엄마·아빠에게 이른다' 등으로 협박을 하거나 신체 일부를 때렸다는 게 B군 가족들의 설명이다.</p> <p>특히 문제는 피해 학생인 B군이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49 이하인 지적장애 2급이라는 것.</p> <p>여기에 B군은 언어장애 4급과 뇌전증(간질)으로 인해 현재도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상황이다.</p> <p>B군의 아버지는 "A중학교를 보낸 이유가 학생 수가 적어 아이가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면서 "성격이 온순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 이야기만 나오면 울며 하기 싫었다고 말해 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p> <p>그는 "다른 곳으로 전학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는 답변에 절망적인 심정"이라며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p> <p>한편 A중학교 관계자는 "우선 학교장 선 조치로 2학년 1명과 3학년 1명에 대해 출석정지 4일과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B군과 가해학생들 사이에 쟁점 부분이 있어 조만간 학교폭력심의회위원회를 열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p> <p>군산지역 한 중학교에서 장애우를 폭행하는 등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p> <p>13일 피해 학생의 부모에 따르면 군산 A중학교 2학년인 B모군은 같은 학교 C모군 등 동급생들과 3학년 선배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놀림과</p>		

	<p>폭행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p> <p>B군은 이들로부터 팔굽혀펴기 등 신체적 괴롭힘과 집에서 가지고 온 물을 억지로 마시도록 정신적 강요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또 가해 학생들은 B군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땐 ‘엄마·아빠에게 이른다’ 등으로 협박을 하거나 신체 일부를 때렸다는 게 B군 가족들의 설명이다.</p> <p>특히 문제는 피해 학생인 B군이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49 이하인 지적장애 2급이라는 것.</p> <p>여기에 B군은 언어장애 4급과 뇌전증(간질)으로 인해 현재도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상황이다.</p> <p>B군의 아버지는 “A중학교를 보낸 이유가 학생 수가 적어 아이가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면서 “성격이 온순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 이야기만 나오면 울며 하기 싫었다고 말해 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p> <p>그는 “다른 곳으로 전학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는 답변에 절망적인 심정”이라며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p> <p>한편 A중학교 관계자는 “우선 학교장 선 조치로 2학년 1명과 3학년 1명에 대해 출석정지 4일과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B군과 가해학생들 사이에 쟁점 부분이 있어 조만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 군산지역 한 중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폭행하는 등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학교에서의 조치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지도 사례	

제 목	[달그락달그락] 안전 거리두기 일지, 청소년들에게 물으니		
출 처	새전북신문	기사날짜	2020.11.18
기사주소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8803	작 성 자	임승현청소년
인권범위	- 자치와 참여의 권리<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달그락달그락] 안전 거리두기 일지, 청소년들에게 물으니</p> <p>■코로나 이후 학교생활 사수기</p> <p>기사 작성: 임승현 청소년 - 2020년 11월 18일 17시26분</p> <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여파로 상반기 학사일정의 대부분을 온라인[on-line] 수업, 격주등교 으로 보냈다. 초·중·고를 막론하고 혼란의 시기를 보낸 이후 정상등교 3주째를 접어드는 시점, 학교 내 방역에 대한 안전을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을까. 군산지역 학교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안전에 대한 각자의 기준에 따라 느끼는 학교 생활 만족도가 달랐다.</p> <p>△오늘 학교 방역을 공고문과 비교해보면 어땠는지?</p> <p>- 인문계 고등학생 C(여, 18세): 등교. 식사할 때 말곤 거리를 두지 않아 방역과 거리두기를 하나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교사들도 마스크를 벗고 수업하기도 한다.</p> <p>- 특성화고 고등학생 C(남, 18세): 뉴스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았다. 학교는 아무래도 공동체 집단이다 보니 더 방역이 강해야 하는데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 급식실 칸막이 없는 학교도 많고 의외로 방역이 철저하지 않은 거 같다. 현장을 점검해서 방역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여파로 상반기 학사일정의 대부분을 온라인[on-line] 수업, 격주등교 으로 보냈다. 초·중·고를 막론하고 혼란의 시기를 보낸 이후 정상등교 3주째를 접어드는 시점, <u>학교 내 방역에 대한 안전을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을까. 군산지역 학교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이야기</u>는 다음과 같았다. 안전에 대한 각자의 기준에 따라 느끼는 학교 생활 만족도가 달랐다.</p> <p>△오늘 학교 방역을 공고문과 비교해보면 어땠는지?</p> <p>- 인문계 고등학생 C(여, 18세): 등교. 식사할 때 말곤 거리를 두지 않아 방역과 거리두기를 하나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u>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교사들도 마스크를 벗고 수업하기도 한다.</u></p> <p>- 특성화고 고등학생 C(남, 18세): 뉴스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았다. 학교는 아무래도 공동체 집단이다 보니 더 방역이 강해야 하는데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u>학교 급식실 칸막이 없는 학교도 많고 의외로 방역이 철저하지 않은 거 같다.</u> 현장을 점검해서 방역지침을</p>		

	<p>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오늘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p> <p>- 인문계 고등학생 C(여, 18세): 안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군산지역 코로나 확진자 중에 학교에서 전파된 경우는 없지만 방역을 계속 지금처럼 해이하게 한다면 한 학교에서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그 학교는 초토화될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했다.</p> <p>- 특성화고 고등학생 C(남, 18세): 안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야 하는데 20명 모여 있는 공간에서 하루 절반을 수업받으니 힘들고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한 반에 학생 수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u>등교 인원이 2/3이지만 교실 안 밀집도</u>는 똑같다.</p> <p>△등하교 길 안전은?</p> <p>- 인문계 고등학생 C(여, 18세): 오늘 등교할 때 버스 타고 왔다. 그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등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하굣길은 더 심각한다.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와한 정류장에 몰리면서 등교할 때보다 더 붙어서 하교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u>학교 안 방역뿐만 아니라 등하교 등 대책이 필요하다.</u></p> <p>- 특성화고 고등학생 C(남, 18세): 학교 올 때 늘 버스를 타고 오는데 수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타는 공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딱딱딱 붙여서 오는 것이 불안했다. <u> 시내버스로 열을 쥌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지, 방문자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u> 현금으로 버스비를 내는 사람들은 위치가 추적되기 어렵다고 느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군산지역 하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교 내 방역에 대한 안전을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을까에 대한 조사</p> <p>- 학생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교사들도 마스크를 벗고 수업, 급식실 방역 문제, 학급 밀집도 문제, 등하교 시의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음</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부분 교육청이나 학교의 요구에 따라 방역 및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제 목	코로나19 확산에 전북도내 전 학교 밀집도 3분의 2로 격상		
출 처	전북도민일보	기사날짜	2020.11.22
기사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333	작 성 자	엄승현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에 관한 권리>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코로나19 확산에 전북도내 전 학교 밀집도 3분의 2로 격상</p> <p>△ 이취반 기자 △ 승인 2020.11.22 14:29 △ 댓글 0</p> <hr/> <p>도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따른 대책 24일부터 도내 과밀학교·300명 이상 학교 밀집도 3분의 2 준수 23일부터 도내 고3 원격 수업 가능, 전주시내 학교들 원격수업 결정</p>  <p>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북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지켜야 한다. 또한 수능을 10여일 앞두고 고3 학생들은 학교 자체 결정으로 23일부터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p> <p>전북도는 코로나19 확진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일 전주시와 익산시에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한데 이어 23일부터 도내 전역으로 거리두기 적용을 확대했다. 이에 맞춰 이날 도교육청도 새로 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p> <p>먼저 거리두기 기준이 상향된 전북도내 유·초·중·고등학교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거리두기 밀집도 3분의 2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밀집도 조치에서 제외돼 등원·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특수학교 역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사운영 조정이 가능한 학교들은 자율적 결정에 따라 23일부터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일 거리두기가 1.5로 상향된 전주·익산시내의 학교에는 관련 사항이 일찍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시내 학교는 총 259교(유115원, 초75교, 중40교, 고 29교), 익산시내 학교는 총 181교(유77원, 초60교, 중26교, 고18교)로 나타났다.</p> <p>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북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지켜야 한다. 또한 수능을 10여일 앞두고 고3 학생들은 학교 자체 결정으로 23일부터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p> <p>전북도는 코로나19 확진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일 전주시와 익산</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시에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한데 이어 23일부터 도내 전역으로 거리두기 적용을 확대했다. 이에 맞춰 이날 도교육청도 새로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p> <p>먼저 <u>거리두기 기준이 상향된 전북도내 유·초·중·고등학교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거리두기 밀집도 3분의 2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u>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밀집도 조치에서 제외돼 등원·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특수학교 역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사운영 조정이 가능한 학교들은 자율적 결정에 따라 23일부터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일 거리두기가 1.5로 상향된 전주·익산 시내의 학교에는 관련 사항이 일찍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시내 학교는 총 259교(유115원, 초75교, 중40교, 고 29교), 익산시내 학교는 총 181교(유77원, 초60교, 중26교, 고18교)로 나타났다.</p> <p>도내 고3 학생은 안전한 수능 운영을 위해 23일부터 전체 학생수 기준 없이 학교의 결정에 따라 원격수업이 가능하다. 다만 수능장 미운영 학교, 감독관 미파견 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교, 체육고교는 제외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수험생은 총1만7천156명이며, 이중 고3 학생은 1만3천829명이다. 20일 기준 격리 이동된 학생은 1명으로 나타났다.</p> <p>도내 고교들은 대체로 지난 20일 수험생 방역을 위해 원격수업을 결정했다. 전주시 호남제일고 관계자는 “오후에 도교육청을 통해 연락받고 교사들과 상의 후 본교도 3학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게 할 것”이라며 “관련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한편 입시 전문가들은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건강 관리 할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 한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 김모(50)씨는 “올해 수능은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외부 방문시 주기적으로 손소독제등을 사용하며,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p> <p>전북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수능 시험일 전까지 교직원과 학생들이 개인·집단 방역 지침을 지키며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밝혔다.</p>
	<p>- 거리두기 기준이 상향된 전북도내 유·초·중·고등학교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거리두기 밀집도 3분의 2를 반드시 지켜야 함</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승에 따른 조치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온라인 수업이 병행하도록 하여야 함 - 수능을 앞두고 수능장 관리 및 자가격리자의 수능 시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 전체 지역 1.5단계, 해당지역 300명 이상 학교 전교생 2/3만 등교/전북일보(2020.11.22.)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526</p> <p>교실을 지켜라 . . . 학교 밀집도 최소화/전북중앙(2020.11.22.)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477</p> <p>코로나19 3차 대유행 현실화, 군산시 전북 첫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익산 고심/전북일보(2020.11.26.)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928</p> <p>전북 거리두기 1.5단계 확대...3백 명 초과 학교 ‘2/3 등교’ /전주 KBS(2020.11.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4732&ref=A</p> <p>코로나19 유행 본격화..군산 거리두기 격상/전주 MBC(2020.11.26.) https://www.jmbc.co.kr/news/view/15222</p> <p>전주.익산 초중학교, 등교인원 2/3 이하로/JTV(2020.11.20.) https://jtv.co.kr/2012/?r=home&c=10/70&cat=JTV+8%EB%89%B4%EC%8A%A4&sort=d_regis+desc%2C+uid&orderby=desc&where=subject%7Ctag&keyword=%ED%95%99%EA%B5%90&uid=2142503</p>
타시도 사례	

제 목	전북도교육청,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출 처	새전북신문	기사날짜	2020.11.22
기사주소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9013	작 성 자	공현철
인권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전북도교육청,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p> <p>도내 유·초·중·고·특수 254교에 석면관리용품 보급</p> <p>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11월 22일 14시25분</p> <p>전북도교육청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나섰다.</p> <p>도교육청은 22일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석면관리용품 1,200개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이번 사업은 석면 보유 학교에서 석면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보급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p> <p>대상학교는 2021년도 석면보유(50㎡ 이상) 건축물 유 23개교, 초 106개교, 중 55개교, 고 67개교, 특수 3개교 등 총 254개교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석면관리용품 보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등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p> <p>전북도교육청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나섰다.</p> <p>도교육청은 22일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석면관리용품 1,200개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이번 사업은 <u>석면 보유 학교에서 석면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보급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u></p>		

	<p>대상학교는 2021년도 석면보유(50㎡ 이상) 건축물 유 23개교, 초 106개교, 중 55개교, 고 67개교, 특수 3개교 등 총 254개교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석면관리용품 보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등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도교육청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나섰음 - 석면 보유 학교에서 석면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보급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교직원 등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장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한 석면 관련 시설의 개선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전북교육청, 도내 학교에 혁신시제품(석면관리용품) 보급/전북일보 (2020.11.22.)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528</p>
타시도 사례	

제 목	도내 청소년 자살 방지 관심-노력 주문		
출 처	전북중앙	기사날짜	2020.11.23
기사주소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602	작 성 자	박정미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div> <div>도내 청소년 자살 방지 관심-노력 주문</div> <div> 박정미 승인 2020.11.23 17:46 댓글 0 </div> </div> <div> <p>김기영도의원 5분 발언</p> <p>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익산3)이 “청소년들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통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김 의원은 23일 제377회 2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16년 이후 33명의 전북지역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중 2019년에는 무려 12명의 학생이 세상을 등졌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이 기간 전북지역 학생 자살 이유는 가정불화, 이성, 우울증, 진로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p> <p>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위험군 조사와 관리 등 학교의 보호가 약해졌다”면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인터넷과 SNS 등 미디어에 하루 6시간 이상 과몰입하는 등 더욱 열악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p> <p>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이며, 학교가 학생들을 자살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p> <p>김 의원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응원에 말을 전하며, 모든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p> <p>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익산3)이 “<u>청소년들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통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u>”고 주장했다.</p> <p>김 의원은 23일 제377회 2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16년 이후 33명의 전북지역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중 2019년에는 무려 12명의 학생이 세상을 등졌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이 기간 <u>전북지역 학생 자살 이유는 가정불화, 이성, 우울증, 진로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u></p> </div>		

	<p>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위험군 조사와 관리 등 학교의 보호가 약해졌다” 면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인터넷과 SNS 등 미디어에 하루 6시간 이상 과몰입하는 등 더욱 염려스러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p> <p>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이며, 학교가 학생들을 자살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 을 주문했다.</p> <p>김 의원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응원에 말을 전하며, 모든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통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전북지역 학생 자살 이유는 가정불화, 이성, 우울증, 진로 등이 원인임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Wee) 클래스를 통하여 학교폭력 및 자살·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위기학생과 학업중단, 따돌림,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부적응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심리검사·외부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확대 설치가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김기영 도의원 “어른들 관심으로 청소년 자살 미연에 방지해야” /전북도민일보(2020.11.23.)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510</p> <p>김기영 도의원, 청소년 자살률 심각 대책마련 필요/전북일보(2020.11.23.)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642</p> <p>김기영 도의원 “청소년 자살 미연에 방지해야”/전민일보(2020.11.23.)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04</p>
타시도 사례	

제 목	전북교육청, ‘안전교육 활성화 찾아가는 컨설팅’ 27일부터 추진		
출 처	전라일보	기사날짜	2020.11.25
기사주소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613	작 성 자	정해은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전북교육청, ‘안전교육 활성화 찾아가는 컨설팅’ 27일부터 추진</p> <p>정해은 기자 승인 2020.11.25 5면</p> <p>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 + - ☒ ☒ 인제하거</p> <p>전북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실시한다.</p> <p>이번 컨설팅은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지원으로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로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안전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p> <p>지역별 일정은 오는 27일 부안·고창을 시작으로 30일 진안·무주, 12월 4일 임실·남원, 9일 익산·군산, 14일 전주·순창, 17일 완주·장수, 18일 김제·정읍 순이다.</p> <p>주요 컨설팅 내용은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학생안전 교직원 교육(재원배분) △안전교육 실적 입력 상황 확인 △대규모행사 사전 안전점검 △원스톱 안전점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학생재난안전 인식도 진단 결과 나눔 등이다.</p> <p>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펼치는 한편 재난에 대한 학생 대응능력 강화와 안전교육 보완하기 위해 학생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도 진행했다.</p> <p>전북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u>‘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실시한다.</u></p> <p>이번 컨설팅은 <u>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지원으로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로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u></p>		

	<p>안전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p> <p>지역별 일정은 오는 27일 부안·고창을 시작으로 30일 진안·무주, 12월 4일 임실·남원, 9일 익산·군산, 14일 전주·순창, 17일 완주·장수, 18일 김제·정읍 순이다.</p> <p>주요 컨설팅 내용은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학생안전 교직원 교육(재원배분) △안전교육 실적 입력 상황 확인 △대규모행사 사전 안전점검 △원스톱 안전점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학생재난안전 인식도 진단 결과 나눔 등이다.</p> <p>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펼치는 한편 재난에 대한 학생 대응능력 강화와 안전교육 보완하기 위해 학생재난안전 인식도 조사도 진행했다.</p> <p>자연재난·사회재난·생활안전 분야 등의 출제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보고, 인식이 저조한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학생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666개소에 카메라,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교육청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 라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 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실시하기로 함 -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지원으로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로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안전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함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학생 재난안전 인식 조사 등 다양한 조사와 점검을 통하여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또한 컨설팅을 통하여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진단 조언이 뒤따라야 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도교육청, 안전교육 활성화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전북중앙(2020.11.25.)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807</p> <p>전북도교육청, 안전교육 활성화 찾아가는 컨설팅/전북도민일보 (2020.11.25.)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901</p>
타시도 사례	

* 11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일지(타시도)

제 목	“학교 둘레, 아침 8시까지 차를 옮겨주세요“		
출 처	오마이뉴스	기사날짜	2020.11.02
기사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9340	작 성 자	윤성효
인권범위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안전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학교 둘레, 아침 8시까지 차를 옮겨주세요" 진주여성민우회-들말주민모임, 어린이보호구역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선전전</p> <p>20.11.02 15:44 · 최종 업데이트 20.11.02 15:44 · 윤성효(cjnews) [v]</p> <p>좋아요 6개 + 크게 - 작게 인제 URL을이기 스크랩</p> <p>원고료로 응원하기</p>  <p>▲ "아침 8시 차를 옮겨주세요"</p> <p>© 진주여성민우회</p> <p>관련사진보기</p> <p>“학교 둘레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p> <p>진주여성민우회와 '들말주민모임'은 2~4일 사이 오전 8~9시 서이 신진초등학교와 제일중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침 8시 차를 옮겨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선전활동을 벌인다.</p> <p>이 활동은 '어린이보호구역 차없는 거리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경남도 사회혁신참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p> <p>“학교 둘레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p> <p>진주여성민우회와 '들말주민모임'은 2~4일 사이 오전 8~9시 서이 신진초등학교와 제일중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침 8시 차를 옮겨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선전활동을 벌인다.</p>		

	<p>겨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선전활동을 벌인다.</p> <p>이 활동은 <u>‘어린이보호구역 차없는 거리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경남도 사회혁신참여 사업으로 진행</u>되고 있다.</p> <p>진주여성민우회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 둘레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u>“등·하교 시간 주차 문제가 심각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u>이 있어 왔다“고 했다.</p> <p>이어 “들말주민모임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차없는 거리 조성의 필요성을 느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p> <p>이번 활동은 진주경찰서 진양호 지구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어린이보호구역 차없는 거리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경남도 사회혁신참여 사업으로 진행</p> <p>- 등·하교 시간 주차 문제가 심각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전북 교육청에서 스쿨존 안전을 위하여 기관과의 협약 및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등하교 길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p> <p>-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시민단체와 학부모가 등하교 시간에만 이라도 스쿨존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제 목	인권위 “등교 뒤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인권 침해”		
출 처	한겨레	기사날짜	2020.11.04
기사주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68490.html	작 성 자	김윤주
인권범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사생활의 자유, 정보에 대한 권리>		
기사내용	<p>인권위 “등교 뒤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인권 침해”</p> <p>“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는 헌법에 위배” 해당 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p>  <p>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p> <p>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려 시간에 수거해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ㄱ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p> <p>인권위는 4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려 시간에 수거해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ㄱ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p> <p>앞서 해당 학교의 한 학생은 학교가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학생생활규정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p> <p>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p> <p>인권위는 4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려 시간에 수거해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ㄱ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p> <p>앞서 해당 학교의 한 학생은 학교가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학생생활규정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p>		



	<p>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희망자에 한해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 금지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 쪽이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때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그 내용은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따른 기본권 보장 원칙에 반해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p> <p>인권위는 올해 들어 ㄴ중학교장, ㄷ중학교장에게도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음</p> <p>- 도내 각급 학교 규정과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학교에서 휴대폰 일괄수거?...인권위, “학생 인권침해” /조선일보 (2020.11.0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04/4OHVWAUCUFHYFCPNC6WCHDX4BM/</p> <p>인권위 “'학교서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는 기본권 침해” /MBC (2020.11.04.)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62558_32633.html</p> <p>교내 휴대폰 금지...고치는 등 마는 등/경향신문(2020.11.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12053005&code=940401#csidx00ff184c8273a3b8931c2bde0fa8d8b</p> <p>“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기본권 침해...전수조사 필요” /KBS(2020.11.1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6447&ref=A</p>
타시도 사례	

제 목	“택시 타고 교문 앞 내리면 벌점” 이게 요즘 생활평점제라고?		
출 처	중앙일보	기사날짜	2020.11.16
기사주소	https://news.joins.com/article/23921510	작 성 자	이병준
인권범위	- 자치와 참여의 권리<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p>"택시 타고 교문 앞 내리면 벌점" 이게 요즘 생활평점제라고?</p> <p>[중앙일보] 입력 2020.11.16 14:42 수정 2020.11.16 14:53</p>  <p>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생활평점제’의 상벌점 기준이 모호하고 시대착오적인 경우가 많으며 개선을 촉구했다.</p> <p>이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생활평점제 운영현황을 공개하며 이처럼 밝혔다.</p> <p>생활평점제는 학생 체벌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2009년 일선 학교들이 도입한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중·고등학교 711개 중 553개(77.8%)에서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다.</p> <p>일부 학교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고 기준이 모호한 상벌점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생 신분’에 어긋난 겉옷과 양말이나 ‘살구색·검정색이 아닌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다른 속옷’을 입은 경우 벌점을 주기도 했다. 한 학교는 택시를 타고 교문 근처에서 내리면 벌점을 부과했다.</p> <p>이 의원은 “(주로) 용의 복장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히 강하다”며 “문제는 또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성인용 가방을 멘 경우 벌점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는데, ‘성인용 가방’의 기준이 있느냐는</p>		

	<p>것”이라고 반문했다. 또 “‘학생용이 아닌 숙녀화 착용’의 경우 별점이 부여되기도 했는데, ‘숙녀화 착용’은 어떤 것이냐는 의문이 든다”라고도 했다.</p> <p>현행 생활평점제에 성차별적 요소도 담겨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학생의 경우 속옷이나 이런 규정이 없는데, 여학생들에게는 교복이 비치는 색깔의 속옷 등 (차별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특히 여중·여고는 화장에 대해 중복 별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학교도 있다”며 “교사의 주관적 기준 등에 따라 별점을 중복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p> <p>이 의원은 “A교사는 이 부분을 문제로 생각해서 별점을 주고 B교사는 이 부분을 문제가 아니라서 별점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며 “또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학교와 우리 학교하고 별점 기준이 다를 때 굳이 내가 학교를 이곳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 행위를 했을 때 별점을 받는 것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p> <p>그는 “학생인권조례 일부에 12조 정도에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돼 있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복장 및 두발 및 용모에 대하여 규제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복장에 대해서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놨다. 이를 근거로 지금 학교 내부에서 (관련 규정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이 의원은 그러면서 “통제에 대한 학습은 현대 교육과 거리가 있다”며 “동기부여 형식으로 상점제만 유지하는 것이 옳다”, “학생자치회 등으로 생활평점제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이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조례가 추가입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생활평점제’의 상별점 기준이 모호하고 시대착오적인 경우가 많으며 개선을 촉구 - 일부 학교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고 기준이 모호한 상별점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평점제 및 각 학교의 규정을 점검하여 표현이 모호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p>시선집중] “옷 색깔·스킨십에 별점? 학생 인권침해하는 생활평점제 없애야”/MBC(2020.11.16.)</p> <p>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079796</p>
타시도 사례	

제 목	10곳 중 5곳은 거부... 부모 없인 정신과 못 가는 청소년들		
출 처	오마이뉴스	기사날짜	2020.11.08
기사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0481	작 성 자	김보성
인권범위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10곳 중 5곳은 거부... 부모 없인 정신과 못 가는 청소년들</p> <p>아수나로 부산지부 조사 결과 '성인만 진료' 응답도... "진료권리 제한은 명백한 차별"</p> <p>20.11.06 10:48 최종 업데이트 20.11.06 10:59 김보성(kimbsv1) </p> <p>▶ 종아로 186개 +크게 -작게 인쇄 URL을이기 ☆스크랩</p> <p>▶ 본문듣기 ▶ 원고료로 응원하기</p> <p>▶ JTBC도리마 "부부의 세계" 한 장면. 극중 중학생인 아들 이준영(전진서)이 엄마 지선우(김희애)를 따라 정신과 상담을 받다 돌키는 순간이다. 지선우는 아들에게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왜 여기서 상담을 받고 있어"라며 혼낸다.</p> <p>© JTBC</p> <p>출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상담을 받으려는 부산지역 청소년 상담수가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권단체가 지역 내 정신과(의원급)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가까운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p> <p>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부산지역의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접근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지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진행했다.</p> <p>혼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상담을 받으려는 부산지역 청소년 상담수가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권단체가 지역 내 정신과(의원급)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가까운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p> <p>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부산지역의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접근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지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진행했다.</p> <p>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병원 99곳 중 부모 동의나 동행 없이 진료·처방이 가능한 곳은 23곳(21%)에 불과했다. '진료만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곳은 12곳(11%)이었다.</p> <p>절반에 가까운 50곳(46%)은 보호자 동의·동행 없는 청소년 상담과 처방 모두 불가능했다. 나머지 14곳(13%)은 '성인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p>		

	<p>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29.4%, 중학생의 26.9%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도 청소년이 홀로 병원을 찾아 상담 치료 등을 받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p> <p>보건복지부 “접수 거부는 위법 소지 있지만...”</p> <p>진료 접수를 거부한 병원 측은 대부분 “부모님이 같이 와야 상담과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한 병원은 “의료법에 정신과 미성년자 혼자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p> <p>하지만 이는 사실과 정반대다. 오히려 의료법 등의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료법(15조 1항)과 보건의료기본법(10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나이 등으로 건강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정신과라도 청소년의 진료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다.</p> <p>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진료나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도 “특정한 의약품 처방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행을 요청하는 것은 진료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p> <p>아수나로는 “많은 청소년이 온라인 게시판, 질문·답변 서비스 등에서 청소년도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다. 그리고 거부당한 경험담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수나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에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p> <p>아수나로 부산지부 김찬 활동가는 “‘미성숙하다’고 치부해 청소년에게 부모 동의를 요구하고, 진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p>- 부산지역 청소년 인권단체가 지역 내 정신과(의원급)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가까운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됨</p>
시사점 및 대안 제시	<p>-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 대한 정신과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음</p> <p>- 전라북도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함</p>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지도 사례	

제 목	초·중학생들도 탈 수 있는 서울시 ‘새싹 따릉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재떨이’ 달린 쓰레기통 없앤 황성균...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였죠”		
출 처	경향신문	기사날짜	2020.11.19
기사주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91525001&code=940100	작 성 자	오경민
인권범위	- 자치와 참여의 권리<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기사내용	초·중학생들도 탈 수 있는 서울시 ‘새싹 따릉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재떨이’ 달린 쓰레기통 없앤 황성균...“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였죠”		
	오경민 기자 skim@kyunghyang.com 2020-11-19 15:25 입력 2020-11-19 20:41 수정		
	오늘은 ‘세계아동의날’... “정책 결정 때 아동 참여 놀려야”		
	<div></div> <p>한 청소년의 제안으로 11월 말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하는 아동용 ‘새싹 따릉이’(왼쪽 사진). 강원 황성균이 한 아동의 제안으로 없앤 놀이터 쓰레기통의 재떨이(오른쪽). 서울시 굿네이버스 제공</p> <p>사춘 동생들과 자전거를 타려던 이근상군(17)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했다. 어른 신체를 기준으로 자전거 구조를 만들어 안정을 낮춰도 어린이가 타기 어려웠다. 결국 사춘 동생들과 따릉이를 타지 못했다. 이군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시 아동정책결정기구에 참여해 아동용 따릉이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군의 의견을 반영했다. 크기와 무게를 줄여 초·중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새싹 따릉이’가 오는 30일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p> <p>강원 황성균에 사는 백지우양(13)은 금연구역인 어린이 놀이터에 재떨이가 달린 쓰레기통이 있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 때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백양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회의를 통해 놀이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 군청에 가서 부군수도 만났다. 몇 달 뒤 놀이터에서 재떨이가 달린 쓰레기통이 사라졌다. 금연구역 안내표지판도 추가로 설치됐다. 백양은 “설마 진짜 바뀌겠어” 했는데 정말 바뀌어서 더 열심히 제안하고 싶어졌다”고 말했다.</p> <p>사춘 동생들과 자전거를 타려던 이근상군(17)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했다. 어른 신체를 기준으로 자전거 구조를 만들어 안정을 낮춰도 어린이가 타기 어려웠다. 결국 사춘 동생들과 따릉이를 타지 못했다. 이군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시 아동정책결정기구에 참여해 아동용 따릉이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군의 의견을 반영했다. 크기와 무게를 줄여 초·중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새</p>		

‘짝 따릉이’가 오는 30일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강원 횡성군에 사는 백지우양(13)은 금연구역인 어린이 놀이터에 재떨이가 달린 쓰레기통이 있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 때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백양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회의를 통해 놀이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 군청에 가서 부군수도 만났다. 몇 달 뒤 놀이터에서 재떨이가 달린 쓰레기통이 사라졌다. 금연구역 안내표지판도 추가로 설치됐다. 백양은 “‘설마 진짜 바뀌겠어’ 했는데 정말 바뀌어서 더 열심히 제안하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이들 두 사례는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체험한 불편함을 바탕으로 의견을 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경우이다. 20일 ‘세계아동의날’을 앞두고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지금보다 더 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989년 11월20일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과 함께 아동의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권리로 명시했다. 협약 제12조에 따르면 비준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아동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국내법 체계 안에 마련해야 한다. 한국도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아동이 목소리를 낼 환경은 여전히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국제구호개발단체인 굿네이버스가 발표한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보고서를 보면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9.1%에 불과하다.

박정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아이들 입장에서 얘기할 창구가 없다”며 “아동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연관된 정책에 당사자로서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관련 조례에도 아동의 의견 수렴을 명시한 경우가 드물다. 굿네이버스가 작성한 ‘2020년 전국 아동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아동의 안전과 관련한 조례에 ‘아동 의견 수렴’을 명시한 지자체는 17개뿐이다. 서울은 5개 자치구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 어린이 안전 조례 등에서 아동 의견 수렴을 언급했다. 강원·경북·경남·제주는 조례에서 아동 의견 수렴을 언급한 경우가 없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국 정부에 아동 참여 및 아동영향평가 제도를 확장하고, 아동의 의사 표현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p>아동·청소년들은 일상에서 자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고등학생 김모양(16)은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학교에 제출하고 하교할 때 돌려받는다. 하루 종일 휴대전화 없이 학교에서 지내다 보면 학생들끼리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업 단축이나 시간표 변동을 모르고 헤매는 경우가 있었다. 김양은 “(자녀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에 대해) 학부모의 반대가 심하다고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규칙인 만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p> <p>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경기북부지부에 참여한 나진우군(14)도 “직접 보고 겪기 때문에 아동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면 현실적인 아동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아동들이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건 고정관념이다. 우리도 충분히 생각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어른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체험한 불편함을 바탕으로 의견을 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냄 - 20일 ‘세계아동의날’을 앞두고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지금보다 더 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음. 1989년 11월20일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과 함께 아동의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권리로 명시하고 있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에서는 교육정책 및 제도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참여형 제도를 통하여 현장에 천착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제 목	아동·청소년 ‘코로나 블루’ 주의보		
출 처	경향신문	기사날짜	2020.11.23
기사주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31605001&code=940401	작 성 자	최민지
인권범위	- 복지에 관한 권리<건강에 관한 권리>		
기사내용	<p>아동·청소년 ‘코로나 블루’ 주의보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p> <p>   </p> <p>입력: 2020.11</p> <p>인권위 아동인권 보고대회...아이가 70%가 “감염병으로 불안” 고등학생 스트레스 가장 커...식습관 등 불규칙 건강도 악영향</p> <p>인천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A군(10)은 최근 해외에서 귀국한 이모에게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해서다. A군은 개인위생에도 열심이다. 손 소독제를 들고 다니며 수시로 손을 소독한다. 요즘 부쩍 ‘심심하다’는 말도 많이 한다. 방과 후에 친구들과 마음 편히 뛰어놀 수도 없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가 가끔 할 수 있는 바람씨의 전부이다.</p> <p>코로나 블루(우울감)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 10명 중 7명은 감염병 유행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김지혜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아동의날(11월20일) 주간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에서 “아동 800여명을 설문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p> <p>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최근 1년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41.8%, 28.1%였다. 건축물 붕괴나 화재, 가스 폭발 등 다른 사회적 재난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아동이 10%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더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34.5%와 8.7%로 10명 중 4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 32.4%의 응답자는 “코로나19 이후 더 우울하다”고 답했다.</p> <p>인천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A군(10)은 최근 해외에서 귀국한 이모에게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해서다. A군은 개인위생에도 열심이다. 손 소독제를 들고 다니며 수시로 손을 소독한다. 요즘 부쩍 ‘심심하다’는 말도 많이 한다. 방과 후에 친구들과 마음 편히 뛰어놀 수도 없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가 가끔 할 수 있는 바람씨의 전부이다.</p> <p>코로나 블루(우울감)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 10명 중 7명은 감염병 유행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김지혜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아동의날(11월20일) 주간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에서 “아동 800여명을 설문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p> <p>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최근 1년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41.8%, 28.1%였다. 건축물 붕괴나 화재, 가스 폭발 등 다른 사회적 재난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아동이 10%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p>		

	<p>우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더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는다는 질문에는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34.5%와 8.7%로 10명 중 4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 32.4%의 응답자는 “코로나19 이후 더 우울하다”고 답했다.</p> <p>김 교수는 “초·중·고 중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며 “입시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상황이 입시에 지장을 줄까 우려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p> <p>코로나19는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이후 라면 같은 정크푸드를 더 많이 먹게 됐다는 아동은 전체의 58.5%에 달했다. 스스로 건강이 나빠졌음을 느낀다는 응답도 52.8%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영찬군(17)은 “주변 친구들을 보면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 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다”며 “새벽 2~3시까지 스마트폰을 만지다 오전 8시30분에 일어나 출석체크만 한 뒤, 다시 자다가 오후에야 밀린 온라인 강의를 듣는 식”이라고 말했다.</p> <p>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았다는 응답도 다소 늘었다. 코로나19 이전 체벌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응답이 719명(89.7%)이었지만 이후에는 670명(83.5%)만 그렇다고 답했다.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부모의 양육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p>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블루(우울감)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동 10명 중 7명은 감염병 유행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최근 1년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41.8%, 28.1%였음
시사점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로 학교 수업이 현장수업과 온라인 수업으로 병행되고 있고 감염병 유행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 - 전라북도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타시도 사례	